

# 주요국 예산안 2018

2018. 3



---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김우현 부연구위원  
우진희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강민채 · 김은숙 · 장준희 (국제기구)  
이 정 은 (일 본)  
엄 동 욱 (독 일)  
하에스더 (프 랑 스)  
김 선 미 (영 국)  
김 진 아 (캐 나 다)  
황 보 경 (호 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PART 1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	3
1. 세계 거시경제전망 .....	3
가. 세계 경제전망 .....	3
나.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	8
2. 세계 재정전망 .....	11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	11
나. 주요 국가별 재정전망 .....	13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 .....	16
가. 통화정책 .....	16
나. 재정정책 .....	17
II. 주요국 재정운동 방향 및 재정지표 .....	19
1. 일본(FY2018: 2018. 4 ~ 2019. 3) .....	19
2. 독일(FY2018: 2018. 1 ~ 2018. 12) .....	21
3. 프랑스(FY2018: 2018. 1 ~ 2018. 12) .....	23
4. 영국(FY2018-19: 2018. 4 ~ 2019. 3) .....	25
5. 캐나다(FY2018-19: 2018. 4 ~ 2019. 3) .....	26
6. 호주(FY2017-18: 2017. 7 ~ 2018. 6) .....	28

I. 일 본 .....	33
1. 경제 및 재정전망 .....	36
가. 경제전망 .....	36
나. 재정전망 .....	38
2. 예산기조 .....	39
3. 예산안 내용 .....	41
가. 세입 .....	41
나. 세출 .....	44
4. 주요 재정정책 .....	48
가. 경제성장 .....	48
나. 재정건전화 .....	52
II. 독 일 .....	57
1. 경제 및 재정전망 .....	60
가. 경제전망 .....	60
나. 재정전망 .....	62
2. 예산기조 .....	63
3. 예산안 .....	65
가. 재정수입 .....	65
나. 재정지출 .....	66
4. 주요 재정정책 .....	69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	69
나. 재정건전화 .....	70
다. 에너지 정책 .....	71
라. 지방재정 지원 .....	72

<b>III. 프랑스</b> .....	73
1. 경제 및 재정전망 .....	76
가. 경제전망 .....	76
나. 재정전망 .....	77
2. 예산기조 .....	80
3. 예산안 내용(PLF 2018) .....	81
가. 세입 .....	81
나. 세출 .....	84
4. 주요 재정정책 .....	86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86
나. 재정건전화 .....	88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90
<b>IV. 영국</b> .....	93
1. 경제 및 재정전망 .....	96
가. 경제전망 .....	96
나. 재정전망 .....	97
2. 예산기조 .....	100
3. 예산안 내용 .....	102
가. 세입 .....	102
나. 세출 .....	106
4. 주요 재정정책 .....	112
가. 경제성장 .....	112
나. 재정건전화 .....	115
다. 기타 .....	116

<b>V. 캐나다</b> .....	119
1. 경제 및 재정전망 .....	122
가. 경제전망 .....	122
나. 재정전망 .....	123
2. 예산기조 .....	125
3. 예산안 내용 .....	125
가. 세입 .....	125
나. 세출 .....	128
4. 주요 재정정책 .....	131
가. 평등과 성장 .....	131
나. 재정건전화 .....	134
<b>VI. 호주</b> .....	137
1. 경제 및 재정전망 .....	140
가. 경제전망 .....	140
나. 재정전망 .....	141
2. 예산기조 .....	144
3. 예산안 내용 .....	147
가. 세입 .....	147
나. 세출 .....	149
4. 주요 재정정책 .....	153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153
나. 복지 .....	154
다. 재정건전화 .....	155

# 표 목차

## PART 1 총론

〈표 I-1〉 세계 경제전망 .....	3
〈표 I-2〉 WEO 세계 경제전망(GDP 성장률) .....	4
〈표 I-3〉 OECD의 경제전망 .....	5
〈표 I-4〉 EU의 경제전망 .....	7
〈표 I-5〉 OECD의 주요국 경제전망 .....	9
〈표 I-8〉 EU의 재정전망 .....	12
〈표 I-9〉 OECD의 주요국 재정전망 .....	14
〈표 I-10〉 EU의 국가별 재정전망 .....	15
〈표 II-1〉 일본 경제전망 .....	19
〈표 II-2〉 일본 재정전망 .....	19
〈표 II-3〉 독일 경제전망 .....	21
〈표 II-4〉 독일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	21
〈표 II-5〉 프랑스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	23
〈표 II-6〉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	25
〈표 II-7〉 캐나다 경제전망 .....	26
〈표 II-8〉 캐나다 재정전망 .....	27
〈표 II-9〉 호주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	28
〈표 II-10〉 호주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	29

##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	37
〈표 I-2〉 FY2018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	38
〈표 I-3〉 FY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	42
〈표 I-4〉 FY2018 조세 및 인지도입 .....	43
〈표 I-5〉 FY2018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	45
〈표 II-1〉 경제전망 .....	60
〈표 II-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	61
〈표 II-3〉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	62
〈표 II-4〉 FY2017 잠정결산 .....	64
〈표 II-5〉 항목별 재정수입 .....	65
〈표 II-6〉 부문별 재정지출 .....	67
〈표 II-7〉 2016-2021 분야별 주요 연방지출 .....	68
〈표 II-8〉 재정전망 .....	70
〈표 II-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	72
〈표 III-1〉 거시경제전망 .....	76
〈표 III-2〉 FY2018 예산안 .....	78
〈표 III-3〉 2017-2022년 재정지표 전망 .....	78
〈표 III-4〉 2017-2022년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전망 .....	79
〈표 III-5〉 FY2018 세입전망 .....	82
〈표 III-6〉 2018년 주요 세계개편안 .....	83
〈표 III-7〉 중장기 세계개편안 .....	83
〈표 III-8〉 2018 미션별 세출 내역 .....	85
〈표 III-9〉 법인세 인하 계획 .....	87
〈표 III-10〉 정부지출 기준 .....	89

〈표 III-11〉 사회보장부문 예산 수지 전망 .....	90
〈표 III-12〉 2018년의 의료보험지출 절감 계획 .....	92
〈표 IV-1〉 주요 경제전망 .....	96
〈표 IV-2〉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	96
〈표 IV-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	98
〈표 IV-4〉 2017 가을예산안 정책효과 .....	102
〈표 IV-5〉 2017 가을예산안 세입정책 효과 .....	103
〈표 IV-6〉 경상수입 전망 .....	105
〈표 IV-7〉 2017 가을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	107
〈표 IV-8〉 총관리지출 전망 .....	110
〈표 IV-9〉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투자 계획 .....	112
〈표 IV-10〉 복지지출 상한 .....	116
〈표 V-1〉 캐나다 경제전망 .....	122
〈표 V-2〉 캐나다 재정전망 .....	124
〈표 V-3〉 2017년 FES 이후 조정내역 .....	124
〈표 V-4〉 세입전망 .....	127
〈표 V-5〉 프로그램 지출 전망 .....	130
〈표 V-6〉 FY2018 예산안에서의 부문별 투자 .....	133
〈표 V-7〉 FY2018-19 시장채무(Market Debt) .....	135
〈표 V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	140
〈표 V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	141
〈표 VI-3〉 주요 정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	145
〈표 VI-4〉 재정수입 전망 .....	148
〈표 VI-5〉 FY2017-18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	148
〈표 VI-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	150
〈표 VI-7〉 FY2017-18 예산안 기능별지출 .....	151

〈표 VI-8〉 FY2017-18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	152
〈표 VI-9〉 주요 절감 조치(Major savings) .....	157

# 그림 목차

## PART 1 총론

[그림 I-1] 유로지역의 실질GDP 전망 ..... 6

##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일반회계세출 주요경비 추이 ..... 46

[그림 I-2]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의 구성 ..... 46

[그림 II-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 63

[그림 II-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 64

[그림 II-3] 2018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 68

[그림 III-1] 조정가능 지출증가율의 추이 및 전망 ..... 77

[그림 III-2] 2007년 이후 채무 추이 및 전망 ..... 80

[그림 III-3] 실질지출증가율의 추이 및 전망 ..... 88

[그림 III-4]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 91

[그림 IV-1] 공공부문 순채무(PSND) ..... 99

[그림 IV-2] FY2018-19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 106

[그림 IV-3]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 109

[그림 IV-4] FY2018-19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TME: 8,090억파운드) ..... 111

[그림 IV-5] 공공부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	116
[그림 V-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 및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	134
[그림 VI-1]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	143
[그림 VI-2]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	143
[그림 VI-3] FY2017-18 재정수입 구성 .....	147
[그림 VI-4] FY2017-18 재정지출 구성 .....	150
[그림 VI-5] 호주 인프라 투자 계획 .....	153
[그림 VI-6] GDP 대비 지출 및 수입 추이 .....	156

제 1 부  
총 론





#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 1 세계 거시경제전망

### 가. 세계 경제전망

〈표 I-1〉 세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실질GDP(IMF 전망)				실질GDP(OECD 전망)				실질GDP(EU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미국	1.5	2.3	2.7	2.5	1.5	2.2	2.5	2.1	1.5	2.2	2.3	2.1
유로지역	1.8	2.4	2.2	2.0	1.8	2.4	2.1	1.9	1.8	2.2	2.1	1.9
일본	0.9	1.8	1.2	0.9	1.0	1.5	1.2	1.0	1.0	1.6	1.2	1.0
중국	6.7	6.8	6.6	6.4	6.7	6.8	6.6	6.4	6.7	6.8	6.5	6.2
세계	3.2	3.7	3.9	3.9	3.1	3.6	3.7	3.6	3.2	3.5	3.7	3.7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 (IMF 전망<sup>1)</sup>) 2017년 경제성장세가 2018-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2%p 개선된 3.9%로 전망
  - (주된 요인) ① 양호한 세계 금융여건과 시장심리에 따른 투자 촉진 ② 세계개편안 등을 통한 미국의 경제성장과 캐나다·멕시코 등의 무역상대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수요 파급효과를 고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의 개선은 양호한 세계 거시경제의 영향. 2018-19년 약 2%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주로 기여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 (위험) 단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상방으로 작용하고 금융시장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하방으로 작용하여 위험이 균형적이거나, 중기는 금융시장 취약성의 누적, 보호주의 정책, 비경제적 요인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
  - (단기) 현재까지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WEO시나리오에 비해 보다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 조정으로 미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 (중기) 금융완화가 유지될 경우 취약성이 누적될 수 있으며,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과 지정학적 긴장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시장 취약성 누적) 금융 조건의 완화 기조가 중기에도 유지되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저신용 기업 혹은 국가차입자 등에 투자하게 되어 취약성 증가
    - (보호주의 정책) NAFTA와 영국과 EU 간의 경제협정 등이 재협상 중이므로 무역장벽 및 규제 재설정으로 대다수 국가들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
    - (비경제적 요인들) 지정학적 긴장(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정치적 불확실성, 최근의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이민 증가로 인한 갈등 증가

〈표 1-2〉 WEO 세계 경제전망(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2017년 4월 WEO		2017년 7월 WEO Update		2017년 10월 WEO		2018년 1월 WEO Update		
	'17	'18	'17	'18	'17	'18	'16	'17	'18
<b>세계 경제</b>	3.5	3.6	3.5	3.6	3.6	3.7	3.7	3.9	3.9
<b>선진국</b>	2.0	2.0	2.0	1.9	2.2	2.0	2.3	2.3	2.2
미국	2.3	2.5	2.1	2.1	2.2	2.3	2.3	2.7	2.5
유로존	1.7	1.6	1.9	1.7	2.1	1.9	2.4	2.2	2.0
일본	1.2	0.6	1.3	0.6	1.5	0.7	1.8	1.2	0.9
그 외 선진국 <sup>1)</sup>	2.3	2.4	2.3	2.4	2.6	2.5	2.7	2.6	2.6
<b>신흥국 및 개도국</b>	4.5	4.8	4.6	4.8	4.6	4.9	4.7	4.9	5.0
아시아	6.4	6.4	6.5	6.5	6.5	6.5	6.5	6.5	6.6
중국	6.6	6.2	6.7	6.4	6.8	6.5	6.8	6.6	6.4
인도 <sup>2)</sup>	7.2	7.7	7.2	7.7	6.7	7.4	6.7	7.4	7.8
아세안-5 <sup>3)</sup>	5.0	5.2	5.1	5.2	5.2	5.2	5.3	5.3	5.3

주: 1)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2) 실적/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기초, 2011년부터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한 시장가격 기준 GDP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Update July 2017, October 2017, Update January 2018 편집

- (OECD 전망<sup>2)</sup>) 경기부양책, 고용 호조, 투자 및 세계교역 증대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일 수 있음
  - (경제성장률)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6%, 2018년 3.7%, 2019년 3.6%로 전망
    - \* 2017년 9월 중간전망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7년 3.5%, 2018년 3.7%로 전망
    - 하지만, 투자, 무역, 생산성, 임금 등에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악영향이 남아 있는 상황
  - (실업률)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17년 5.8%, '18년 5.5%, '19년 5.3%로 점차 하락할 전망
  - (물가상승률)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신흥국에서 소비자물가 인상 압박이 완화될 전망
  - (세계무역) 세계무역 성장은 '16년 상반기 이후 반등이 예상되나, 무역결합도(trade intensity)<sup>3)</sup>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전망
  - (주요 리스크) 중국의 예상보다 가파른 경기둔화 가능성, 금융 취약성(높은 부채, 부채와 수입 간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sup>4)</sup>) 등이 주요 리스크

〈표 I-3〉 OECD의 경제전망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b>실질GDP 성장률</b>					
세계	3.3	3.1	3.6	3.7	3.6
OECD	2.4	1.8	2.4	2.4	2.1
Non-OECD	4.0	4.1	4.6	4.9	4.8
<b>실업률</b>	6.8	6.3	5.8	5.5	5.3
<b>물가상승률</b>	0.8	1.1	1.9	2.1	2.2
<b>실질 무역성장률</b>	2.7	2.6	4.8	4.1	4.0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Table 1.1 재구성

2)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No.1,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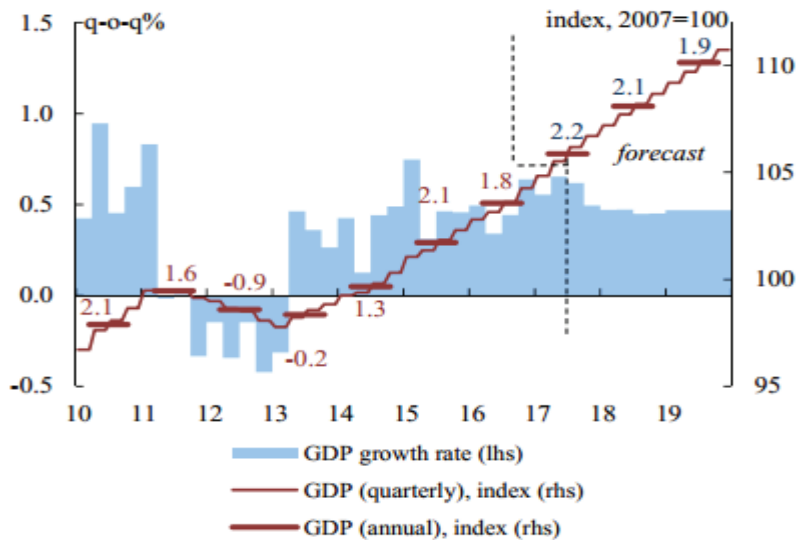
3)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 정도

4)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 간의 차이 또는 부채와 자산 간 표시 통화의 불일치를 일컫는 말로, 신흥국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

□ (EU 전망<sup>5)</sup>) 유로지역 및 EU 경제는 2017년 2.2%, 2018년 2.1%, 2019년 1.9%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sup>6)</sup>

- (경제) 유로지역 및 EU 경제는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망기간 중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유로지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회복, 세계 경제성장 개선, 실업 감소에 기인해 기존 봄(2017년 2월) 전망(1.7%)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2.2%로 전망되며, 2018~2019년 성장률은 각각 2.1%, 1.9%로 전망됨
  - EU의 2017년 경제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1.9%)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2.3%로 전망되며, 2018~2019년 성장률은 유로지역 성장률과 동일한 2.1%, 1.9%로 전망됨

[그림 1-1] 유로지역의 실질GDP 전망



주. 선분 위 숫자는 연간성장률을 의미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 (물가)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및 비가공식품 물가 하락과 유로화 절상으로 인한 수입 물가 하락으로 2018년 초에 소폭 하락했다가, 대체로 평탄할 것으로 보이는 유가와 양(+)<sup>7)</sup>의 산출갭 전망에 따라 2018년 말부터 다시 상승할 전망

5)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6) 본 전망은 EU 27개국과 영국의 교역 관계가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한다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가정에 기반

-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1.5%로 전망되고, 2018년 1.4%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1.6%로 상승할 전망
- EU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1.7%에서 2018년 1.7%, 2019년 1.8%의 완만한 상승을 보일 전망
- (노동) 내수 증가, 완만한 임금상승률 등으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실업이 감소할 전망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7년 9.1%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8.5%, 7.9%로 더욱 하락할 전망
  - EU의 실업률도 전망 기간 중 각각 7.8%, 7.3%, 7.0%로 하락할 전망
- (리스크) 전반적으로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적임
  - 하방 리스크는 한반도·중동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세계 금융여건 경색, 중국의 무질서한 경제조정, 보호무역주의 정책 확대 가능성 등 주로 대외요인에 기인하며, 브렉시트 협상 결과, 유로화 절상 가능성 등 대내 요인도 작용
  - 상방 리스크는 EU 내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소비자·기업경기심리개선, EMU<sup>7)</sup>의 빠른 완성, 그동안 정체된 기업 투자 반등 등 대내 요인에 주로 의존

〈표 I-4〉 EU의 경제전망

(단위: %)

	실질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유로지역	2.2	2.1	1.9	1.5	1.4	1.6	9.1	8.5	7.9
EU27	2.4	2.2	2.0	1.6	1.5	1.8	8.2	7.7	7.2
EU28	2.3	2.1	1.9	1.7	1.7	1.8	7.8	7.3	7.0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7) 유럽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EU의 경제 통합의 중요한 단계로, 회원국 간 경제 정책 조정, 특히 정부 채무 및 적자를 통한 재정정책 조정,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독립적 통화정책, 유로지역 내 금융기관의 단일 규정과 감독, 단일 통화 사용을 의미. EU는 2015년 경제동맹, 통화동맹, 재정동맹, 추진과정 중 민주적 책임성·적법성 및 제도적 절차 강화 등 EMU 완성을 위한 2025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에는 이를 수정한 로드맵을 발표.

## 나.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 □ IMF의 주요국 경제전망<sup>8)</sup>

- (미국) 높은 대외수요와 세계개편안\*의 영향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4%p 상승한 2.7%로 전망되고, 2019년은 2.5%로 전망(10월 대비 0.6%p 상승)
  - \* 내용 법인세율 인하(35%→21%) 및 투자비용에 대한 일시적인 공제
  - 효과-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2020년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에 1.2%의 총누적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일부는 일시적인 조치므로 2022년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에서 대내·외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높아짐
- (일본)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전망 대비 0.5%p 상승한 1.2%로 전망되고, 2019년은 0.9%로 전망되며, 대외수요 개선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 및 경제활동 증가세를 반영
- (중국) 대외수요 강세를 반영하여 2018-19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상승한 6.6%, 6.4%로 전망

### □ OECD의 주요국 경제전망<sup>9)</sup>

- (미국) 자산가격 상승 및 심리지표 호조에 따른 소비·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18년 2.5%, '19년 2.1%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일본) '18년 재정건전화 조치가 재개되지만, 견고한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은 '18년 1.2%, '19년 1.0%로 유지될 전망
- (영국) 높은 물가상승률과 파운드화의 하락으로 민간소비가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은 '18년 1.2%, '19년 1.1%로 약화될 전망
- (프랑스) 강건한 대외수요, 관광업의 회복, 높은 기업신뢰도와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은 '18년 1.8%, '19년 1.7%로 지속될 전망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9)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No.1, 2018.

- (독일) 경제성장률은 '18년 2.3%, '19년 1.9%로 다소 감소하나, 강건한 경제 상황이 유지되고 고용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은 '18년 6.6%, '19년 6.4%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 주택 및 모기지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건설투자 둔화가 예상되나, 국제무역 반등과 재정지원 확대에 '19년 경제성장률은 약 3%로 전망

〈표 I-5〉 OECD의 주요국 경제전망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b>실질GDP 성장률</b>					
미 국	2.9	1.5	2.2	2.5	2.1
일 본	1.1	1.0	1.5	1.2	1.0
영 국	2.3	1.8	1.5	1.2	1.1
프랑스	1.0	1.1	1.8	1.8	1.7
독 일	1.5	1.9	2.5	2.3	1.9
중 국	6.9	6.7	6.8	6.6	6.4
한 국	2.8	2.8	3.2	3.0	3.0
<b>실업률</b>					
미 국	5.3	4.9	4.4	3.9	3.7
일 본	3.4	3.1	2.8	2.8	2.8
영 국	5.4	4.9	4.4	4.4	4.6
프랑스	10.4	10.1	9.4	9.2	8.8
독 일	4.6	4.2	3.7	3.5	3.4
중 국	-	-	-	-	-
한 국	3.6	3.7	3.7	3.5	3.4
<b>소비자 물가 상승률</b>					
미 국	0.3	1.2	1.6	1.9	2.1
일 본	0.8	-0.1	0.4	1.0	1.7
영 국	0.1	0.6	2.7	2.6	2.2
프랑스	0.1	0.3	1.1	1.1	1.3
독 일	0.1	0.4	1.7	1.8	2.0
중 국	1.5	2.1	1.5	1.8	2.0
한 국	0.7	1.0	2.1	2.1	2.1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의 Ch.3에서 국가별 표 통합·재구성

□ EU의 주요국 경제전망<sup>10)</sup>

- (미국) 노동 시장 강화, 기업 투자 반등, 경기 심리 상승에 따라 2017년 2.2%, 2018년 2.3%, 2019년 2.1%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일본) 거시경제정책 지원과 확고한 대외수요가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나 경기부양책 종료,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재개, 임금의 지속적 약세로 인해 2017년 1.6%에서 2018년 1.2%, 2019년 1.0%로 성장이 약화될 전망
- (중국) 2017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 이후 노동 공급 감소, 투자 수익 하락 등 구조적 요인으로 2018년 6.5%, 2019년 6.2%로 둔화
- (독일) 강한 노동 시장, 강건한 세계 무역, 확고한 유로지역 회복을 바탕으로 2017년 2.2%, 2018년 2.1%, 2019년 2.0%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영국) 실질 임금 성장률 하락에 따라 소비 성장이 약화되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기업 투자가 제약되어 전망 기간 동안 각각 1.5%, 1.3%, 1.1%의 낮은 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전망
- (프랑스) 2017년 민간 투자 증가, 주택 시장 회복에 힘입어 경제 성장이 강화된 후 2018년까지 성장세가 유지되다가 2019년에 소폭 하락할 전망

〈표 I-6〉 EU의 국가별 경제전망

(단위: %)

	실질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미국	2.2	2.3	2.1	2.0	2.1	2.2	4.5	4.3	4.1
일본	1.6	1.2	1.0	0.4	0.8	1.2	2.9	2.8	2.7
독일	2.2	2.1	2.0	1.7	1.5	1.6	3.7	3.5	3.2
영국	1.5	1.3	1.1	2.7	2.6	2.1	4.5	4.7	4.8
프랑스	1.6	1.7	1.6	1.1	1.2	1.5	9.5	9.3	8.9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2017.

10)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2017.

## 2 세계 재정전망

###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 □ IMF 전망<sup>11)</sup>

- (재정수지) 2018년 선진국의 GDP 대비 평균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3%p 개선된 -2.5%, 2019년은 -2.4%로 전망<sup>12)</sup>
  - 신흥국 및 중위소득 국가의 2018년 GDP 대비 평균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4.1%로 전망되고, 2019년 역시 -4.1%로 전망됨
- (채무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 순채무의 경우 선진국은 2018년 72.2%(전년 대비 1.3%p 감소), 2019년 71.3%로 전망되고, 신흥국 및 중위소득 국가는 2018년 39%(전년 대비 1.9%p 증가), 2019년 40.5%로 전망
  -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는 전년 대비 1.1%p 감소하여 2018년 105.2%, 2019년 104.2%로 전망됨
  - 신흥국 및 중위소득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는 전년에 비해 1.7%p 증가한 50.1%로 전망되고, 2019년의 경우 51.7%로 증가할 전망

#### □ OECD 전망<sup>13)</sup>

- (재정수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18년 -2.4%, '19년 -2.2%로 전망
- (국가채무)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8년과 '19년 모두 111%로 전망

〈표 I-7〉 OECD의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수지	-2.9	-3.0	-2.6	-2.4	-2.2
국가채무	111	113	112	111	111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

11)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7*, 2017.

12) General Government Cyclically Adjusted Balance 기준

13)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

□ (EU 전망<sup>14</sup>) 유로지역 및 EU의 재정 적자는 경제 성장 강화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명목 GDP 상향 전망과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따른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sup>15</sup>에 의해 채무도 감소할 전망

- (재정적자) 경기여건 개선 등에 따라 재정적자가 전망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 유로지역의 일반 정부 재정 적자는 2016년 1.5%에서 2017년 1.1%로 개선되는 가운데 2018년~2019년에도 각각 0.9%와 0.8%로 개선 추세를 지속할 전망
  - EU의 일반 정부 재정 적자도 2017년 1.2%에서 2019년 0.9%까지 감소
  - 사회기여금 비중 감소에 따라 GDP 대비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경기 여건 개선, 이자 비용 감소, 실업 급여 감소 등에 따라 GDP 대비 지출이 대폭 감소
  - 경기적 요인(cyclical component)이 재정적자 감소에 2017~2019년 각각 0.45%p, 0.35%p, 0.2%p의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되고, 부차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이자지출 감소가 긍정적 요소, 재량지출 증가가 부정적 요소로 작용

\*  $\Delta$ 재정수지 =  $\Delta$ 이자지출 +  $\Delta$ 경기적요인 +  $\Delta$ 예외 · 임시적조치 +  $\Delta$ 구조적기초재정수지

- (채무)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전 회원국의 눈덩이 효과와 대다수 회원국의 기초재정수지 효과에 기인해 하락
  - 유로지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는 2017~2019년 중 89.3%, 87.2%, 85.2%로 감소할 전망
  - EU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도 2017~2019년 중 83.5%, 81.6%, 79.8%로 감소할 전망

〈표 I-8〉 EU의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재정수지			총 채무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유로지역	-1.1	-0.9	-0.8	89.3	87.2	85.2
EU27	-1.1	-0.9	-0.8	83.0	81.0	79.1
EU28	-1.2	-1.1	-0.9	83.5	81.6	79.8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14)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15) 채무 동학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GDP 대비 총채무를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저장-유량 조정(stock-flow adjustment)으로 분해하여 분석. 눈덩이 효과는 누적된 채무로 인한 이자지출 효과, 실질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고, 저장-유량 조정은 현금-발생주의 차이, 금융자산 누적 및 가치 변동, 기타 잔여 효과를 반영.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table I.1.

## 나. 주요 국가별 재정전망

### □ IMF의 주요국 재정전망<sup>16)</sup>

- (미국) 2018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4.0%로 전년에 비해 0.4%p 개선될 전망이며, 2019년은 -4.3%로 전망됨
  - GDP 대비 순채무는 2018년 81.1%로 전망되고(전년 대비 1.4%p 감소), 2019년의 경우 81%로 전망됨
- (유로지역) 2018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1.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2019년은 -0.8%로 전망됨
  - 2018년 GDP 대비 순채무는 전년 71.8%에 비해 1.5%p 개선된 70.3%로 전망되고, 2019년에는 68.6%로 전망됨
- (일본) 2018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3.2%로 전년에 비해 0.7%p 개선될 전망이며, 2019년은 -2.8%로 전망됨
  - GDP 대비 순채무는 2018년 120.7%(전년 120.9%)로 전망되고, 2019년에는 119.2%로 전망됨
- (한국) 2018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로 전년에 비해 0.1%p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1.5%로 전망됨
  - 2018년 GDP 대비 순채무는 전년 4.9%에 비해 0.2%p 개선된 5.1%로 전망되고, 2019년에는 5.4%로 전망됨

### □ OECD의 주요국 재정전망<sup>17)</sup>

- (미국) 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는 약해지고, 재정기조는 다소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GDP 대비 재정적자는 '18년과 '19년 모두 4.5%로 전망
- (일본) '18년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할 예정이나, 소비세율 인상 지연으로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sup>18)</sup>가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17년 -4.5%)

16)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7*, 2017.

17)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No.1, 2018.

18) 기초재정수지는 순이자 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로, 순이자 지출은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에서 자산에 대한 이자 수입을 차감한 것을 의미

- (영국) 경기순응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18년 2.1%, '19년 1.9%로 점차 감소할 전망
- (프랑스) 중립적 재정기조 가운데,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제한이 더욱 필요하며, 향후 5년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유지될 전망
- (독일) 성장지향적인 재정기조 가운데 재정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18년 1.5%, '19년 1.6%로 전망
- (중국)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18년 4.3%, '19년 4.4% 전망
- (한국)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17~'20년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이전 계획의 2.6%에서 5.1%로 증가할 전망

〈표 I-9〉 OECD의 주요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2015	2016	2017	2018	2019
<b>재정수지</b>					
미 국	-4.3	-5.0	-4.6	-4.5	-4.5
일 본	-3.5	-4.6	-4.8	-4.1	-3.6
영 국	-4.3	-3.3	-2.3	-2.1	-1.9
프랑스	-3.6	-3.4	-2.9	-2.8	-2.9
독 일	0.6	0.8	1.1	1.5	1.6
중 국	-1.3	-3.1	-4.0	-4.3	-4.4
한 국	1.3	2.1	1.8	1.7	1.5
<b>국가채무</b>					
미 국	105.0	106.9	105.2	106.1	107.2
일 본	214.7	217.7	221.0	223.3	224.3
영 국	111.7	121.9	121	120.3	119.5
프랑스	120.4	123.3	124.2	124.6	125.0
독 일	79.0	76.3	72.4	69.1	66.2
중 국	-	-	-	-	-
한 국	45.7	45.5	45.8	46.3	46.9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의 Ch.3에서 국가별 표 통합·재구성

□ EU의 주요국 재정전망<sup>19)</sup>

- (미국) 법인세율 인하 개혁이 연방정부의 GDP 대비 적자와 채무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일본) 2017년 일반정부 적자가 4.3%로 소폭 상승하다 2018년 이후 경기부양책 종료, 소비세율 인상으로 재정건전화는 진행될 예정이나, 2018년 재정정책 검토의 목표치에 따라 재정전망이 다소 불확실함
- (중국) 지방정부의 예산외 지출의 영향이 커 재정 기초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지만 예산지출이 명목 GDP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독일) 2017년 핵연료세 환급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거시경제전망이 재정수지의 상승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경기성장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채무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60% 미만으로 감축될 전망
- (영국) 재정 적자는 FY2017-2018에 이자지출 증가로 소폭 증가하다가 FY2018-2019 이후 감소 추세가 재개될 전망이고 채무는 FY2016-2017 고점 이후 계속해서 하락할 전망
- (프랑스) 재정 적자는 2017년 경제성장을 상승과 재정건전화 조치로 개선되다가 2018년에는 감세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경기 여건에 힘입어 유지, 2019년에는 감세효과(delayed effect of tax cuts)로 소폭 악화될 전망이며 채무는 현 수준을 유지

〈표 I-10〉 EU의 국가별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재정수지			총채무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미 국	-5.0	-4.9	-5.1	108.2	108.4	108.8
일 본	-4.3	-3.8	-3.1	239.6	239.1	237.8
독 일	0.9	1.0	1.1	64.8	61.2	57.9
영 국	-2.1	-1.9	-1.5	86.6	85.3	84.2
프랑스	-2.9	-2.9	-3.0	96.9	96.9	96.9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19)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

###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

#### 가. 통화정책

##### □ IMF의 통화정책 권고<sup>20)</sup>

-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함
  - － 수출량이 잠재수출량에 근접하고 임금·물가 압력이 낮은 국가들은 데이터를 참고하여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
    - \* 단, 실업률이 낮으며 앞으로도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은(예, 미국) 현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빠른 속도의 정상화 가능성 있음
  - － 수출량 갭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낮은 국가들은 경기 대응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함
- 신흥경제국의 통화정책 기제(monetary policy framework)가 개선됨에 따라 근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기여해 옴

##### □ OECD의 통화정책 권고<sup>21)</sup>

- 통화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진해야 하며, 실물경제·금융·물가의 변동을 감안해야 함
  - － (미국) 점진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자산을 축소해야 함
  - － (일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확장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자산 매입 유지를 통해 정부채무 청산비용을 낮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함
  - － (중국) 경제성장이 용자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업채무 및 지방 정부 채무 축적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 － (한국)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 정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21)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No.1, 2018.

## 나. 재정정책

### □ IMF의 재정정책 권고

- 경제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및 금융시장 회복력(resilience) 증대를 우선 목표로 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정책 조합을 시행해야 함<sup>22)</sup>
  - － (선진국)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공공투자와 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신흥·개도국) 원자재 가격이 경기순환적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하여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과 예산조정을 시행해야 함
- 세계 공통정책(cross-cutting policy)은 잠재생산량을 향상시키고 하방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sup>23)</sup>
  - － (선진국)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와 가깝게 유지하고, 경제성장 및 분배를 고려한 통합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됨
    - (분배 친화적 재정정책) 2017년 10월 Fiscal Monitor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소득 및 기회의 형평성을 개선해야 함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물리적 인프라 투자)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작용한다면 단·장기에 걸쳐 이익을 창출
    - (노동공급 확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 (제품 및 노동시장 개혁) 재정여력이 부족한 일부 국가들은 제품·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충격에 대한 대응력 향상이 필요
  -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정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

22)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23)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No.6, 2017.

- (포용적 정책) 신흥국 및 개도국은 선진국 대비 소득불평등이 높은 수준이나 대부분 행정능력이 낮고 재정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재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 (인프라) 선진국 대비 1인당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며 공공인프라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제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거버넌스 및 법 제도 향상을 통해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노동력 공급 확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낮은 수준으로 신흥국의 여성노동참여율은 20대 남성 그룹 대비 평균 30%p 차이가 있음
- (제품 및 노동시장 규제, 무역정책) 노동시장 규제의 단순화, 무역장벽 제거가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함

#### □ OECD의 재정정책 권고<sup>24)</sup>

- 재정완화 정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포용적 성장 및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지출 정책과 구조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 － (미국) 규제철폐와 조세개혁은 투자를 보다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 (일본) GDP 대비 220%를 넘는 정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포괄적인 재정계획 필요
  - － (프랑스) 불필요하거나 비우선적인 지출을 억제하고,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지출은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 (독일) 보육서비스 및 전일제 학교 보급의 확대, 인프라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조세부담을 근로소득에서 환경·부동산세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
  - － (중국) 다수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작됨에 따라 재정은 확장적이나, 교육, 보건 및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또한 강조되어야 함
  - － (한국) 재정정책이 소득 재분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생산성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

24)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No.1, 2018.

##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1 일본(FY2018: 2018. 4 ~ 2019. 3)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 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2018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8%, 명목GDP 성장률은 2.5%로 전망

〈표 II-1〉 일본 경제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실질GDP 성장률	1.2	1.9	1.8
명목GDP 성장률	1.0	2.0	2.5
실업률	3.0	2.8	2.7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1	0.7	1.1

출처: 내각부, 「平成30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7.12.19.

〈표 II-2〉 일본 재정전망

(단위: 조엔, %)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정부안)
기초재정수지	-24.9	-23.2	-18.0	-13.4	-10.8	-10.8	-10.4
국채잔고	705.0	743.9	774.1	805.4	830.6	863.9	882.8
GDP 대비 %	142.6	146.6	149.3	150.9	154.0	157.0	156.4
국채의존도(%)	47.6	46.3	43.0	38.3	35.6	35.3	34.5

주 1. 당초예산기준

2. 일반회계기초재정수지= 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3.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12.22

- (재정전망) 2018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7% 감소한 10.4조원을 나타낼 전망이며, 2018년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882.8조원을 나타낼 전망

#### □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은 「경제·재정재생계획」 집중개혁 기간의 마지막연도 예산으로,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에 양립하는 예산
  - － (인재육성 혁명) 백세인생시대를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 세대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
  - － (생산성 혁명)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디플레이션의 탈출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진행

####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9조 790억으로 전망
- (세출) 2018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이며,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으로 편성

####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인재육성 혁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생산성 혁명’을 비롯한 현재 중요 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
  - － (인재육성 혁명)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및 개호(간병) 인력 처우개선, 유아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급부형 장학금 확충 등
  - － (생산성 혁명) 지역의 핵심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인재 투자 촉진,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세제상 조치 실시, 산학관(産學官) 연계 연구개발 등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중점화 등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개혁공정표」를 바탕으로 한 세출개혁 추진

- 일반세출과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국채 발행액 6년 연속 감축,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건전화의 착실한 진행
- 「경제·재정재생계획」 기간(2016~2020년도)의 개혁의 방향성과 검토·실시 시기 등을 명확히 한 「개혁공정표」를 바탕으로 세출개혁을 추진

## 2 독일(FY2018: 2018. 1 ~ 2018. 12)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연방은행의 2017년 12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실질GDP 성장률은 '17년 2.6%, '18년 2.5%, '19년 1.7%로 전망

〈표 II-3〉 독일 경제전망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실질GDP 성장률	1.9	2.6	2.5	1.7
실업률	6.1	5.7	5.3	5.1
소비자물가 상승률	0.4	1.7	1.6	1.7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17.12.14.

〈표 II-4〉 독일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 억유로, %)

	2017	2018 (정부안)	중기재정계획		
			2019	2020	2021
재정지출	3,291	3,375	3,482	3,494	3,568
전년 대비 증감률(%)	3.8	2.6	3.2	0.3	2.1
재정수입	3,291	3,375	3,482	3,494	3,568
조세수입	3,010	3,088	3,218	3,271	3,416
세외수입	281	287	264	223	152
신규차입	0	0	0	0	0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17 und Finanzplan bis 2021*, 2017. 7.

- (재정전망) 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긍정적인 경제추세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 지속될 전망

□ 교육 및 연구, 안보,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성장) 금년 교통·인프라에 약 142억유로, 교육 및 연구에 176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재정건전화) '14년에 달성한 재정균형은 '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채무는 '17년 GDP 대비 66%에 도달하였고 안정 및 성장협약에 따라 '20년 50%대로 진입할 예정
- (난민지원) 비상사태 예방, 지방재정지원, 사회통합 등 난민 관련 지원에 214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예산안 내용

- (수입) '18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유로 편성, 특히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출) FY2018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21년까지의 재정계획에서는 내무, 외무, 개발협력에 중점을 둠
  - (노동사회부)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과 구직자 기초보장에 중점
  - (내무부) 연방경찰(Bundespolizei) 및 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의 지원
  - (경제에너지부) 디지털 어젠다 2025(Digitalen Strategie 2025)<sup>25)</sup> 초소형 전자공학 분야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D 투자 강화, 스타트업 지원 등에 초점
  - (국방부) 군수장비 유지보수 및 국방인원 보충
  - (교육연구부)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sup>26)</sup>에 22억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경제협력개발부)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87억유로 편성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아동양육수당(64억유로), 아동복지(4천 5백만유로)를 확대할 계획

25) 디지털 어젠다: 독일정부는 2014년에 도입된 디지털 어젠다 프로그램은 독일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함(BMVI, 2016)

26) 고등교육협약 2020(Hochschulpakt 2020):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수요에 맞춰 학습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하여 2015~2020년간 1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연방재무부, 2018 & 박동, 2016)

□ 주요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첨단기술발전, 응용과학연구, 우수대학육성,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재정건전화) 2017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7(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7) 채택
-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정책) '18년 연방정부는 34.3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지방재정지원)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 법안(Bund-Länder-Finanzbeziehungen)이 '17년 6월 1일 통과

**3** 프랑스(FY2018: 2018.1 ~ 2018.12)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7-2018년 소비와 투자의 내수 회복과 대외수요 가속화가 프랑스의 경제활동 회복을 견인하여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로 전년(2016년 1.1%)보다 회복될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7년 2.9%, 2018년 2.6%로 전망되어 2017년에 EU의 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하고 2009년에 시작된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가 종료될 전망

〈표 II-5〉 프랑스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6	2017	2018
실질GDP 성장률(%)	1.1	1.7	1.7
물가상승률(%)	0.2	1.0	1.1
구조적 재정수지	-2.5	-2.2	-2.1
재정수지	-3.4	-2.9	-2.6
국가채무	96.3	96.8	96.8

자료: PLF 2018.

- (국가채무) 향후 5년 동안 재정지출의 3%p 이상 감축, 공공계정의 균형으로의 근접, 경제 회복에 의해 국가채무는 2017-18년 96.8%에서 2019년 97.1%를 정점으로 2020년 이후 감소하여 2017년-2022년 동안 약 5%p 감소할 전망

#### □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안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프랑스인의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구매력 강화, 실업대응, 주거정책 개혁에 주력
  - 정책우선순위는 학교교육, 국방, R&D 및 고등교육

####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8년 재정수입은 2017년 수정전망 대비 0.36% 감소한 3,020억유로로 전망
  -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0.3%(13억유로) 감소한 2,888억유로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4%(2억유로) 증가한 132억유로로 전망
- (세출) 2018년 재정지출은 3,863억유로로 2017년 수정전망 대비 0.39% 정도 증가
  -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이민 및 통합정책, 보건의료,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세정책을 마련
  - 주요 정책으로 부유세 폐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신설,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도입, 대규모 투자 계획(Grand plan d'investissement, GPI) 시행, 법인세를 28%에서 25%로 단계적 인하 등이 있음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위해 주택 보조금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절감 등 야심찬 지출절감 조치가 2018년에 시행될 것임
- (복지지출 관리) 2018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지출통제 노력으로 전년 대비 30억유로 이상 감소한 22억유로로 전망

**4 영국(FY2018-19: 2018. 4 ~ 2019. 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18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1.4%로 대폭 하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7-18 GDP 대비 2.4%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8-19에 1.9%로 감소. 지난 전망 대비, 단기 전망은 개선되었으나 중기 전망은 악화
- (국가채무) FY2017-18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86.5%를 기록한 후, FY2018-19부터 매년 감소할 전망

〈표 II-6〉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실적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	1.8	1.5	1.4	1.3	1.3	1.5	1.6
실업률(LFS)	4.9	4.4	4.3	4.4	4.6	4.6	4.6
공공부문 순차입	2.3	2.4	1.9	1.6	1.5	1.3	1.1
공공부문 순채무	85.8	86.5	86.4	86.1	83.1	79.3	79.1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1.1 및 4.43

□ 예산기조

- (미래를 위한 경제 구축) 국가생산성투자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한 주택 건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
- (국민, 기업, 국가보건서비스 지원) 국가보건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임금향상, 생활비 감소,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 기존의 저세율 기조는 유지하되, 조세 회피 및 역외 탈세를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8-19 총경상수입은 7,698억파운드로 예상되며, VAT, 취득세 등의 세수 전망 감소에 따라 지난 3월 전망 대비 66억파운드 하향조정
- (지출) FY2018-19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8,093억파운드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140억파운드(1.76%) 증가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s)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재정건전화) 2016년 11월 개정된 재정목표를 기반으로 재정수지, 채무, 복지지출 통제,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를 실시로 공공지출 통제
- (기타) EU 탈퇴 준비 예산마련, 주택공급 종합 정책 발표, 국가보건서비스 개선,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5 캐나다(FY2018-19: 2018. 4 ~ 2019. 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8년 실질 및 명목GDP 성장률은 각각 2.2%, 4.0%,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각각 6.0%, 1.9%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8-19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18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는 30.1% 수준으로 전망

〈표 II-7〉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22
실질GDP 성장률	3.0	2.2	1.6	1.7	1.6	1.8	2.0
명목GDP 성장률	5.2	4.0	3.5	3.8	3.6	3.8	4.0
실업률	6.4	6.0	6.0	6.1	6.0	6.0	6.1
CPI 상승률	1.6	1.9	2.0	1.9	1.9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2.1 일부 발췌

〈표 II-8〉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총수입	293.5	309.6	323.4	335.5	348.0	362.1	373.9
총지출	311.3	329.0	338.5	350.0	361.9	372.9	383.2
재정수지	-17.8	-19.4	-18.1	-17.5	-16.9	-13.8	-12.3
연방채무	631.9	651.5	669.6	687.1	704.0	717.8	730.1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2.6 일부 발췌

□ FY2018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7-18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8-19 총세입은 FY2017-18 대비 4.5% 증가한 3,234억캐나다 달러(GDP 대비 14.5%),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출) 총세출은 FY2017-18 전년 대비 6.1% 증가한 3,046억캐나다달러, FY2018-19 전년 대비 2.5% 증가한 3,122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강한 중산층을 위한 평등과 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

- FY2018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중산층을 위한 투자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캐나다 국민의 기술향상 및 공평한 기회 확대에 중점 투자할 계획
  - 성장(Growth), 진보(Progress), 조화(Reconciliation), 발전(Advancement), 평등 (Equality)에 대한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
    - (성장) 새로운 근로장려세제(Canada Workers Benefit) 도입, 아동복지급여 강화,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
    - (진보)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 과학자, 연구원 및 장비 등 투자 확대
    - (조화) 원주민 보호를 위한 가족, 보건, 주택, 물 등에 대한 투자
    - (발전) 자연유산 보호에 지속적인 투자, 국제원조 지원 강화, 안전한 국가 구현 등의 정책에 중점투자
  - 2018 예산안에서는 GBA+(Gender-Based Analysis Plus)를 도입하여 각 정책들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여성 경제참여 촉진 및 양성평등 관련 정책 강조

□ 재정건전화

- FY2018 예산안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했으나 이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전망기간동안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을 발표
- 재정적자는 GDP 대비 FY2017-18 0.9%에서 FY2022-23 0.5%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6 호주(FY2017-18: 2017. 7 ~ 2018. 6)**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광산 투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가계 소비 및 비광산 부문의 투자 개선으로 경제 반등이 예상됨
- 실질GDP성장률이 FY2017-18에 2.75%, FY2018-19에 3.0%로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7-18 예산수지<sup>27)</sup>는 -294억호주달러(GDP 대비 -1.6%)로 전망되며, FY2020-21에 74억호주달러(GDP 대비 0.4%)로 흑자 전환 전망

〈표 II-9〉 호주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sup>1)</sup> 전망

(단위: %)

	실적(Outcomes)	추정(Forecast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실질GDP 성장률	2.6	1.75	2.75	3.0
소비자물가지수	2.9	2.5	2.75	3.0
명목GDP 성장률	2.3	6.0	4.0	4.0

주: 실질GDP 성장률과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는 2사분기(June Quarter) 기준 연 증가율 기준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27) 예산수지는 현금주의 기준(Future Fund 예상수익금 제외)이며, 재정수지는 발생주의 기준. 호주예산은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두 가지 회계가 혼합되어 사용되며, 예산편성 및 승인 등의 과정에서는 현금주의를 이용하는 반면 세출, 예산집행 및 보고 등에는 발생주의 적용.

〈표 II-10〉 호주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재정수입(Revenue) <sup>1)</sup>	412.1	444.4	476.1	510.8	540.4
GDP 대비 비율	23.5	24.4	25.2	25.8	26.0
재정지출(Expenses) <sup>1)</sup>	450.8	464.3	486.9	503.2	522.9
GDP 대비 비율	25.7	25.5	25.7	25.4	25.2
재정수지(Fiscal Balance) <sup>2)</sup>	-40.7	-20.3	-15.5	2.7	11.4
GDP 대비 비율	-2.3	-1.1	-0.8	0.1	0.6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sup>3)</sup>	-37.6	-29.4	-21.4	-2.5	7.4
GDP 대비 비율	-2.1	-1.6	-1.1	-0.1	0.4
순채무(Net debt) <sup>1)</sup>	325.1	354.9	375.1	374.7	366.2
GDP 대비 비율	18.6	19.5	19.8	18.9	17.6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 예산기조: FY2017-18 예산안은 공정, 안보, 기회 증진에 기반하여 1)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2) 공공서비스 보장, 3) 생활비 부담 경감, 4) 균형예산(balanced budget) 달성에 초점
  - (Stronger growth)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주요 인프라 투자 및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 (Guaranteeing the essentials) 보건, 주거, 장애인, 교육, 고용 등 공공 서비스 보장
  - (Downward pressure on cost of living) 주택·주거, 에너지·전기, 보육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비(cost of living) 압박을 완화
  - (Living within our means) FY2020-21에 균형예산 회복 노력 및 AAA신용등급 유지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17-18 재정수입은 '16년 전망 대비 7.8% 증가한 4,444억호주달러(GDP 대비 24.4%)로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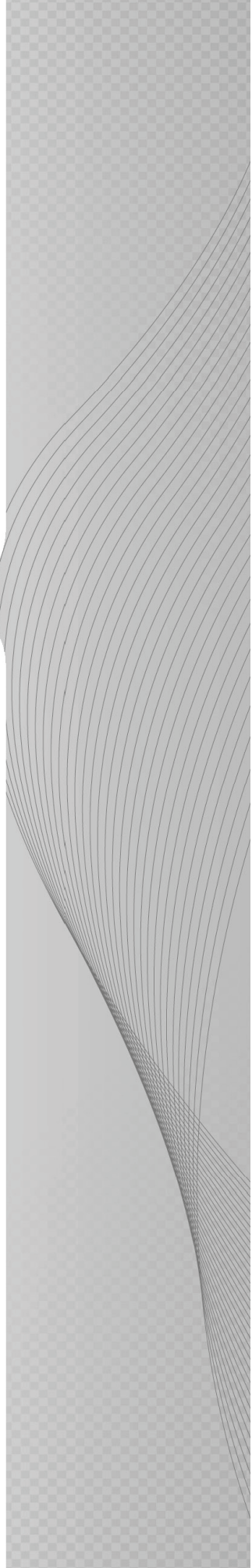
- 
- (지출) FY2017-18 재정지출은 '16년 전망 대비 3.0% 증가한 4,643억호주달러(GDP 대비 25.5%)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인프라투자) 호주정부는 도로, 철로, 공항 등 국가중점인프라 건설에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750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비광업 부문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 계획
- (주택)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 및 첫 주택 구입자와 주택 다운사이징 희망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으로 주택 구매력 증진
- (균형재정) FY2017-18 예산안은 FY2020-21 균형재정 및 중기적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며, 정부지출은 FY2020-21에 GDP 대비 25% 규모로 감소하여 30년 평균수준에 가까워질 전망

제 2 부

# 각국 예산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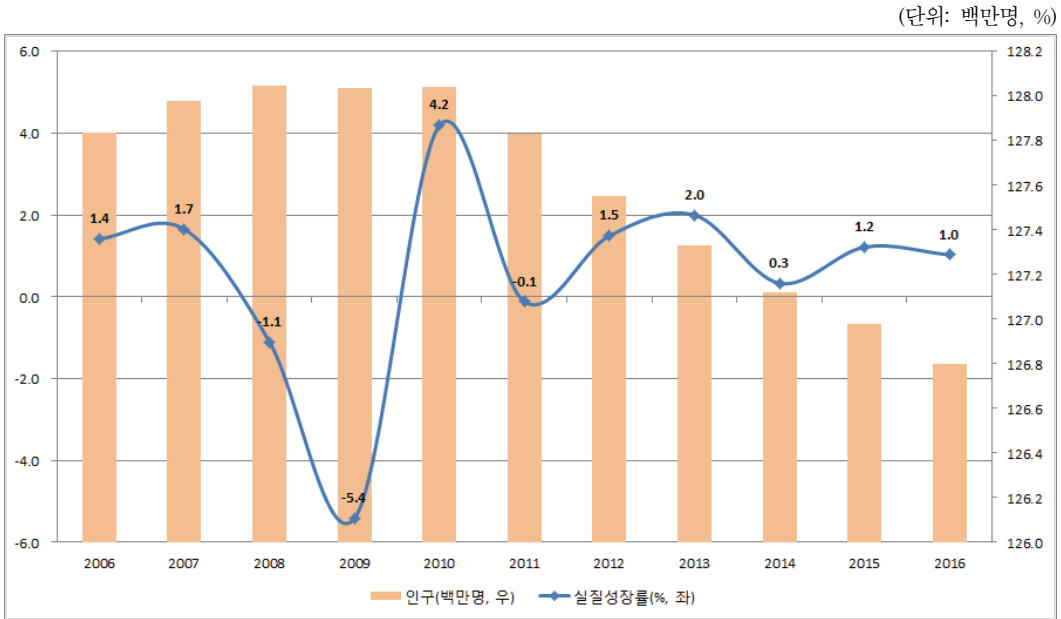




## I. 일 본

- FY2018: 2018.4 ~ 2019.3
- FY2018 예산편성 일지
  - 2017.9.6. FY2018 각 부처의 개산요구
  - 2017.12.8. FY2018 예산편성 기본방침 각의 결정
  - 2017.12.22. FY2018 예산 정부안 각의결정
  - 2018.1.28. FY2018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 출처
  - 「平成30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7. 12. 8.
  - 「平成30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7. 12. 19.
  - 「平成29年度補正予算(第1号)」, 2017. 12. 22.
  - 「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 12. 22.
  -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 12.
  - 「予算編成におけるP D C Aサイクルの取組み」, 2018. 1. 22.
- 환율: 100엔 = 약 1,008.52원(2017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6년 경상GDP 5조 3,595억달러 추정(우리나라 약 2.9배 수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16년 기준 31.2%(우리나라 77.7%)
- 인구: 1억 2,680만명(2016년 기준)

□ 실질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 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7. 6. 9.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발표	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7. 7. 14.	2017년도 내각부 수정 경제전망 발표	
2017. 7. 18.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	
2017. 7. 18.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발표	
2017. 7. 31.	FY2016 결산발표	
2017. 9. 6.	2018년도 일반회계 개선요구액 발표	
2017. 12. 8.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2017. 12. 19.	「2018년도 경제전망 및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발표	2018년 1월 제1호 「재정동향」
2017. 12. 22.	FY2017 제 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2017. 12. 22.	2018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등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 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018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8%, 명목GDP 성장률은 2.5%로 전망
- (재정수지) 2018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7% 감소한 10.4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18년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882.8조엔,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한 156.4%로 전망되며,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 □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은 「경제·재정재생계획」 집중개혁 기간의 마지막연도 예산으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에 양립하는 예산

##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9조 790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18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엔으로 편성

##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인재육성 혁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생산성 혁명'을 비롯한 현재 중요 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
- (재정건전화) 일반세출과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국채발행액 6년 연속 감축,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 건전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개혁공정표'를 바탕으로 한 세출개혁 추진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2018년도에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sup>28)</sup> 등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 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 전망
- (성장률) 2018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8%, 명목GDP 성장률은 2.5%로 전망
  - 2018년도 일본경제는 해외경제 회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의 선순환이 더욱 진전되어 민간수요 중심으로 경기회복 전망
    - － (민간최종소비지출)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에 의해 전년 대비 1.4% 증가 전망
    - － (민간주택투자) 완화적 금융환경에서 소폭 증가한 전년 대비 0.6% 증가 전망
    - － (민간설비투자) 생산 증가 및 기업 수익 개선 등에 의해 전년 대비 3.9% 증가 전망
    - － (공적수요) 실질GDP 대비 공적수요 기여도는 사회보장관계비 증가 등에 의해 0.1% 증가 전망
    - － (해외수요) 실질GDP 대비 해외수요 기여도는 해외경제 회복 등에 의해 0.1% 증가 전망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종합)는 경기회복에 의해 수급이 상승세를 나타내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진전이 전망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DP 디플레이터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여 전년 대비 0.8% 증가할 전망
- (고용) 고용환경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 및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노동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지수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5,877만명으로 전망되며, 완전실업률은 소폭 감소한 2.7%로 전망

28) 2017년 12월 8일 각의결정, 자세한 내용은 2017년 하반기 『KPF 재정동향』 일본편 참고

〈표 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 분	2016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6		2017		2018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조엔)	539.3	550.3	564.3	1.0	1.2	2.0	1.9	2.5	1.8
민간최종소비지출	300.5	305.2	311.5	-0.2	0.3	1.6	1.2	2.1	1.4
민간주택투자	17.0	17.5	17.9	5.9	6.2	3.0	1.1	2.2	0.6
민간설비투자	83.6	87.6	92.3	0.4	1.2	4.8	3.4	5.3	3.9
민간재고품증가(기여도)	-0.3	-0.2	0.7	(-0.3)	(-0.3)	(0.0)	(0.0)	(0.2)	(0.1)
재화·서비스수출	88.6	96.5	102.5	-3.4	3.4	9.0	4.8	6.2	4.0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83.3	92.3	97.9	-9.5	-1.1	10.8	3.3	6.1	3.4
내수기여도	/			-0.1	0.4	2.2	1.6	2.5	1.6
민간수요기여도				-0.1	0.3	1.7	1.3	2.2	1.5
공적수요기여도				0.1	0.1	0.5	0.3	0.2	0.1
외수기여도				1.1	0.8	-0.2	0.3	0.1	0.1
국민총소득	556.3	570.5	585.7	0.4	0.9	2.6	1.8	2.7	1.8
노동·고용(만명)									
노동력인구	6,681	6,735	6,759	0.7		0.8		0.4	
취업자수	6,479	6,546	6,580	1.0		1.0		0.5	
고용자수	5,764	5,835	5,877	1.4		1.2		0.7	
완전실업률(%)	3.0	2.8	2.7						
생산(%)									
광공업생산지수(증감률)	1.1	4.7	2.7						
물가(%)									
생산자물가지수(변화율)	-2.3	2.6	2.3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1	0.7	1.1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2	0.2	0.8						
국제수지(조엔)									
무역·서비스수지	4.4	2.8	3.3						
무역수지	5.8	3.7	3.1						
수출	70.7	77.4	82.8	-3.4		9.5		7.0	
수입	64.9	73.7	79.7	-10.9		13.6		8.2	
경상수지	20.4	21.4	22.8						
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3.8	3.9	4.0						

자료: 내각부, 「平成30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7. 12. 19.

##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2018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7% 감소한 10.4조원을 나타낼 전망

- (세입) 2018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예산안 대비 2.4% 증가한 59.1조원, GDP 대비 비중은 10.5%로 전망되며, GDP 대비 세수 및 기타수입의 비중은 전년 대비 0.2%p 하락한 11.3%로 전망

(표 I-2) FY2018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sup>1)</sup>

(단위: 조엔, %)

구분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정부안)
일반세출 <sup>2)</sup>	54.4	54.0	56.5	57.4	57.8	58.4	58.9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sup>3)</sup>	68.4	70.4	72.6	72.9	73.1	73.9	74.4
GDP 대비 %	13.8	13.9	14.0	13.7	13.6	13.4	13.2
일반회계세출총액	90.3	92.6	95.9	96.3	96.7	97.5	97.7
GDP 대비 %	18.3	18.3	18.5	18.0	17.9	17.7	17.3
조세 및 인지수입 <sup>4)</sup>	42.3	43.1	50.0 (4.5)	54.5 (6.2)	57.6 (6.3)	57.7 (6.3)	59.1 (6.4)
GDP 대비 %	8.6	8.5	9.6	10.2	10.7	10.5	10.5
국채발행 수입	44.2	42.9	41.3	36.9	34.4	34.4	33.7
국채잔고	705.0	743.9	774.1	805.4	830.6	863.9	882.8
GDP 대비 %	142.6	146.6	149.3	150.9	154.0	157.0	156.4
국가 및 지방장기채무잔고	931.9	971.8	1,000.6	1,032.7	1,056.1	1,087.1	1,107.4
GDP 대비 %	188	192	193	193	196	198	196
기초재정수지 <sup>5)</sup>	-24.9	-23.2	-18.0	-13.4	-10.8	-10.8	-10.4
국채의존도(%) <sup>6)</sup>	47.6	46.3	43.0	38.3	35.6	35.3	34.5

주: 1) 당초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는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팔호안의 수치는 소비세인상(5%~8%)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의미(국세부분)

5) 일반회계기초재정수지=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6)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 12. 22.

\_\_\_\_\_,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 12. 22.

- (세출) 2018년도 일반회계세출총액은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7조엔(GDP 대비 17.3%)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74.4조엔(GDP 대비 13.2%)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18년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882.8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한 156.4%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잔고는 전년 대비 약 2%p 감소한 196% 규모로 전망

## 2 예산기조

- FY2018 예산편성의 기본방침(2017. 12. 8.)<sup>29)</sup>
  - 2018년 예산편성은 구조개혁과 더불어 금융정책과 성장 지향적 재정정책의 조화를 추진
    - －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고 ‘육아 안심 플랜’을 바탕으로 한 보육시설 정비 등 ‘인재육성 혁명’ 추진,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한 기업 설비 및 인재에 대한 강력한 투자, 연구개발·이노베이션 촉진 등 중요한 정책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 등 신축성 있는 예산 편성
  -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sup>30)</sup>에 따라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동일본대지진, 구마모토대지진을 비롯한 각지의 재해로부터 부흥 및 방재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경제·재정재생계획」<sup>31)</sup>에 포함된 세출계획 등을 착실히 실행하고, ‘개혁공정표’를 바탕으로 한 세출개혁 추진 노력을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

29) 내각부, 「平成30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7. 12. 8.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7/30\\_yosanhensei.pdf](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7/30_yosanhensei.pdf)

30) 2015년 9월 아베내각이 발표한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이 활약할 수 있는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명목GDP 600조엔 달성), 꿈을 이루는 육아지원(희망출생률 1.8% 실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개호(간병)인력 이직 제로 실현)을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함. 1억 총 활약사회는 50년 후에도 일본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1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

- 예산편성에 있어 일본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출전반에 걸쳐 성역 없는 철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지방에서도 국가의 노력과 기조에 맞게 철저한 재검토를 진행
-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도록 정책효과가 부족한 세출을 철저히 삭감하고 정책효과가 높은 세출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세출개혁을 착실하게 추진
- 행정사업 리뷰 등을 통한 각 부처의 세출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가시화’<sup>32)</sup>의 철저한 시행 및 확대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개
- PDCA사이클<sup>33)</sup>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표 및 분석의 오픈데이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효과 측정의 통계 등의 조기공표 노력
- 경제·재정일체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혁공정표’에 따른 모든 개혁의 진행상황을 검증

#### □ FY2018 예산의 주요 내용 (2017.12.22.)<sup>34)</sup>

- 2018년 예산은 「경제·재정재생계획」 집중개혁 기간의 마지막연도 예산으로,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가 양립하는 예산
- (인재육성 혁명) 백세인생시대를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세 대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
  - － 보육시설 확대
  - － 보육교사 및 간호 인력 처우개선
  - － 유아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 급부형 장학금 확충

31) 2015년 6월 30일 각의결정.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경제·재정 재생계획」을 통해 경제 및 재정의 일체적인 개혁을 실시. ‘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의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며, 계획의 초기 3년인 2016~2018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지정

32) 경제·재정 일체 개혁을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수요·공급과 관계하여 ① 관계주체·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여 차이를 알 수 있고, ② 행정 운영개선 및 성과의 유무·정도를 알 수 있고, ③ 개혁 과제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세 개의 ‘알 수 있다’를 연결하는 ‘가시화’를 추진

33)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이클은 Plan(정책기획입안, 성과목표 설정) → Do(정책시행) → Check(행정사업 리뷰·정책평가) → Action(예산요구)을 의미

34)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8/seifuan30/01.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8/seifuan30/01.pdf)  
 일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

- (생산성 혁명)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디플레이션의 탈출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 － 지역의 핵심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인재 투자 촉진
  - －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세제상 조치 실시 등 세제조치 시행
  - － 산학관(産學官) 연계 연구개발 등을 지원
  -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중점화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진행
  - － 일반세출과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 2016~2018년도 3년간 각각 1.6조엔, 1.5조엔 인상
  - － 아베내각 출범 이후 국채발행액을 6년 연속 감축
    - 2017년도 34.4조엔→2018년도 33.7조엔
  -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 2017년도 -10.8조엔→2018년도 -10.4조엔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FY2018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으로 전망
  - (조세 및 인지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9조 79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의 비중은 10.5%로 전망
    - － 원천소득세(5.7%), 신고소득세(7.2%), 상속세(5.9%), 소비세(2.5%), 자동차증량세(6.8%), 관세(7.2%)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법인세(-1.8%), 담배세(-5.9%) 등이 감소,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sup>35)</sup> 신설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4조 9,416억엔으로 전망

35) 2018년도 세제개정안(2017.12.22. 각의결정)에서는 국제여행관광객 등(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1951년 정령 제 319호)에 의해 출국 확인을 받고 본국에서 출국한 관광객 등을 의미,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제외)은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의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 국제선박 등(본국과 외국 사이에 관광객 등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항공기(공용선박 및 공용항공기 제외)를 의미)에 의해 본국에서 출국 시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이 부과되며, 세율은 출국 1회당 1,000엔으로 함.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33조 6,922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채의존도도 전년 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표 I-3〉 FY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7 당초	FY2018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세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77,120	590,790	13,670	2.4
	2. 기타 수입	53,729	49,416	-4,313	-8.0
	3. 국채발행액	343,698	336,922	-6,776	-2.0
	(1) 공채금(건설국채)	60,970	60,940	-30	0.0
	(2) 특례공채금(적자국채)	282,728	275,982	-6,746	-2.4
	<b>합 계</b>	974,547	977,128	2,581	0.3
세출	1. 국채비 <sup>1)</sup>	235,285	233,020	-2,265	-1.0
	2.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739,262	744,108	4,846	0.7
	(1) 일반세출	583,591	588,958	5,367	0.9
	사회보장관계비	324,735	329,732	4,997	1.5
	사회보장관계비 외	258,856	259,226	370	0.1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sup>2)</sup>	155,671	155,150	-521	-0.3
	<b>합 계</b>	974,547	977,128	2,581	0.3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국채비는 국채의 상환 및 이자지불을 위한 경비로, 국채잔고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비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표 I-4〉 FY2018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7		FY2018	전년 대비			
	예산 (당초)	결산전망	예산안	예산 (당초)		결산전망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48,740	153,100	157,250	8,510	5.7	4,150	2.8
신고소득세	30,740	32,650	32,950	2,210	7.2	300	1.0
(소득세 계)	(179,480)	(185,750)	(190,200)	(10,720)	6.0	(4,450)	2.5
법인세	123,910	116,770	121,670	-2,240	-1.8	4,900	4.0
상속세	21,150	22,390	22,400	1,250	5.9	10	0.0
소비세	171,380	171,220	175,580	4,200	2.5	4,360	2.5
주세	13,110	13,130	13,110	0	0.0	-20	-0.2
담배세	9,290	8,750	8,740	-550	-5.9	-10	-0.1
휘발유세	23,940	23,700	23,300	-640	-2.7	-400	-1.7
석유가스세	80	80	80	0	0.0	0	0.0
항공기연료세	520	530	520	0	0.0	-10	-1.9
석유석탄세	6,880	7,140	7,090	210	3.1	-50	-0.7
전원개발촉진세	3,130	3,230	3,230	100	3.2	0	0.0
자동차증량세	3,700	3,830	3,950	250	6.8	120	3.2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	-	-	60	60	-	60	-
관세	9,530	10,130	10,220	690	7.2	90	0.9
톤세 <sup>1)</sup>	100	100	100	0	0.0	0	0.0
인지수입	10,920	10,530	10,540	-380	-3.5	10	0.1
합 계	577,120	577,280	590,790	13,670	2.4	13,510	2.3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톤당 16엔을 세금으로 납부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7. 12. 22.

## 나. 세출

- FY2018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 예산안 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엔으로 편성
  - (국채비)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비용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0% 감소한 23조 3,020억엔을 편성
  - (일반세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엔을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대비 0.3% 감소한 15조 5,150억엔을 편성
    -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하며,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총액에 대해 2017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확보
  
- FY2018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33.7%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경제·재정 재생계획」의 사회보장관계비 인상 기준(2016~2018년도 3년간 1.5조엔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997억엔(1.5%) 증가한 32조 9,732억엔 규모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6.1%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조 9,789억엔 규모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5%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5조 3,646억엔으로 편성,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조 3,159억엔 규모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3%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조 1,911억엔 규모
    - － 중기방위대상경비 392억엔(0.8%) 증액,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미군재편경비 등 268억엔 증액

〈표 I-5〉 FY2018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 분	FY2017	FY2018	증감액	증감률
	(A)	(B)	(B-A)	(%)
국채비	235,285	233,020	-2,265	-1.0
일반세출 <sup>1)</sup>	583,591	588,958	5,367	0.9
사회보장관계비	324,735	329,732	4,997	1.5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67	53,646	79	0.1
(과학기술진흥비)	(13,045)	(13,159)	114	0.9
연금관계비 <sup>2)</sup>	2,947	2,504	-443	-15.0
방위관계비	51,251	51,911	660	1.3
공공사업관계비	59,763	59,789	26	0.0
경제협력비	5,110	5,089	-21	-0.4
중소기업대책비	1,810	1,771	-39	-2.2
에너지대책비	9,635	9,186	-448	-4.7
식품안정공급관계비	10,174	9,924	-250	-2.5
기타 경비	61,098	61,904	806	1.3
예비비	3,500	3,500	-	-
지방교부세교부금	155,671	155,150	-521	-0.3
합 계	974,547	977,128	2,58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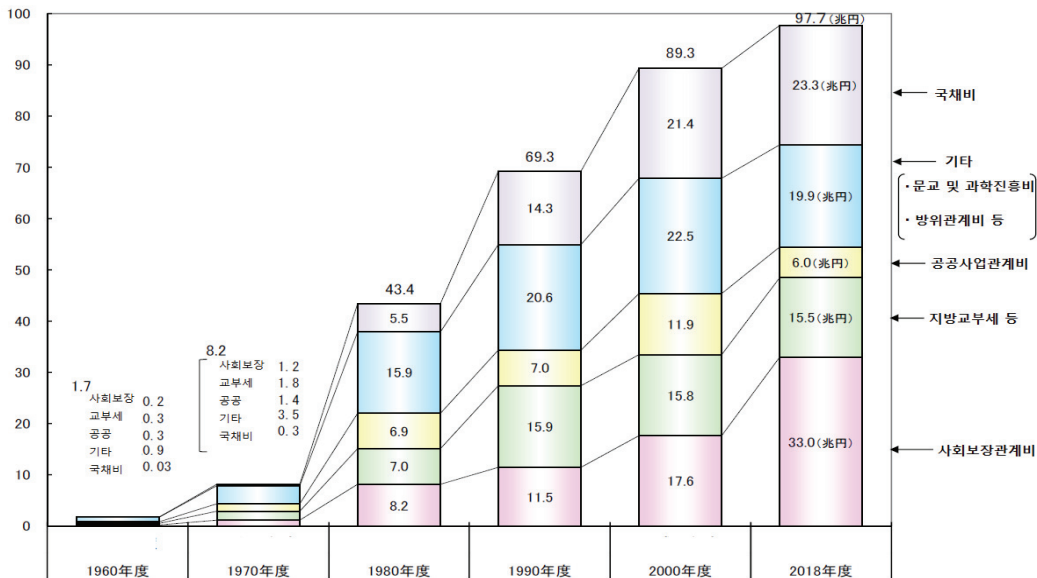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 2) 과거 군인 등이 공무를 위해 사망한 경우, 공무 중 상해 및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상당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대해, 당사자와 유족의 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상을 기본으로 하는 연금제도(恩給)관련 비용을 의미. 공무원 연금제도는 1955년 구 공제연금으로 전환되어 연금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구 공제연금 출범 이전 퇴직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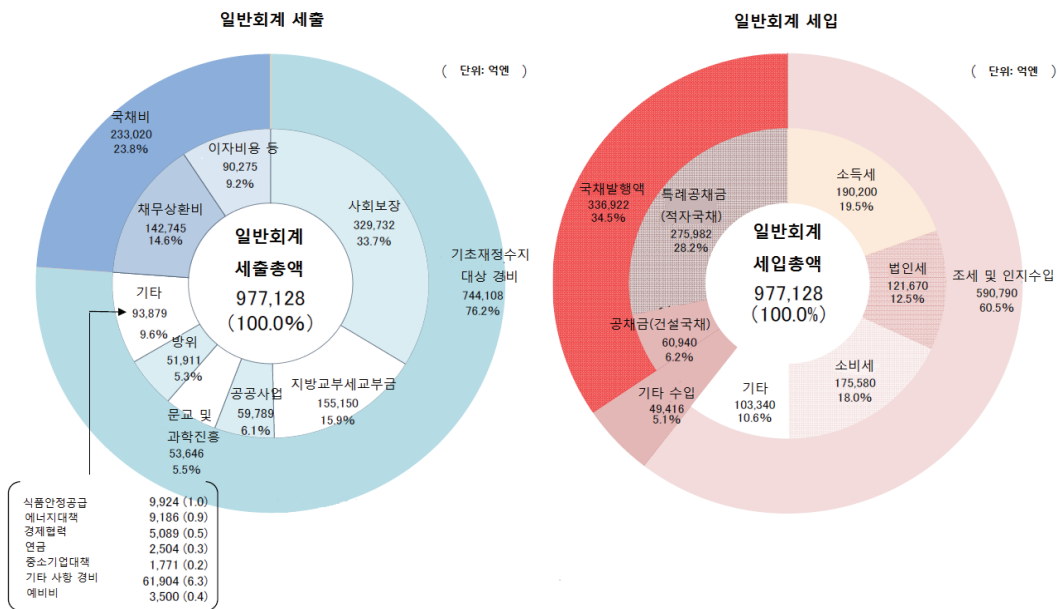
[그림 1-1] 일반회계세출 주요경비 추이

(단위: 조원)



주: 2000년도까지는 결산, 2018년도는 예산안  
 자료: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12.22.

[그림 1-2]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의 구성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참고 I-1〉 FY2017 추경예산

- 일본정부는 건설공채 추가발행 등을 재원으로, 2.7조엔 규모의 추가세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2017.12.22.)<sup>36)</sup>
  - (생산성 혁명·인재육성 혁명) 생산성 혁명 관련 정책을 위해 3,931억엔, 인재육성 혁명 관련 정책을 위해 891억엔 등 총 4,822억엔 편성
  - (재해복구 등·방재·감재 사업) 재해복구 등 정책에 3,436억엔, 방재·감재 사업 관련 정책에 9,131억엔 등 총 1조 2,567억엔 편성
  - (종합적인 TPP<sup>37)</sup> 등 관련 정책 실현) 농업농촌 정비사업 984억엔, 농산물 산지 지원 사업 447억엔, 축산 클러스터 사업 575억엔 등 총 3,465억엔 편성
  - (기타 긴급한 과제 등에 대응) 국민생활 안전·안심 확보 관련 정책에 3,064억엔, 국제기구출연금 등 기타 정책에 3,154억엔 등 총 6,219억엔 편성

〈FY2017 일반회계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 억엔)

세 출		세 입	
1. 추가 세출	27,073	1. 공채금(건설국채)	11,848
(1) 생산성 혁명·인재육성 혁명	4,822	2. 세외수입	956
(2) 재해복구 등·방재·감재 사업	12,567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3,743
(3)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실현	3,465		
(4) 기타 긴급한 과제 등에 대응	6,219		
2.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로 편입 (전년도 잉여금의 1/2) <sup>1)</sup>	1,891		
3. 기존경비 감액	-12,416		
(1) 국채비	-10,098		
(2) 기타	-2,318		
합 계	16,548	합 계	16,548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재정법 제 6조 1항에 따라 잉여금의 1/2 이상의 금액을 발생한 연도의 내후년도까지 국채정리기금에 편입

자료: 재무성, 「平成 29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 (第1号) フレーム」, 2017.12.22.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제성장

#### □ 2018년 예산안의 주요정책

- 2018년도 예산에서는 지금까지의 세출개혁 노력을 강화하면서, ‘인재육성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비롯한 현재의 중요 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
- (인재육성 혁명) 백세인생시대를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세대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
  - － 보육시설 확대
    -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sup>38)</sup>에 근거하여 ‘보육 안심 플랜’을 2년 앞당겨 달성(2020년까지 + 32만명)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11만명을 추가 수용(소요 예산 + 1,152억엔, 소요예산 중 사업주 각출금 993억엔)
      - \* 보육소 등 시설정비 : 2017년도 추경 808억엔, 2018년도 예산(당초) 888억엔
  - － 보육교사 및 개호(간병) 인력 처우개선
    - 인사원(人事院) 권고에 따라 보육교사 임금 인상(+1.1%),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 따라 보육교사 임금을 2019년 4월부터 추가 1%(월 3,000엔) 인상하고 2019년 10월부터 약 1,000억엔을 투자하여 개호(간병)인력의 처우를 개선
  - － 유아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 따라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2019년 4월부터 일부 실시하고 2020년 4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데 330억엔 지원(새로운 자녀·육아 지원제도<sup>39)</sup> 전환분 포함)

36) 재무성, 「平成 29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 2017.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hosei1222.htm](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hosei1222.htm)  
자세한 내용은 2018년 1월 제1호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37)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38) 내각부, 「新しい経済政策パッケージについて」  
[http://www5.cao.go.jp/keizai1/package/20171208\\_package.pdf](http://www5.cao.go.jp/keizai1/package/20171208_package.pdf)  
2017년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조

39) 새로운 자녀·육아지원제도(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移行分) : 유아기의 교육 및 보육, 지역 육아 지원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제도로 2015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 주요내용은 인정보육원(교육·보육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지원,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등을 통한 일·육아 양립 지원 사업 등 시행.

- 급부형 장학금 확충
  - 상환 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에 대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주민세비과세 세대 중 사립대학의 자택외 통학자 한정’에서 ‘주민세비과세 세대’로 대상을 확대(105억엔, 2017년도 0.3만명→2018년도 2.3만명)
  - 무이자 장학금에 대해 2017년도에 이어 저소득 세대의 성적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958억엔, 대상자 4.4만명 확대)
  -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 따라 저소득층 고등교육 무상화를 2020년 4월부터 시행
- (생산성 혁명)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디플레이션의 탈출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지역의 핵심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인재 투자 촉진
    - 지역 핵심기업 설비투자 촉진(162억엔),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조치 확충(21억엔)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 시행
  -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세제상 조치 실시
    - 충분한 임금인상과 설비투자를 시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승계세제의 근본적인 확충, 자사 주식을 이용한 구조조정(M&A)에 대한 과세이연 등 세제조치 시행
  - 산학관(産學官) 연계 연구개발 등을 지원
    - Society5.0<sup>40)</sup> 실현을 위해 고효율·고속처리 AI 칩의 산학관 연계 연구개발(100억엔), 양자(量子)컴퓨터 등 빛·양자기술 연구개발(22억엔), 나노기술·재료분야의 오픈플랫폼 형성(19억엔) 등, 이노베이션 촉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중점화
    - 3개 대도시권 순환도로 등 정비 가속(2,283억엔), LNG 병커링 거점 형성(7억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해 인프라 정비 중점화를 추진

40) 사이버공간(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상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결하는 인간 중심 사회. 수렵 사회(Society 1.0) 농경 사회(Society 2.0), 산업 사회(Society 3.0), 정보 사회(Society 4.0)에 이은 새로운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 5 기 과학 기술 기본 계획에서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으로 처음 제창.

## □ 2018년도 예산의 각 세출분야별 특징

### ○ 사회보장

- 진료보수개정: 본체(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의 공정가격) +0.55%(+588억엔), 약가 -1.36%(-1,456억엔), 재료가격 -0.09%(-99억엔)
-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310억엔) 및 대형문전(門前)약국 등의 조제보수 적정화(-56억엔) 등 제도개혁 실시
- 개호(간병)보수개정: +0.54%(137억엔),
- 장애복지서비스 등 보수 개정: +0.47(+57억엔)
- 공공부조 기준 재검토 및 의료보조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의 대학 등 진학 시 일시금 지급을 시행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자녀 학습 지원 등을 강화

### ○ 교육·문화

- 새로운 학습지도요령<sup>41)</sup>의 원활한 시행 및 학교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소학교 영어 전문 교원 등 학교의 지도·사무체제를 강화
- 문화예술번영을 위해 문화청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면서, 문화자원 활용 및 투자 확대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경제 전략<sup>42)</sup> 등을 추진

### ○ 공공사업

- 공공사업관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5조 9,789억엔)하고, 공공사업관계비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호우·태풍 재해 등을 감안한 방재·감재 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

### ○ 농업

- 쌀 직접지불교부금 폐지에 맞추어 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 활용 교부금과 농업·농촌 정비 사업을 증액하고 수입보험을 창설

41)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자질·능력을 확실하게 육성하고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을 중시,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식 이해를 향상시키고 확실한 학력을 육성, 도덕교육 충실, 체험활동 중시, 체육 및 건강 지도 충실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육성을 기본으로 함. 주요 내용은 언어능력 육성, 이과교육 충실, 전통 및 문화에 대한 교육 충실, 도덕교육 충실, 체험 활동 충실, 외국어 교육 충실 등

42) 문화와 산업·관광 다른 분야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 문화 예술의 보존·계승, 새로운 창조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재투자를 통해 자립적·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매커니즘 형성을 목적으로 책정.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활용, 문화창조 활동 추진, 국제적 지위 향상, 주변지역으로의 파급, 새로운 수요·부가가치 창출, 문화경제전략 추진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19년 수출 1조엔' 목표를 위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의 전략적 지원, 가공시설 정비 및 목재 고부가가치화 등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
- 외교·방위
  - 외교체제 실시를 강화하고 미일·러일관계 강화 및 인도태평양전략<sup>43)</sup>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전략적 외교를 지원, ODA도 일반회계예산 규모 및 사업 수 모두 증가
  - 중기방위관계비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전년 예산 대비 0.8% 증액하고, 이지스 아쇼아(2기분)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등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투자 추진
- 경찰·해상보안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테러 미연방지 등을 위한 보안항상 기자재 정비를 추진하고, 국경 주변 낙도 등 경비용 대형 헬리콥터(2대)를 조치
  - 「해상보안체제강화에 관한 방침」에 의거하여 2017년도 추경예산과 함께 센카쿠(尖閣) 대응 대형 순시선을 중심으로 체제 강화를 지속
- 관광
  - 2020년도 방일외국인 여행자 수 4000만명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 재원을 활용하여 얼굴인증 게이트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CIQ체제(출입국관리, 세관) 정비,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마케팅 도입, 문화재 및 국립공원 등에 다국어해설 정비 등을 추진
- 지역 창출
  - 첨단과학 및 관광·농업 등 지방대학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부금을 창설하고, 지방의 자주적이고 선구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지역창출추진교부금을 계속해서 확보
- 부흥
  - 부흥 단계에 따라 생업의 재개 등 세심한 지원과 함께 부흥거점정비 및 루머로 인한 피해 대책 등 후쿠시마의 부흥을 추진

43)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두 개의 대양(태평양, 인도양)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교정책. 2018년 예산안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적·물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화를 추진.

○ 지방재정

- 지방재정에 대해 세출특별기준 폐지에 의한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지방소비세 청산 기준 재검토 등에 의해 국가(중앙)·지방을 통한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 지방 일반재원총액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

## 나. 재정건전화

### □ 「개혁공정표」(2017개정판)의 개요

- 「개혁공정표」에서는 「경제·재정재생계획」 기간(2016~2020년도)의 개혁 방향성과 검토·실시 시기 등을 명확화
- 사회보장
  - 국민부담 경감 등의 관점에서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신약개발 등 가산의 근본적 재검토, 장기등재품목의 약가 재검토 등)을 착실하게 실시
  - 2018년도 개호(간병)보수개정에 대해,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방문개호(간병)를 실시하는 경우 인원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보수 설정 및 통원치료 등 기타 급부의 적정화 시행
  - 2017년도 공공부조 기준 검증에 맞추어 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공공부조 기준 재검토, 후발의약품 사용 원칙화와 같은 의료부조 적정화 추진 등)를 시행
  -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시 '선택요양'<sup>44)</sup>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내년 말까지 주치의 외 의사에게 진료 시 정액 부담 도입을 포함한 외래진료 시 정액부담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검토
- 사회자본 정비 등
  - 2018년도 예산에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하수도의 공공적인 역할·성격을 감안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보급 해소 및 빗물대책 중점화를 도모
  - 신기술·신공법 활용 등 건설생산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의한 각종 기술의 최적화, 사회구현모델 검토 및 검증 등을 촉진

44) 특별한 병실의 제공 등 피보험자의 선택과 관련된 요양을 의미. 선택요양의 경우 요양 전체의 비용 중 기초적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며, 특별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자기 부담. 선택요양의 종류로는 특별 요양환경(차액추가 침대), 치과의 합금, 금속의치, 예약진료, 시간외진료, 대형병원 초진 및 재진, 소아 응치 지도관리, 180일 이상 입원, 제한횟수 초과 의료행위 등이 있음.

- 지방행정 및 재정 개혁
  - 지방교부세의 톨러너 방식<sup>45)</sup>에 대해 창구업무의 위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2019년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검토
  - 지방공공단체 기금에 대한 사고방식, 증감의 이유, 향후 방침을 포함한 각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에 관한 공표내용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 가시화를 촉진

〈참고 I-2〉 2018년도 진료보수·약가 등 개정 및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 1) 진료보수본체(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의 공정가격)
  - + 0.55% (국비 + 588억엔)
  - 각과별 개정률 : 의과 +0.63%/치과 +0.69%/조제 +0.19%
  - \* 응급환자 관련 입원기본료 평가체계 재검토, 장기요양에 관한 입원기본료 평가체계 재검토 등 기능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시행
- 2) 약가 등 개정
  - ① 약가 -1.36% (국비 -1,456억엔)
    - \* 약가제도개혁(3)참고) 효과를 포함한 영향은 -1.65%
  - ② 재료 -0.09% (국비 -99억엔)
- 3)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국비 -310억엔)
  - ①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신약에 대해 시장시세에 따른 약가 인하를 유예하는 ‘신약개발·적응외약<sup>46)</sup> 해소 등 촉진 가산’에 대해, 시장시세와의 괴리율이 전체 등재 품목의 가중평균괴리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대상품목을 의약품 자체의 혁신성·유용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
  - ② 장기등재품목에 대한 의존에서 높은 신약개발 능력을 가진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후발의약품 출시 후 10년이 지난 장기등재품목의 약가에 대해 2018년도 이후 후발의약품 약가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 ③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시범적 실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가격 조정
- 4) 대형문전약국에 대한 평가 적정화 (국비 -56억엔)

45) 지방교부세의 톨러너 방식은 교부세(정확히 말하면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단위비용에 대해 합리화(민간수탁 등)가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수준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

46) 일본 및 해외에서 승인·판매 되고 있지만, 적응증(어떠한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

○ 문교·과학기술

- 생애주기별 교육정책 전체의 PDCA 사이클 구축을 추진, 대학교육 질 및 성과의 가시화 등 대학개혁을 촉진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관민(官民)투자확대 이니셔티브를 구체화,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sup>47)</sup>에 대한 중점적인 시행 및 중복을 배제한 연구개발의 촉진

□ 2018년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이클 반영<sup>48)</sup>

○ 국회 의결·결산 검사 보고 등 반영

- 결산에 관한 국회의 의결에 대해 심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반영
  - 예) 정부공통플랫폼 운영경비 삭감 (반영금액 : -9억엔)
- 회계검사원 지적에 대해 개별 사무·사업별 필요성 및 효율성을 원점 재검토
  - 예) 사립대학 등 개혁 종합지원 사업에 대해 과다교부 금액을 국고에 납부,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 심사·확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정학교 수를 수정하는 등 중점 배분을 실시 (반영금액: 세입 0.5억엔, 세출 -45억엔, 총 45.5억엔)
- 과다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예산의 내용 등을 엄격하게 재검토
  - 예) 보육대책사업경비보조금에 대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바탕으로 시설 수 재검토 시행 등 적절하게 반영 (반영금액 : -177억엔)

○ 예산집행조사의 반영 (2018년도 예산 반영금액 : -260억엔)

- 2017년도 예산집행조사에서는 조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2건의 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등의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고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
  - 예) LED조명도입 촉진사업 중 지역에서의 LED조명도입 촉진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조사의 지적을 바탕으로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 후 2017년도를 끝으로 폐지를 결정 (환경성, 반영금액: -11억엔)

나 증상)이 상이하여 일본에서는 일부 적용증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을 의미

47)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SIP) : 부처 및 기존 분야의 테두리를 넘어선 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에서 새롭게 창설하는 프로그램

48) 재무성, 「予算編成におけるPDCAサイクルの取組み(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8.1.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8/seifuan30/27.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8/seifuan30/27.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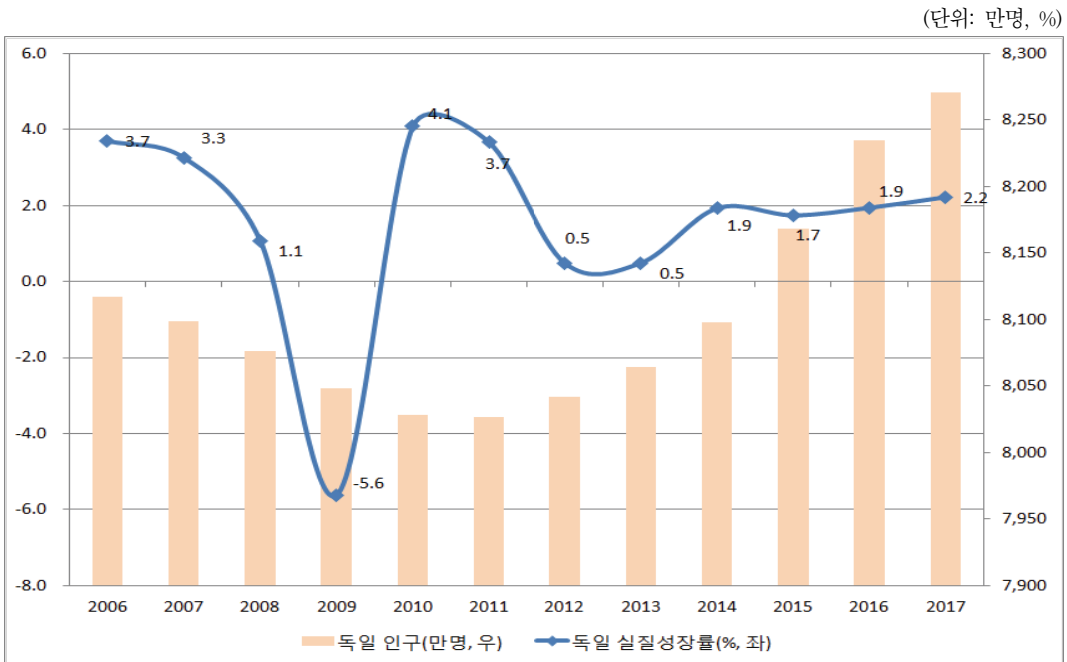
- 정책평가 결과의 반영 (2018년도 예산 반영금액 : -783억엔)
  - 각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정책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개별 사무사업의 효율성 검증을 시행하는 등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
    - 예) 연료전지 이용확대를 위한 에네팜(ene-farm, 가정용 연료전지) 도입비용 보조금에 대해 가격 절감 실적 및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조정 (경제산업성, 반영금액 : -17억엔)



## II. 독일

- FY2018: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FY2018 예산편성 일지
  - (2017. 3.15)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 (2017. 6.28) FY2018 예산안 및 FY2017-21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출처
  - 재무부: *Hausaltsgesetz 2018*, 2016. 7.  
*Finanzplan des Bundes 2017 bis 2021*, 2016. 7.  
*Finanzbericht 2018*, 2016. 8.
  - 연방은행: *Monatsbericht Dezember 2017*, 2016. 12
- 환율: 1유로 = 약 1,276.39원(2017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16년 경상GDP 4조 1,939억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17년 기준 84.3%(2016년 한국은 77.7%)
- 인구: 약 8,271만명(2017년 기준)

□ 실질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7. 6. 28.	연방재무부, FY2018 예산안 및 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2017. 7. 13.	연방재무부, FY2017-2021 중기재정전망(Mittelfristige Finanzprojektion) 안정화위원회에 제출	
2017. 8. 23.	연방재무부, 보조금 보고서(Subventionsbericht) 발표	
2017. 8. 24.	통계청, “2016년 공공부조 지출 4.5% 증가” 발표	
2017. 10. 11.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발표	
2017. 11. 9.	연방재무부, 제152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	
2017. 12. 11.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es), 제16차 회의 개최	
2017. 12. 15.	연방은행, 2018~2019년 경제전망 발표	
2018. 1. 12.	재무부, FY2017 잠정결산 발표	
2018. 1. 31.	경제에너지부, 2018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8) 발표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18년 실질GDP 성장률 2.5%, 실업률은 5.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각각 집계됨
- (재정전망) 독일은 긍정적인 경제추세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 지속될 전망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18년 63.25%, '19년 60.5%로 전망

## □ 예산기조

- 교육 및 연구, 안보,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재정수입) FY2018년 연방정부의 총재정수입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 유로 전망
- (재정지출) FY2018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 유로로 편성

## □ 주요 재정정책

- (교육·연구) 첨단기술발전, 응용과학연구, 우수대학육성,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연구 예산은 '16년 이후 GDP 대비 3%를 차지함
- (재정건전화) '17년 안정화 프로그램에서는 통화정책, 난민, 재정관리, 교육·인프라 등에 대한 내용 제시하였고, 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동독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언급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2017년 12월 연방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18년 실질GDP 성장률 2.5%, 실업률은 5.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각각 집계됨
  - (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17년 2.6%, '18년 2.5%, '19년 1.7%로 전망
    - － 세계 경제 호황으로 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노동시장의 호황으로 인한 민간소비 및 주택투자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 연방은행은 현재 독일의 강건한 경제성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했다고 전망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제약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속도는 중기적으로 점차 더딜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전망
  - (재정전망) 경제호황 및 이차지출 하락으로 '18년 재정수지 흑자는 GDP 대비 1%로 전망
    - －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재정확대로 인해 향후 예산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위험요인) 유가상승,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세계보호무역주의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

〈표 II-1〉 경제전망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실질GDP 성장률	1.9	2.6	2.5	1.7
실업률	6.1	5.7	5.3	5.1
소비자물가 상승률	0.4	1.7	1.6	1.7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17. 12. 14.

〈참고 II-1〉 2018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8)<sup>49)</sup>

- (배경) 연방정부는 1967년 제정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sup>50)</sup>에 따라 동 보고서를 매년 하원과 상원에 제출
- (경제전망) '1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2.4%, 실업률은 고용자 수의 증가(49만명)로 '17년보다 0.4%p 낮은 5.3%로 이는 통일독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
- (정책방향)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 세계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장기적 과제에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에 중점
  - 또한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민간투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창업 투자펀드III(High-Tech GründerfondsIII)<sup>51)</sup> 신설

〈표 II-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전망)
실질GDP 성장률	1.9	2.2	2.4
실업률	6.1	5.7	5.3

자료: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8*.

49) 에너지경제부, 2017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7), 2017.01.25.

[https://www.bmw.de/Redaktion/EN/Publikationen/annual-economic-report-2017.pdf?\\_\\_blob=publicationFile&v=7](https://www.bmw.de/Redaktion/EN/Publikationen/annual-economic-report-2017.pdf?__blob=publicationFile&v=7)

50) StWG;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51) 첨단기술창업 투자펀드(HTFG): 독일 최대 창업투자 펀드로 2005년 설립 후 현재까지 약 460개 기업에 자금투자 및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며 펀드규모는 2017년 9월까지 약 3억 1천만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BMWi, 2017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 나. 재정전망

- '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긍정적인 경제추세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낙관적인 재정 상황 지속될 전망
  - (재정지출) '18년 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3,375억유로이며, '21년에는 3,568억 유로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금번 예산안은 연구·인프라, 안보에 중점
  - (재정수입) '18년 재정수입은 3,375억유로(균형재정 유지)이며 '21년까지 점진적인 세수증액을 통해 3,568억유로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
  - (구조적 재정수지) 재정균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EU의 안전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2020년까지 GDP 대비 60% 이내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 '18년 예산안에서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8년 63.25%, '19년 60.5%로 전망

〈표 II-3〉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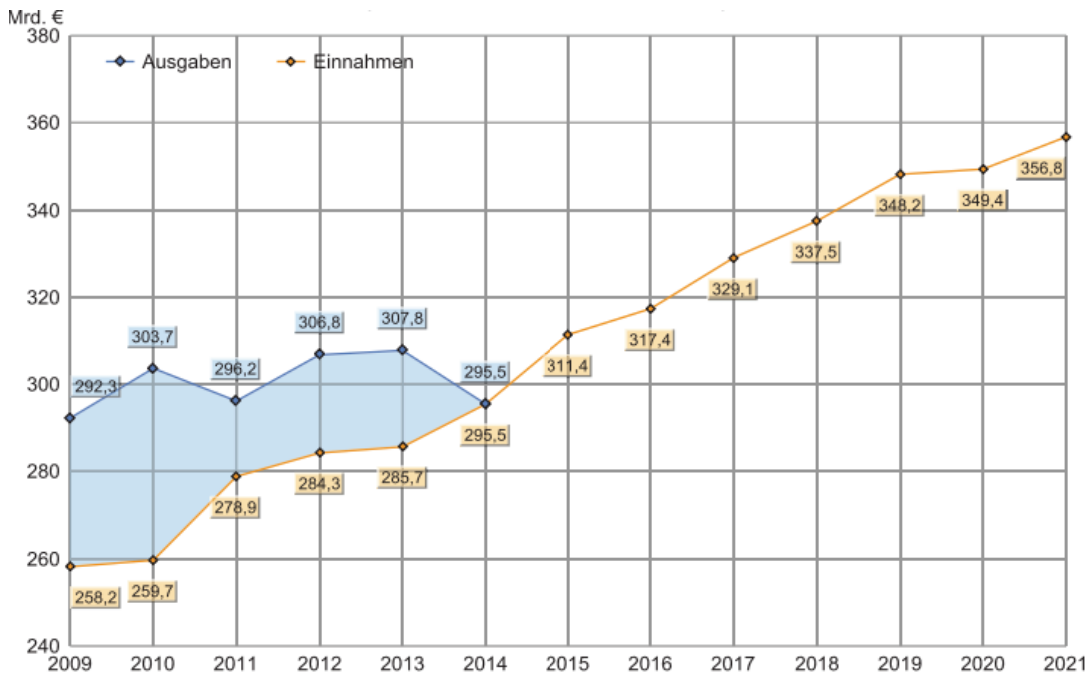
	2017	2018 (정부안)	중기재정계획		
			2019	2020	2021
재정지출	3,291	3,375	3,482	3,494	3,568
전년 대비 증감률(%)	3.8	2.6	3.2	0.3	2.1
재정수입	3,291	3,375	3,482	3,494	3,568
조세수입	3,010	3,088	3,218	3,271	3,416
세외수입	281	287	264	223	152
신규차입	0	0	0	0	0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17 und Finanzplan bis 2021*, 2017, 7.

## 2 예산기조

- 교육 및 연구, 안보,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성장) 금년 교통·인프라에 약 142억유로, 교육 및 연구에 176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재정건전화) '14년에 달성한 재정균형은 '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 채무는 '17년 GDP 대비 66%에 도달하였고 안정 및 성장협약에 따라 '20년 50%대로 진입할 예정
  - (난민지원) 비상사태 예방, 지방재정지원, 사회통합 등 난민 관련 지원에 214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그림 II-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주: Ausgaben(지출), Einnahmen(수익)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2018, p. 15.

〈참고 II-2〉 FY2017 잠정결산

□ 재무부, FY2017 잠정결산 발표(2018.1.12.)<sup>52)</sup>

- (재정지출) 2017년 재정지출은 3,310억 유로로 기존 지출목표 대비 19억유로 상회
- (재정수입) 조세수입이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3,310억유로 기록, 이는 EU자체 수입이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로 목표치 대비 83억유로 상회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적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 상<sup>53)</sup> 나타나 있는 내용을 만족하는 범위

〈표 II-4〉 FY2017 잠정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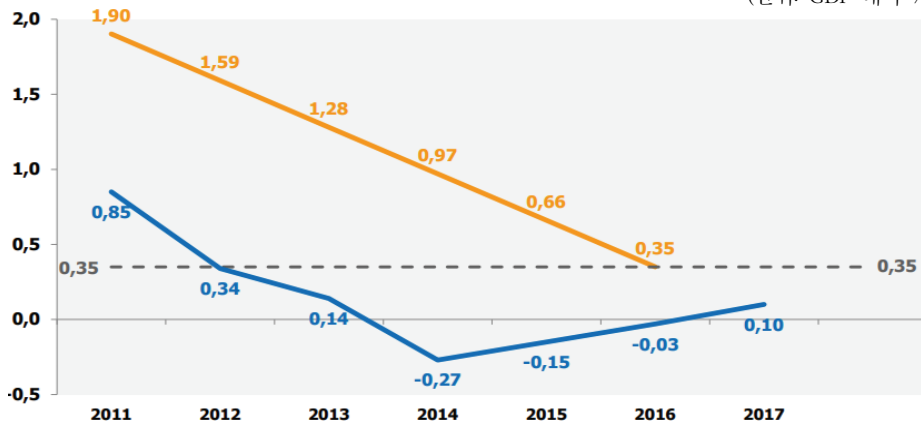
(단위: 억유로)

	2017(목표)	2017(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291	3,310	+19
재정수입	3,297	3,310	+19
조세수입	3,010	3,094	+83
세외수입	213	217	+0,3
예비비	67		-67
신규차입	-	-	-

자료: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1.18.

〈그림 II-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 2010년 여름에 설정된 적자감축 목표
- - 채무제한법 상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2016년부터 GDP 대비 0.35% 이하 달성)
- 2014~16: 흑자, 2017: 잠정적자

자료: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1.18

### 3 예산안

#### 가. 재정수입

- '18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유로 편성
  - (조세수입)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하여 '18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0.26% 증가한 3,088억유로 규모임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년 대비 35.07% 증가한 285억유로 규모임

〈표 II-5〉 항목별 재정수입

(단위: 억유로, %)

	2017 (A)	2018 정부안 (B)	증감률 [(B-A)/A]
조세수입	3,080	3,088	0.26
소득세 <sup>1)</sup>	1,070	1,111	3.83
소득세·법인세 <sup>2)</sup>	261	280	7.28
부가가치세	1,130	1,163	2.92
수입부가가치세	19	20	5.26
담배세	142	141	-0.70
코냑세	21	21	0.00
에너지세	318	317	-0.31
전기세	66	66	0.00
기타연방세	53	-29	-154.72
세외수입	211	285	35.07
재정수입	3,291	3,375	2.55

주: 1) 해당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분과 연말정산분을 의미

2)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분과 이자원천징수분을 의미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2017.8, pp.71-72.

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8.1 No.1」, 2018.1

53)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161.)

## 나. 재정지출

- FY2018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21년까지의 재정계획에서는 내무, 외무, 개발협력에 중점을 둠
- (노동사회부)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과 구직자 기초보장이 각각 26억, 6억유로 증액되어 전년 대비 2.4% 증액된 1,409억유로로 편성
  - (내무부) 연방경찰(Bundespolizei) 및 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의 지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92억유로 편성
  - (경제에너지부) 디지털 어젠다 2025(Digitalen Strategie 2025)<sup>54)</sup> 초소형 전자공학 분야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D 투자 강화, 스타트업 지원 등에 초점, 전년 대비 3.3% 증액된 79.8억유로 편성
  - (국방부) 군수장비 유지보수 및 국방인원 보충을 위해 전년 대비 4% 증액된 385억 유로로 편성하였고 '21년 424억유로로 증액할 계획
  - (교육연구부)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sup>55)</sup>에 22억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전년 대비 0.4% 감액된 176억유로 편성, 이는 2005년 대비 27% 증액된 수치임
  - (경제협력개발부)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87억유로 편성, 이는 '15년 대비 35% 상승한 수준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아동양육수당(64억유로), 아동복지(4,500만유로)를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0.6%(0.6억유로) 증액된 96억유로 배정

54) 디지털 어젠다: 독일정부는 2014년에 도입된 디지털 어젠다 프로그램은 독일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함(BMVI, 2016)

55) 고등교육협약 2020(Hochschulpakt 2020):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수요에 맞춰 학습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이며, 2015~2020년간 1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연방재무부, 2018 & 박동,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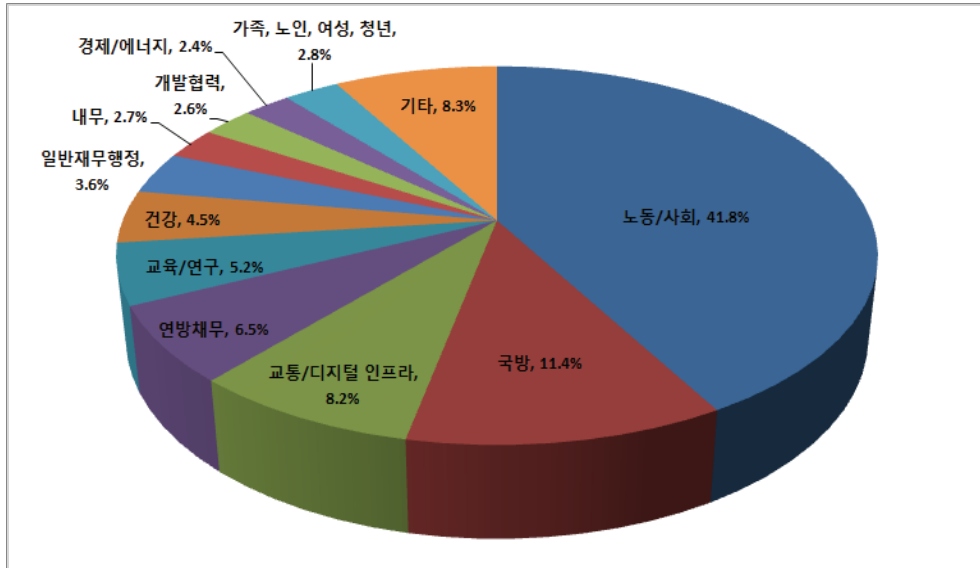
〈표 II-6〉 부문별 재정지출

(단위: 천유로, %)

구 분	2017 (A)	2018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36,535	39,456	2,921	8.00
연방하원	870,237	884,431	14,194	1.63
연방상원	28,494	30,444	1,950	6.84
총리실	2,798,010	2,914,180	116,170	4.15
외무부	5,232,408	5,023,465	-208,943	-3.99
내무부	8,977,588	9,223,613	246,025	2.74
법무부	838,622	768,561	-70,061	-8.35
재무부	6,193,961	6,331,800	137,839	2.23
경제에너지부	7,734,979	7,986,835	251,856	3.26
식품농업부	6,002,552	5,807,144	-195,408	-3.26
노동사회부	137,582,419	140,939,729	3,357,310	2.44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27,911,432	27,826,852	-84,580	-0.3
국방부	37,004,839	38,492,845	-84,580	4.02
보건부	15,159,227	15,174,627	15,400	0.1
환경부	5,621,259	5,864,195	242,936	4.32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9,523,221	9,584,787	61,566	0.65
헌법재판소	31,564	30,904	-660	-2.09
회계감사원	150,927	152,966	2,039	1.35
자료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15,395	17,773	2,378	15.45
경제협력개발부	8,541,040	8,700,000	158,960	1.86
교육연구부	17,649,867	17,583,415	-66,452	-0.38
연방채무	19,991,040	21,920,425	1,929,385	9.65
일반조세행정	11,204,384	12,201,553	997,169	8.9
재정지출	329,100,000	337,500,000	8,400,000	2.55

자료: 연방재무부, *Hausaltsgesetz 2018*, 2017, 8, p. 28.

[그림 II-3] 2018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2017.8, p. 21.

<표 II-7> 2016-2021 분야별 주요 연방지출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보장	159,964	169,813	173,107	177,184	181,614	185,816
국방	29,530	31,320	32,840	34,243	35,527	36,669
영양·농업·건강	1019	1467	1295	1240	1243	1243
경제·에너지	5,213	6,991	6,463	6,896	6,614	5,529
교통	23,562	26,068	26,237	26,323	24,489	25,112
건설	2,203	3,058	3,008	2,879	1,282	1,193
연구·교육·문화	2,244	2,582	2,647	2,596	2,533	2,502
환경보호	1,278	1,455	1,731	1,722	1,754	1,768
스포츠	168	168	165	164	167	164
내무·이민	5,548	6,333	6,563	6,440	6,459	6,438
경제협력개발	7,732	8,501	8,648	8,634	8,598	8,555
일반재무	26,485	27,602	29,905	29,397	29,788	30,802
기금	4,309	892	2,950	3,357	3,202	3,202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2017.8, pp. 21-23.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 (교육·연구) 첨단기술발전, 응용과학연구, 우수대학육성,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연구 예산은 '16년 이후 GDP 대비 3%를 차지함<sup>56)57)</sup>
  - (첨단기술전략) 독일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Strategie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예산은 '13년 대비 25% 증액되었으며 디지털화, 초소형전자공학, 에너지, 보건 연구 등에 초점
    - (초소형 전자공학) '25년까지 유럽의 전자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3년 5월 초소형 및 나노전자 유럽집행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독일정부는 '15~'20년 동안 17억유로의 펀드 조성
  - (응용과학 연구) 대학에 대한 응용과학 연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지식 및 기술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05년 1,050만유로로 시작된 펀드규모는 '17년 5,500만유로로 확대됨
  - (우수대학 육성정책) 우수대학육성정책(Excellence Strategy) 프로그램<sup>58)</sup> 지원을 위해 매년 5.3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직업훈련) 디지털 미디어분야 관련 직업훈련 4.0(vocational Training 4.0) 지원 확대
- (인프라 투자) '18년 연방투자지출은 364억유로이며 교통 관련 분야에 전년 대비 14억 유로 증액된 142억유로로 지출계획이며 이는 '14년 대비 42억유로 증액
  - (지방투자촉진) 지방투자촉진기금은 전년 대비 두 배 상승한 70억유로로 '22년까지 지방 교육인프라의 현대화, 병원, 도시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

56) 연방교육연구부, 2018년 교육연구부예산 설명자료

<https://www.bmbf.de/de/zukunftsinvestitionen-in-bildung-und-forschung-4408.html>

57) 연방경제에너지부,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7.

58) 우수대학육성정책(Excellence Strategy): 독일은 '18년 대학의 첨단연구 지원을 위해 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연간 5.3억유로(연방정부 75%, 지방정부 25% 지원)를 지출할 계획(연방교육연구부, 2018)

- (광대역 인터넷) 독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연방정부 광대역 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
- (민간기업 위임) 연방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운영, 유지보수, 자금조달 및 용자를 관리하는 책임을 민간기업에 위임하는 법안 상정

## 나. 재정건전화

### □ 2017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7(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7)\* 채택

- \*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매년 4월 동 보고서를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제출
- (재정전망) 2012년 달성된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이 2020년까지 유지되며, 국가부채 수준도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 대비 60%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2016년 GDP 대비 0.5%의 일반정부 흑자를 달성
  - (국가채무) 2017년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05%p 감소한 66.25%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2020년에는 부채비율이 50%대에 진입할 전망
- (향후과제) 통화정책, 난민, 재정관리, 교육·인프라 등에 대한 내용 제시
  - 유럽통화정책과 금리 정상화,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언급
  -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16년 사회지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치 요구
  - 교육과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표 II-8〉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GDP	1.9	1.4	1.6	1.5	1.5	1.5
재정수지	0.8	0.5	0.25	0.25	0.5	0.5
구조적 재정수지	0.8	0.5	0.25	0.25	0.5	0.5
국가부채	68.3	66.25	64	61.75	59.75	57

자료: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7*.

####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es)\*, 제15, 16차 회의 개최<sup>59)</sup>

- \* 동 위원회는 채무제한법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10년 조직되었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통상 연 2회 개최됨
- 금번회의에서는 세계 경제환경 및 동독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언급
  - (재정) '17년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흑자는 GDP 대비 1.25%를 달성할 전망
  - (주정부 건전화 계획) 위원회는 2017~2020년까지 브레멘 및 자알란트 등 2개 주에 대한 재정 건전화계획을 재수립<sup>60)</sup>
  - (통독연대협약) 동독 재건을 위한 통독연합연대 II(Solidarpakts II)<sup>61)</sup>은 만료시점인 2020년 이후에도 인프라보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

#### 다. 에너지 정책<sup>62)</sup>

- '18년 연방정부는 34.3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기금<sup>63)</sup>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수입) 연방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12.7억유로) 및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18억유로) 지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59)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7. 6. 22, 2017.12.11.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Stabilitaetsrat/2017-06-22-15-sitzung-des-stabilitaetsrates.html](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Stabilitaetsrat/2017-06-22-15-sitzung-des-stabilitaetsrates.html)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Stabilitaetsrat/2017-12-11-16-sitzung-des-stabilitaetsrates.html](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Stabilitaetsrat/2017-12-11-16-sitzung-des-stabilitaetsrates.html)

60) 안정화위원회는 연방 및 각 주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연방·주정부에 대해 건전화계획을 수립. 4개 주(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자알란트, 브레멘)에 대한 건전화계획이 2016년까지 수립하였음. 이후 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브레멘, 자알란트 주는 향후 추가적인 재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61) 통독연대협약 I 은 동독 재건을 위해 5개 신연방주에 2004년까지 총 945억유로를 지원하였고, 2005년 체결된 통독연대협약 II는 2019년까지 총 1,560억유로를 지원하는 것임

62)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pp. 52-53

63) 2011년 이후 에너지 및 기후기금(EKF; Energie- und Klimafonds)을 통한 안전하고 환경적인 재생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표 II-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2017	2018	2019	2020	2021
<b>수입</b>	<b>32.1</b>	<b>42.1</b>	<b>42.1</b>	<b>42.7</b>	<b>42.6</b>
탄소배출권 수익금	10.2	10.5	9.2	11.2	11.0
연방정부 지원금	7.2	28.0	32.6	31.5	31.5
준비금	14.7	3.6	0.3	-	-
<b>지출</b>	<b>32.7</b>	<b>34.3</b>	<b>43.0</b>	<b>44.8</b>	<b>44.9</b>
CO <sub>2</sub> 저감 건물 보수지원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8.7	12.7	16.2	16.8	16.8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2.2	2.1	2.1	2.1	2.1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14.3	18.0	18.4	18.3	18.3
기후 변화 프로그램	3.2	3.3	3.3	3.3	3.3
에너지 집약 기업 보조	3.0	2.1	2.3	2.5	2.9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2	3.5	1.5	1.0	-
세계부족분	-1.6	-	-1.8	-1.4	-0.9
준비금전입	-	0.4	-	-	-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p. 49.

## 라. 지방재정 지원

□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 법안(Bund-Länder-Finanzbeziehungen) 법안이 '17년 6월 1일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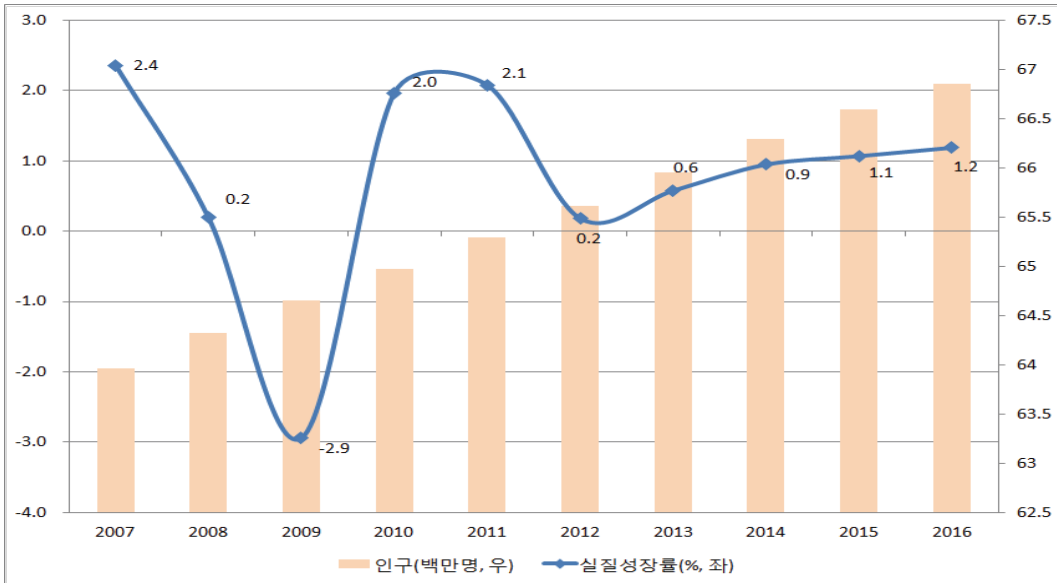
-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약 97억유로의 재정구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 － 지방정부의 책임성 및 연맹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
  - － 2020년부터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구제를 확대하고 조세행정 및 교육투자 등에 대한 통제 및 감사 등을 통해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 확립

## III. 프랑스

- FY2018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출처
  - 2018년 예산법안 (PLF 2017: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8)
  - 2018년 예산안 관련 부속서류
    - Dossier de presse-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8, chiffres clés du PLF 2018,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등
  -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 (PLPFP: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8-2022)
  - 2018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LFSS 2018: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2017년 1차 추경예산안 (PLFR1: premie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17)
  - 2017년 2차 추경예산안 (PLFR2: deuxième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17)
  
- 환율 : 1유로 = 약 1283.3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6년 경상GDP 2조 7,655억달러(우리나라 1.5배 수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6년 기준 60.5%(우리나라는 77.7%)
  
- 인구 : 약 6,685만명(2016년 기준)

□ 실질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단위: 백만명, %)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7. 4. 12.	2017-2020 안정화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발표	2017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7. 6. 23.	FY2016 결산보고서 발표	-
2017. 9. 27.	FY2018 예산법안(PLF) 및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PLPFP) 발표	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7. 9. 28.	FY2018 사회보장예산법안(PLFSS) 발표	
2017. 9. 28.	FY2016 사회보장예산 결산 발표	
2017. 11. 7.	FY2017 1~9. 예산집행결과 발표	
2017. 11. 2.	FY2017 1차 추경예산안(PLFR1) 발표	
2017. 11. 14.	FY2017 1차 추경예산안(PLFR1) 의회 최종 승인	
2017. 11. 15.	FY2017 2차 추경예산안(PLFR2) 발표	
2017. 12. 4.	FY2018 사회보장예산법안 의회 최종 승인	
2017. 12. 21.	FY2018 예산법안(PLF) 및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PLPFP), 2017. 2차 추경예산안(PLFR2) 의회 최종 승인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세계 수요의 가속화는 프랑스의 경제활동 회복에 기여하여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로 전년(2016년 1.1%)보다 회복될 전망
- (재정전망) 2018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8.9% 정도 증가한 3,863억유로이며,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6.3% 감소한 3,020억유로로 전망

## □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안의 정책우선순위는 학교교육, 국방, 연구 및 고등교육이며, 저소득층의 구매력 강화, 실업 대응, 주거정책 개혁에 주력

##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8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9억유로 감소한 3,020억유로이며, 이 중 조세 수입은 2,888억유로, 세외수입은 132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7억유로 증가한 3,863억유로로,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 주요재정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성장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세정책을 마련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위해 주택 보조금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절감 등 야심찬 지출절감 조치가 2018년에 시행될 것임
- (복지지출 관리) 2018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지출통제 노력으로 전년 대비 30억유로 이상 감소한 22억유로로 전망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세계 수요의 가속화는 프랑스의 경제활동 회복에 기여하여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로 전년(2016년 1.1%)보다 회복될 전망
  - (물가) 물가는 2017년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입어 1.0%, 2018년에는 디젤유의 세금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하여 1.1%를 기록할 전망
  - (소비) 2017년 가계소비는 1/4분기 부진한 실적의 영향을 받아 2016년(2.3%)에 비해 현저하게 둔화(1.3%)되지만, 2018년 실질임금의 상승과 정부의 다양한 세금 감면 조치로 가계구매력이 뒷받침되면서 가계소비는 1.4%로 회복될 것임
  - (기업투자) 2017년 기업투자는 4.2%(2016년 3.9%)로 매우 역동적일 것이며 2018년 기업투자(4.1%)는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대내외 수요의 역동성에 견인되어 2017년과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임
    - 2017년 4월 15일 생산적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조치 종료의 영향은 2017년 2/4분기 말에 제한적으로 나타남
  - (무역) 수출은 2017년에 글로벌 수요의 강화 및 관광산업의 정상 복귀로 전년보다 상승(2.5%)하고 2018년에는 최근 유로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수출실적이 3.9%로 가속화될 것임

〈표 III-1〉 거시경제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실질GDP 성장률	1.1	1.7	1.7
물가상승률	0.2	1.0	1.1
가계소비	2.3	1.3	1.4
기업투자 <sup>1)</sup>	3.9	4.2	4.1
수출	1.8	2.5	3.9
수입	4.2	3.6	3.6

주: 1) 건설투자 제외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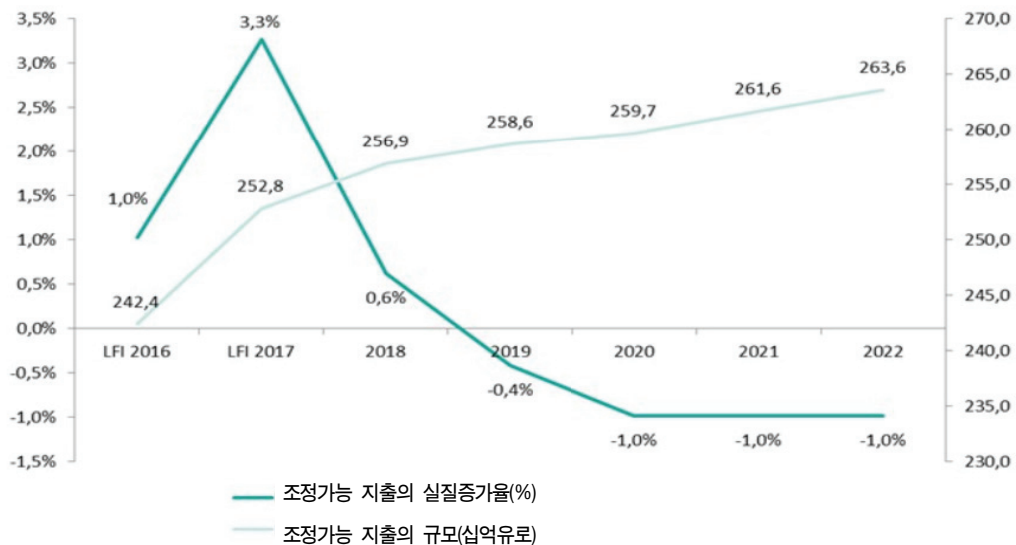
## 나. 재정전망

### 1) 세입 및 세출전망

- (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7억유로 증가한 3,863억유로로 계획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2017년 54.6%에서 2018년 53.9%로 감소하며, 이후에 하락세를 지속하다 2022년 50.9%에 도달하여 2017-2022년 동안 3%p 이상 감축할 계획
  - 지출 통제 노력은 2022년까지 중장기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며 2017-2022년 연평균 실질지출증가율은 0.4%로 2010-16년 연평균 증가율 0.8%보다 낮은 수준
  - 새로운 지출 목표 기준인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의 증가율을 2018년 0.6%, 2019년 -0.4%, 2020-2022년 -1%로 제한(〈참고 III-1〉)
    - \* 조정가능 지출은 일반 예산의 세출,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등 정부가 직접 통제가능한 지출을 의미하며 재량지출과 유사

[그림 III-1] 조정가능 지출증가율의 추이 및 전망

(단위: %, 십억유로)



자료: PLF 2018

- (재정수입) 2018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9억유로 감소한 3,020억유로이며, 이중 조세 수입은 2,888억유로, 세외수입은 132억유로로 전망
  - 세금부담을 줄임으로써 가계구매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2017년 44.7%에서 2022년 43.6%로 하락시켜 2017-2022년 동안 GDP 대비 1%p 이상 감축할 계획

〈표 III-2〉 FY2018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6 결산	2017		2018 예산법안
		본예산	수정	
재정지출(Dépense nettes)	376.2	381.6	384.8	386.3
재정수입(Recettes nettes)	300.3	306.9	303.1	302.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84.1	292.3	290.1	288.8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6.2	14.5	13.0	13.2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75.9	-74.7	-81.7	-84.3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6.8	5.4	5.2	1.4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69.1	-69.3	-76.5	-82.9

자료: PLF 2018

〈표 III-3〉 2017-2022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세부담률	44.7	44.3	43.3	43.6	43.6	43.6
재정지출	54.6	53.9	53.3	52.5	51.8	50.9
명목지출 증가율(%)	1.8	1.5	1.7	1.8	2.0	1.9
실질지출 증가율(%)	0.8	0.5	0.6	0.4	0.2	0.1

자료: PLPPF 2018-2022

## 2) 재정수지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7년 2.9%, 2018년 2.6%로 전망되어 2017년에 EU의 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하고 2009년에 시작된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가 종료될 전망
  - 구조적 재정적자는 2017년 2.2%, 2018년 2.1%, 2019년 1.8%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2년 0.8%로 재정수지 균형에 근접할 전망

〈표 III-4〉 2017-2022년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조적 재정수지	-2.2	-2.1	-1.8	-1.6	-1.2	-0.8
재정수지	-2.9	-2.6	-3.0	-1.5	-0.9	-0.2
국가채무	96.8	96.8	97.1	96.1	94.2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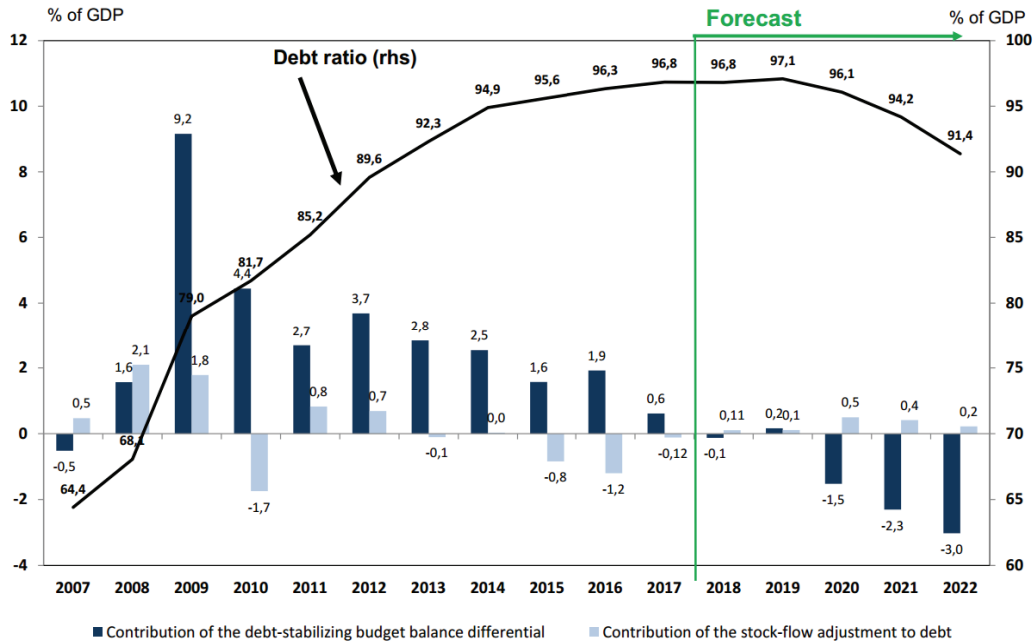
자료: PLPFP 2018-2022

## 3) 채무비율

- 향후 5년. 동안 재정지출의 3%p 이상 감축, 공공계정 균형으로 근접, 경제 회복에 의해 국가채무는 2017-18년 96.8%에서 2019년 97.1%를 정점으로 2020년 이후 감소하여 2017년-2022년 동안 약 5%p 감소할 전망
  - 2019년 국가채무 증가는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sup>64</sup>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206억유로의 지출이 발생한 것에 기인
  - 2020년부터 재정건전화 노력의 지속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하락은 새로운 위기 발생시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고 재정여력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임

64)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18년에 7%에서 6%로 감소하고 2019년에 폐지됨

[그림 III-2] 2007년 이후 채무 추이 및 전망



주: ■ =채무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수지의 적정 수준과 실제 재정수지의 차이 기여도 ①  
 ■ =채무에 대한 저량, 유량 조정의 기여도 ②  
 ①과 ②의 합은 전년 대비 채무비율 변화분

자료: Agence France Trésor, Draft Budget law 2018.

## 2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안의 정책우선순위는 학교교육, 국방, 연구 및 고등교육이며, 저소득층의 구매력 강화, 실업 대응, 주거정책 개혁에 주력
  - 정책우선순위 분야 중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에 513억유로, 국방에 342억 유로,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에 274억유로를 투입할 계획
    - (학교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교육 분야에 2018년 전년 대비 약 13억유로 예산 증액하여,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 장애학생 지원 및 학교 교육시설 강화

- (국방) 육군 인력 증원을 위한 국방 예산 86억유로 증액, 내무부 운영군(operational force)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명의 경찰 병력 추가 모집
- (R&D 및 고등교육) 청년과 미래에 투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2018년 전년 대비 약 7억유로 예산 증액, 사회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 석사과정 보조, 새로운 대학생 주택의 설립 등 학생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강화, 유럽 차원의 공동연구에 기여
- (저소득층의 구매력 강화)
  - 2016년부터 시행된 직업 수당(Prime d'activité)<sup>65)</sup>을 2018-2020년 동안 매월 80유로 인상 지급하며 이를 위해 12억유로 재정 투입
  - 장애인 수당을 2018년 860유로, 2019년 900유로 증액(전체 재정비용: 20억유로)
- (실업 대응)
  - 정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지원 고용계약을 크게 축소하고(2017년 320,000 계약, 2018년에는 200,000 계약), 청소년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에 배정된 예산을 증가시킬 것임
- (주거정책 개혁)
  - 2018년에 17억유로에 달하는 주택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사회적 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의 구조개혁 실시

### 3 예산안 내용(PLF 2018)

□ 2018년 예산법안(PLF 2018: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8)은 2017년 9월 27일에 발표되어 12월 21일 예산법(LF 2018: Loi de finance 2018)으로 통과

#### 가. 세입

- 2018년 재정수입은 2017년 수정전망 대비 36.3% 감소한 3,020억유로로 전망
- 2018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0.3%(13억유로) 감소한 2,888억유로로 전망
    - 조세수입 중 경제성장에 의한 자연증가분은 102억유로(3.5%)며, 주로 부가가치세(43억유로, +2.9%)와 소득세(29억유로, +3.9%) 증가에 기인

65)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생계 보조비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평균 수당액은 164유로

- 2018년 예산안의 새로운 조세정책에 의한 세수감소분은 68억유로며, 다음을 포함
  -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시행(-13억유로)
  - 부유세 폐지 및 부동산 재산세 신설(-32억유로)
  - 3년 동안 가구의 80%에 대한 주택세 삭감(-30억유로)
  - 디젤과 가솔린에 대한 세금 통합(9억유로)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12억유로)
  - 천연가스소비세 및 에너지제품소비세 인상(15억유로)
  - 에너지 전환법에 의해 탄소 성분의 퀘도<sup>66)</sup> 가속화(11억유로)
- 가계와 기업의 세금부담 감소 정책에 따라 2018년 약 103억유로, 2018-2022년 동안 212억유로 규모의 총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감소할 전망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2.9%, 소득세 25.2%, 법인세 8.8%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18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4%(2억유로) 증가한 132억유로로 전망

〈표 III-5〉 FY2018 세입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6 결산	2017 본예산	2017 수정	2018 예산법안
I. 재정수입	300.3	306.9	303.1	302.0
II. 조세수입	284.1	292.3	290.1	288.8
소득세	71.8	73.4	72.6	72.7
법인세	30.0	29.1	28.4	25.3
부가가치세	144.4	149.3	150.5	152.8
에너지제품소비세	15.9	10.6	10.4	13.3
기타 세입	22.0	30.0	28.2	24.6
III. 세외수입	16.2	14.5	13.0	13.2

자료: PLF 2018

66) 2014년에 에너지 제품의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국내소비세가 증가하는 탄소 성분의 퀘도 프로그램을 도입 하였으며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탄소 1톤 배출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음

〈표 1〉 에너지제품소비세의 탄소 성분 목표(유로/tCO<sub>2</sub>)

2018	2019	2020	2021	2022
44.6	55	65.4	75.8	86.2

〈표 III-6〉 2018년 주요 세제개편안

(단위: 십억유로)

주요내용	2018년 세수효과
가구의 80%에 대해 주택세 삭감	-3.0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 신설	-3.2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시행	-1.3
법인세율 33%→ 25% 인하	-1.2
급여세의 네 번째 과표구간 제거	-0.1
에너지세 인상	3.7
담뱃세 인상	0.5
2017년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CICE) 6%→ 7%로 인상	-4.0
임금에 대한 세액공제	-0.6
가구의 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1.0
총합계	-10.3

자료: PLF 2018

〈표 III-7〉 중장기 세제개편안

(단위: 십억유로)

주요내용	2018-2022년 세수효과
가계구매력 지원	-14.9
가구의 80%에 대해 주택세 삭감	-10.1
일반사회보장세(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사회보장기여금 교환(swap)	0.0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3.5
개인소득세 개별화(individualization)	-1.3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13.8
법인세율 33% → 25% 인하	-11.1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CICE)/사회보장기여금 교환(swap)	-0.2
3% 배당세 폐지	-1.9
임금의 최고한계세율 제거	-0.1
초소형기업 우대조치	-0.4
투자	-6.5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 신설	-3.2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시행	-1.9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1.4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	14.0
친환경 과세 증대	12.5
기업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과세	0.1
담뱃세 인상	1.4
총합계	-21.2

자료: Agence France Trésor, Draft Budget law 2018

## 나. 세출

- 2018년 재정지출은 3,863억유로로 2017년 수정전망 대비 38.9% 정도 증가
  -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이민 및 통합정책, 보건의료,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예비비 제외)
    - －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분야: 기후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천연자원의 보존과 영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04억유로
    - － 이민 및 통합정책 분야: 불법 이민 대응, 망명신청자 전용 주택 증가, 프랑스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국(OFPRA)과 이민 통합국(OFIG)에 대한 인력 증원, 망명시스템 최적화 등으로 전년 대비 25.5% 증가한 14억유로
    - － 보건의료 분야: 간질 치료 의약품인 Dépakine에 의한 피해자 보상비용 7,770만유로 책정, 월리스 푸투나(Wallis and Futuna)<sup>67)</sup> 보건당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4억유로
    - －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분야: 2024년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준비, 시민자원봉사 단체(Service Civique)와 지역 사회활동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한 8억유로
    - － 일반공공행정 분야: 2018년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차세대 행정구역(Préfectures nouvelle génération) 계획 시행의 마지막 해에 해당, 내무부의 다영역 지출 조정·통합 등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한 21억유로

67) 프랑스령의 해외 섬이며 남태평양에 위치

〈표 III-8〉 2018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

31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sup>2)</sup>	2017 본예산(A)	2018 예산법안(B)	B-A (%)
공공변화정책(Action et transformation publiques)	0.00	0.02	순증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6	2.86	0.00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49	2.14	-14.06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15	3.19	1.27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58	2.68	3.88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54	2.46	-3.15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8.26	16.53	-9.47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51	0.52	1.96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0.02	0.41	1950.00
문화(Culture)	2.70	2.73	1.11
국방(Défense)	32.44	34.20	5.43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37	1.38	0.73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9.44	10.39	10.06
경제(Économie)	1.64	1.63	-0.61
정부재정관리·부채 관리·국채발행 등(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sup>1)</sup>	0.55	0.58	5.45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50.01	51.29	2.56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8.12	8.13	0.12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10	1.38	25.45
미래 투자(Investissement d'avenir)	0.00	1.08	순증
법무부(Justice)	6.85	6.98	1.90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57	0.56	-1.75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02	2.02	0.00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0.99	0.99	0.0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6.69	27.40	2.66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31	6.33	0.32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44	3.66	6.40
보건의료(Santé)	1.27	1.42	11.81
치안(Sécurité)	13.10	13.30	1.53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7.64	19.20	8.84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73	0.89	21.92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5.27	15.18	-0.59
미션별 합계	234.66	241.53	

주: 1)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부담금과 채무부담을 제외

2)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자료: PLF 2018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
  - 2018년부터 부유세(L'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가 폐지되고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로 대체
    - 부동산, 사치품, 주식 등 모든 자산 합계가 130만유로 이상인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부유세(ISF)는 저축 및 투자를 저해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IFI)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이익을 얻음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IFI)는 동일한 기준(130만유로 이상), 동일한 규모 및 동일한 규칙(주거지에 대해 30% 공제)을 기준으로 함
  -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세 도입
    - 현행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자소득 62%, 배당금 44%)는 복잡성, 높은 한계 세율과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어져 프랑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
    - 2018년부터는 30% 단일세의 시행으로 자본소득(이자, 배당금) 및 양도가능 유가증권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가 간소화되고 완화될 것임
  - 대규모 투자 계획(Grand plan d'investissement, GPI) 시행
    - 대규모 투자 계획(GPI)은 570억유로 규모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추진되며 친환경적 전환(transition écologique)의 가속화, 사회 역량의 구축, 혁신에 대한 경쟁력 확보, 디지털 시대로의 발전의 4가지 목표로 구성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교통 및 지역사회 시설, 고등교육, 연구, 혁신, 공공 훈련 및 기술 정책, 생태 및 에너지 전환, 보건, 농업, 공공 행정의 현대화에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 대규모 투자 계획(GPI)에는 100억유로의 세 번째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troisième 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 200억유로의 탄소배출저감 프로그램이 포함

- 대규모 투자 계획(GPI)의 재원 조달을 위해 별도 예산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며 부처별 프로그램,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사회보장 예산에 직접 배치될 것임

□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세정책을 마련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임금 세액공제(crédit d'impôt de taxe sur les salaires, CITS)는 기업의 수익 및 고용 회복에 기여했지만 임금 지불과 세액공제 적용의 1년 시차는 그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임금 세액공제(CITS)를 2019년에 폐지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기부금 축소로 대체할 계획
  - 이 개혁은 즉각적인 세금감면(사회보장기부금은 세금의 일부)과 저임금에 대한 더 나은 타겟팅으로 이어질 것이며 고용에 더 효과적일 것임
  - 관련 산업부문은 이러한 개혁으로 14억유로의 순익을 얻을 수 있음
- 유럽연합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3% 배당세<sup>68)</sup> 폐지
  - 2018년부터 약 20억유로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이 조치는 투자자에게 프랑스 기업의 매력도를 높일 것임
- 2022년까지 법인세를 28%에서 25%로 단계적 인하
  - 법인세 인하로 2022년까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110억유로 감소

〈표 III-9〉 법인세 인하 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 이전 계획	연간 매출액 50만유로 이하 모든 기업 28%, 그 외 기업 33.33%	연간 매출액 10억유로 이하 기업 28%, 그 외 기업 33.33%	모든 기업 28%		
2. 새로운 계획	연간 매출액 50만유로 이하 모든 기업 28%, 그 외 기업 33.33%	연간 매출액 50만유로 이하 모든 기업 28%, 그 외 기업 31%	28%	26.5%	25%

자료: Dossier de presse- PLF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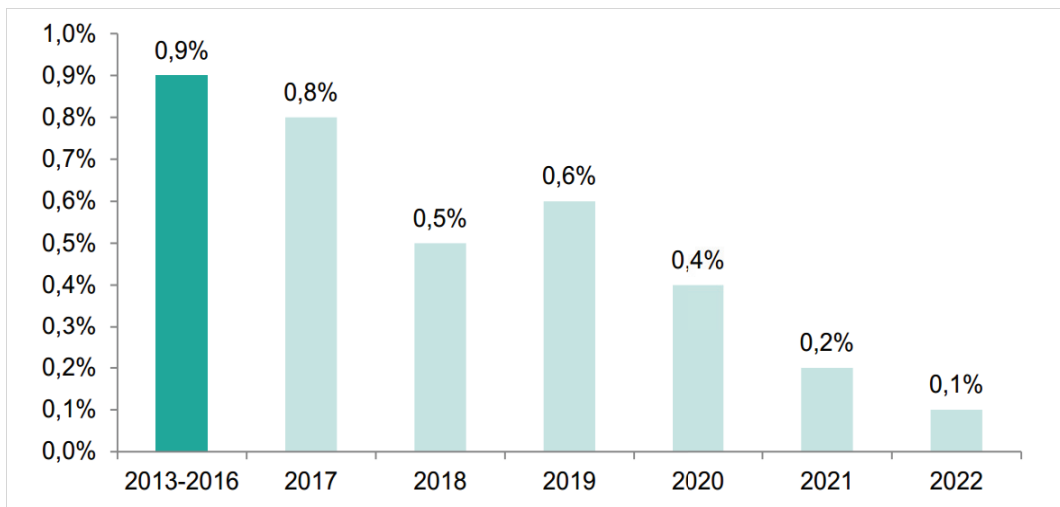
68) 프랑스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3%로 과세(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 나. 재정건전화

- 재정건전화를 위해 야심찬 지출 절감 조치가 2018년에 시행될 것임
  - 2018년 17억유로 규모의 주택 보조금 삭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의 노인 연대수당(l'allocation de solidarité)의 재평가, 사회보장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0.5%로 제한
  - 향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130억유로의 운영비용 절감
  - 2018년 재정지출은 명목기준 1.5%, 실질기준 0.5% 증가하여 장기 추세를 훨씬 하회할 것이며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전년 대비 0.7%p 감소할 것임
  - 국가의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은 2016-2017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17년에는 3.3% 증가) 2018년부터 감속을 시작하여 2018년 0.6%, 2019년 -0.4%, 2020-2022년 -1%로 지출증가 목표를 설정
  - 총정부지출 목표(ODETE)는 2017-2022년 연평균 0.6% 증가하는 것으로 제한

[그림 III-3] 실질지출증가율의 추이 및 전망

(단위: %)



출처: Dossier de presse- PLF 2018

〈참고 III-1〉 정부지출 기준

-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은 국가의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 및 총정부 지출 목표(Objectif de Dépenses Totales de l'État, ODETE)에 초점을 맞춘 정부지출 기준의 이중 시스템을 기반으로 함
  - 국가의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 기준은 중앙정부와 그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에 할당된 세출예산을 의미: 일반 예산의 세출, 할당된 자원 및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 총정부지출 목표(ODETE)는 부채 부담, 연금,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유럽연합(EU)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지출을 포함

〈표 III-10〉 정부지출 기준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7	2017 (2018년 포맷)	2018	2019	2020
부처별 지출	234.6	236.0	240.5	241.8	246.9
목적세로 총당된 지출한도	9.6	9.3	9.0	8.9	9.0
조정가능 특별회계 및 부속예산	13.3	13.3	13.3	13.8	14.1
중앙정부 예산 재조정	-5.8	-5.8	-5.8	-5.9	-5.9
2022년 공공 액션 추가 비용절감					-4.5
<b>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 기준(1)</b>	<b>251.7</b>	<b>252.8</b>	<b>256.9</b>	<b>258.6</b>	<b>259.7</b>
실질증가율			0.6%	-0.4%	-1.0%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2)	47.0	47.1	47.0	47.1	47.5
특별할당회계의 연금지출	55.7	55.7	56.5	57.8	59.0
특별할당회계의 기타지출	1.5	1.5	1.8	2.0	1.0
부채 부담	41.5	41.5	41.2	41.9	44.7
유럽연합(EU)의 부담금	18.7	18.7	20.2	23.3	24.1
미래를 위한 투자 (Investissements d'avenir)	0.0	0.0	1.1	1.1	1.9
기타지출(3)	117.5	117.5	120.8	126.1	130.7
<b>총 정부지출 목표(ODETE)(1+2+3)</b>	<b>416.2</b>	<b>417.4</b>	<b>424.7</b>	<b>431.8</b>	<b>437.8</b>
실질증가율			0.7%	0.6%	0.0%

출처: PLF 2018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8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에서 2018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지출통제 노력으로 전년 대비 30억유로 이상 감소한 22억유로로 전망
  - 2018년 사회보장예산의 하위 부문 중 의료보험(-41억유로→ -8억유로)과 가족지원금 3억유로→ 13억유로) 부문의 수지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산재보험(10억유로→ 5억유로)과 법정연금기금(13억유로→ 2억유로) 부문은 전년 대비 흑자 폭이 감소할 전망

〈표 III-11〉 사회보장부문 예산 수지 전망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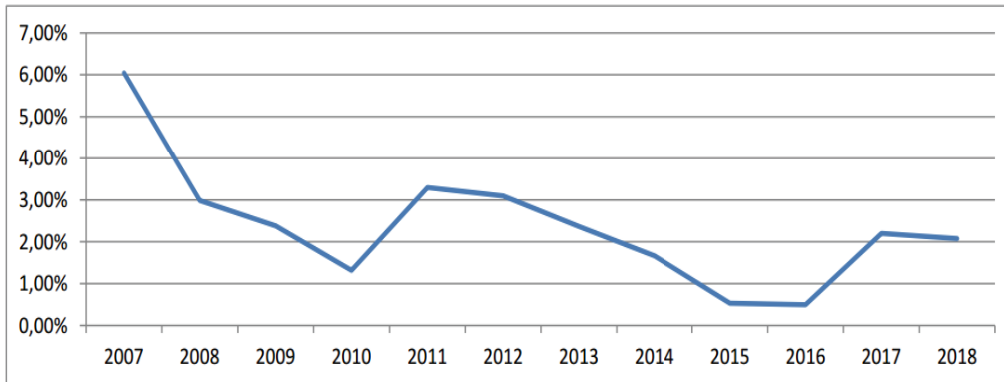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보험(Maladie)	-4.1	-0.8	1.0	3.8	6.6
산재보험(AT-MP)	1.0	0.5	0.8	1.3	1.7
법정연금기금(Vieillesse)	1.3	0.2	-0.8	-2.0	-3.0
가족지원금(Famille)	0.3	1.3	2.4	3.6	5.0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수지	-1.6	1.2	3.5	6.6	10.3
노령연대기금(FSV)	-3.6	-3.4	-2.7	-1.5	-0.8
총재정수지(RG+FSV)	-5.2	-2.2	0.8	5.2	9.5

출처: PLFSS 2018

- 2018년에는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이 2007-2017년의 연평균 증가율(2.4%)을 하회하는 2.1%를 나타내어 2017년 급증한 사회보장지출이 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52억유로 이상의 지출 절감 노력에 기인

[그림 III-4]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출처: PLFSS 2018

- 중기적으로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2017년 52억유로, 2018년 22억유로로 감소하며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19년 8억유로, 2020년 52억유로, 2021년 95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중기적인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의 개선세 전망은 거시경제적 여건의 개선(2019-021년 GDP성장률 1.7% 증가)으로 인한 임금 상승(2019년 +3.2%, 2020년 +3.6%, 2021년 +3.8%),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가정을 기반으로 함
- 2018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는 2.3%(2,000억유로)이며, 2018년 의료행위의 질과 의약품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41억 6,500만유로의 의료관련 지출을 절감할 계획
- 2017년 여름에 시작된 노동법 개혁과 실업수당 개혁은 실업률을 줄이고 프랑스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노동법 개혁은 해고와 채용의 용이 등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화를 골자로 함
  - 실업수당 개혁은 폐업한 자영업자와 자발적 사직자, 농민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실업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함

〈표 III-12〉 2018년의 의료보험지출 절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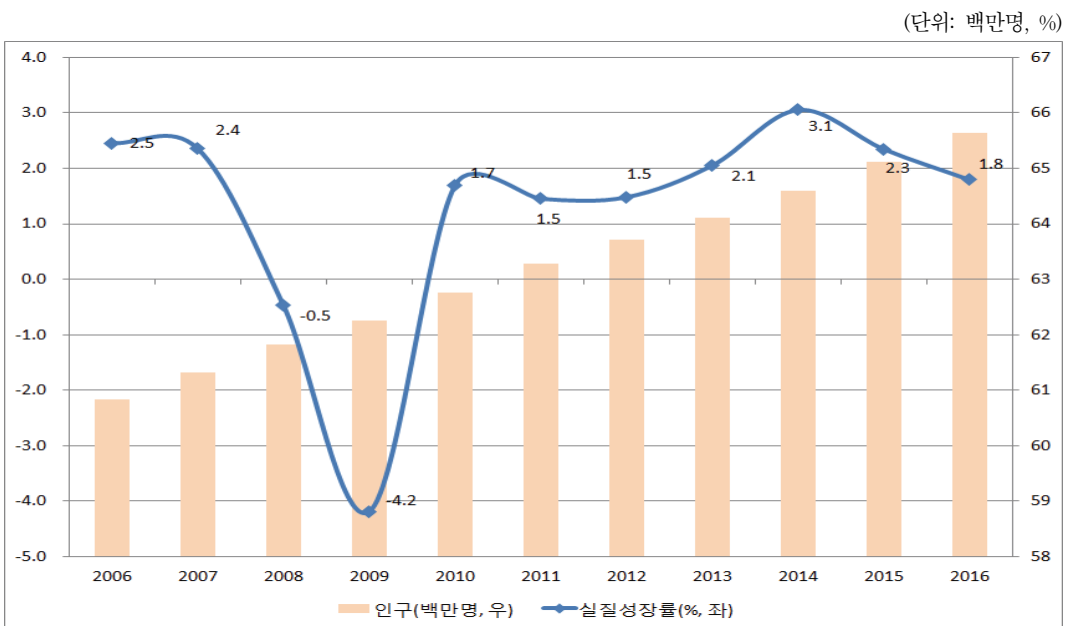
(단위: 백만유로)

주요내용	지출 절감액
건강관리 제공 체계 구축	1,465
효율적인 치료 방법의 구축	250
건강 및 의료사회 기관의 내부 성과 향상	1,215
구매 및 기타 비용 최적화	575
추가 목록 및 임시 사용 승인	390
전반적인 지출 목표에 대한 ONDAM의 기여도 재조정	200
의료사회 기관의 내부 성과 향상	50
의약품의 관련성 및 효율성 제고	1,490
의약품의 가격 인하	480
제네릭(génériques) 약품의 개발·판매촉진	340
바이오시밀러 약물	40
의료기기의 가격 인하	100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처방구조 및 처방관리	320
환급	210
의료행위의 관련성 및 질 제고	335
건강관리 통제	110
도시와 병원의 생물학, 영상 및 기타 의료 절차의 관련성 및 관세 적용 조치	225
수송차량 및 작업 파업 요구사항의 관련성 및 효율성 제고	240
수송차량	75
일일 수당	165
포탈 대응 및 통제	90
기타 조치	545
병원 일일 요금 업데이트	200
의료협약 재정지원에 있어 보완적 기구의 참여	100
건강보험 패키지의 관련성 및 역학 관리	180
보건 전문가 지출금 조정	65
총합계	4,165

출처: PLFSS 2018

## IV. 영 국

- FY2018-19 : 2018년 4월 ~ 2019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_\_\_\_,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 환율 : 1파운드 = 약 1,572.18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6년 경상GDP 2조 7,949억 달러(우리나라 약 1.5배 수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6년 기준 58.0%(우리나라 77.7%)
- 인구 : 6,564만명(2016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7. 2. 9.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16-17) 발표	2017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7. 3. 8.	2017 예산안(Budget 2017) 발표	
2017. 3. 29.	영국 공식적인 EU 탈퇴 절차 개시	
2017. 4. 19.	FY2017-18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2017-18) 발표	
2017. 7. 19.	재정지출 통계 분석 2017 발표	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7. 11. 22.	가을예산안(Autumn Budget 2017) 발표	
2017. 11. 27.	산업전략 발표	
2017. 12. 6.	국가 인프라 및 건설 계획 2017 발표	
2017. 12. 8.	영국-EU 1단계 브렉시트 협상 타결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18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1.4%로 대폭 하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7-18 GDP 대비 2.4%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8-19에 1.9%로 감소. 지난 전망 대비, 단기 전망은 개선되었으나 중기 전망은 악화
- (국가채무) FY2017-18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86.5%를 기록한 후, FY2018-19부터 매년 감소할 전망

## □ 예산기조

- 2017 가을예산안은 영국의 성장세 둔화를 감안하여 긴축적 예산기조를 다소 완화 하면서, 인프라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방점을 두고 편성

##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8-19 총경상수입은 7,698억파운드로 예상되며, VAT, 취득세 등의 세수전망 감소에 따라 지난 3월 전망 대비 66억파운드 하향조정
- (지출) FY2018-19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8,093억파운드, 지난 회계연도 대비 140억파운드(1.76%) 증가

##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s)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재정건전화) 2016년 11월 개정된 재정목표를 기반으로 재정수지, 채무, 복지지출 통제,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를 실시로 공공지출 통제
- (기타) EU 탈퇴 준비 예산마련, 주택공급 종합 정책 발표, 국가보건서비스 개선,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표 IV-1〉 주요 경제전망

(단위 : %)

경제전망	실적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	1.8	1.5	1.4	1.3	1.3	1.5	1.6
- 가계소비	2.8	1.5	0.8	1.2	1.2	1.5	1.6
- 정부소비	1.1	0.3	1.0	0.7	0.5	1.0	1.0
- 기업투자	-0.4	2.5	2.3	2.3	2.4	2.4	2.4
- 정부투자	1.5	2.4	1.4	2.3	6.2	1.1	0.9
물가상승률(CPI)	0.7	2.7	2.4	1.9	2.0	2.0	2.0
실업률(LFS)	4.9	4.4	4.3	4.4	4.6	4.6	4.6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1.1

- (경제성장률) 예산책임청(OBR)은 2017년 3월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서 영국의 2018년 실질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으나, 2017년 11월 전망에서는 1.4%로 대폭 하향 조정
-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17년초부터 기대에 못미치는 성장세를 보임

〈표 IV-2〉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단위 : %)

	실적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을예산안(2017.11월)	1.8	1.5	1.4	1.3	1.3	1.5	1.6
봄예산안(2017.3월)	2.2	1.8	2.0	1.6	1.7	1.9	2.0
변화	-0.4	-0.3	-0.6	-0.3	-0.4	-0.4	-0.4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1.1  
 \_\_\_\_,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1.1

- 2018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1.4%로 감소하며, 이후 2019년 1.3%, 2020년 1.3%의 저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물가) 2016년 0.7%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2017년 2.7%로 상승하여, 영란은행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전망
  - 파운드화 가치절하(depreciation)와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지난 2월 이래로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2%를 상회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017년 4분기 최고치인 3%을 기록한 후 2018년에 다소 완화되나 당분간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전망
- (실업률) 영국 노동시장은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4.9%였던 실업률은 2018년 4.3%로 감소할 전망
  - 전체 일자리 수가 2010년 대비 300만개 증가하였으며, 여성고용자와 풀타임 일자리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짐
  - 2017년 9월 고용률은 75%로 나타났으며, 실업률 또한 4.3%까지 하락하면서 197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나. 재정전망

- (재정적자) FY2017-18 GDP 대비 2.4%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8-19에 1.9%로 감소하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 감속세가 지속
  - 3월 봄예산안 대비, 단기 차입전망은 개선되었으나 중기 차입전망은 악화
    - (단기) FY2017-18 공공부문 순차입은 세수 증가 및 정부지출 축소의 영향으로 3월 전망대비 84억파운드 감소한 499억파운드
    - (중기) FY2019-20 공공부문 순차입은 경제 둔화 전망과 그에 따른 정책수단 도입 등이 반영되어 지난 전망 대비 134억파운드 증가한 347억파운드
  - FY2018-19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가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재정목표(Fiscal Mandate)<sup>69)</sup>를 충족

69) 2016년 11월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수정하여, FY2020-21까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

〈표 IV-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실적	전 망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세입·세출</b>							
경상세입(a)	36.7	36.5	36.6	36.7	36.7	36.6	36.7
총관리지출(TME)(b)	39.0	38.9	38.5	38.3	38.2	37.9	37.7
공공부문 경상지출(c)	35.0	34.9	34.8	34.3	33.8	33.6	33.5
공공부문 순투자(d)	2.0	2.0	1.8	2.0	2.4	2.3	2.3
감가상각(e)	2.1	2.0	2.0	2.0	2.0	2.0	2.0
<b>재정목표 및 보완적 목표</b>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2.2	2.3	1.8	1.5	1.3	1.2	1.1
공공부문 순채무	85.8	86.5	86.4	86.1	83.1	79.3	79.1
<b>재정적자</b>							
공공부문 순차입(b-a)	2.3	2.4	1.9	1.6	1.5	1.3	1.1
경상적자(c+e-a)	0.4	0.4	0.1	-0.4	-0.9	-1.0	-1.2
<b>안정성장협약(SGP) 기준</b>							
일반정부 적자 <sup>1)</sup>	2.3	2.4	2.0	1.8	1.6	1.6	1.2
일반정부 채무 <sup>1)</sup>	86.8	87.0	87.3	87.4	87.0	86.8	86.3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4.43

□ (국가채무) 차입이 감소함에 따라 FY2017-18 이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 Public Sector Net Debt) 비율이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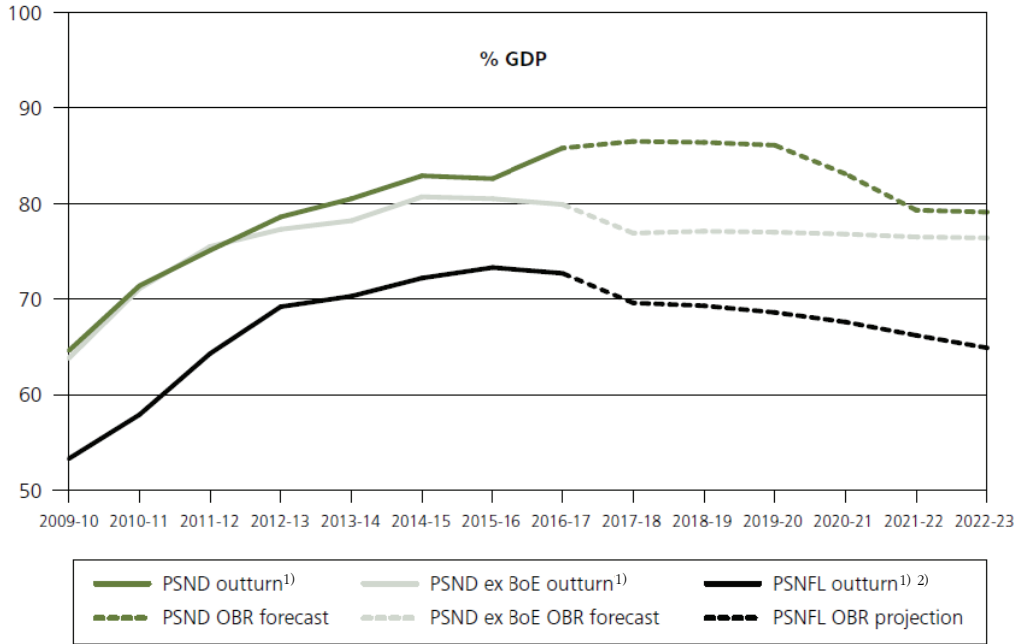
- FY2017-18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지난 50년간 최고치인 86.5%를 기록할 전망
- FY2018-19부터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sup>70)</sup>를 충족

수지 적자를 2%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재정목표로 설정

70) 2016년 11월 예산책임현장을 수정하여, FY2020-21까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추세가 감소로 전환되도록 하는 채무준칙을 보완적 재정목표로 설정

[그림 IV-1] 공공부문 순채무(PSND)

(단위: GDP 대비 %)



주: 1) FY2016-17는 OBR의 추정치

2) PSNFL(Public Sector Net Financial Liabilities)은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 11, Chart 1.6.

## 2 예산기조

- 2017 가을예산안은 영국의 성장세 둔화를 감안하여, 향후 몇 년간 긴축적 예산기조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편성
  
- 미래를 위한 경제 구축(Building an economy fit for the future)
  - 지난해 설정한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규모를 기존 230억파운드에서 310억파운드로 확대
  - FY2020-21까지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을 지난 30년 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도입
    - (교통) 도시 연계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통한 17억파운드 신규 지원
    - (R&D) 역대 R&D 지원 예산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FY2021-22부터 23억파운드 규모의 국가생산성투자펀드 투입
    - (장기 투자) 인내자본(Patient Capital)<sup>71)</sup> 조성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200억파운드를 투입하여 공적 펀드를 조성하고 사적 펀드를 지원
    - (Emerging Tech) 세계시장의 선두에 서서 데이터, 인공지능 사용의 윤리 및 기준을 확립하고, 무인 자동차 규제 체계를 수립
    - (기술) 노사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습득 계획(National Retraining Scheme) 시행
  
-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한 주택 건설(Building the homes our country needs)
  -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의회 말까지 연간 30만개의 주택을 신규 공급
    - 향후 5년간 153억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새롭게 투입하여, 총 440억파운드의 주택지원 예산을 마련
    -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 개발 계획을 마련
  -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Stamp Duty) 면제 조건인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12만 5천파운드에서 30만파운드로 인상

71)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은 장기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높은 투자 불확실성 및 장기간의 자금회수기간을 감내하며 투자되는 자본을 지칭

- 국민, 기업, 국가보건서비스 지원(Supporting people, businesses and the NHS)
  -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기반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향후 63억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증액
  - 현 정권은 의료서비스 품질과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이번 의회 말까지 최소 80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28억파운드의 집행 계획을 발표
  - 현재 영국의 급격한 물가상승 기류는 경제 전반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임금향상, 생활비 감소,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
    - － 연료세를 8년 연속 동결함으로써 운전자당 연평균 160파운드의 세금 절감효과가 발생
    - － 기업의 비거주재산세율(business rate)<sup>72)</sup> 부담 경감을 위해 23억파운드의 예산 추가 지원
    - －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과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인상
    - － 소득세 인적공제액을 11,850파운드로 인상하며, 세율 40%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을 기존 4만 5천파운드 초과에서 46,350파운드 초과로 상향 조정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A fair and sustainable tax system)
  -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기존의 저세율 기조를 유지하며, 조세 회피 및 역외 탈세를 방지를 통해 텍스갭(tax gap)을 축소
    - －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단속 강화, 국세청(HMRC;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의 세금 추적 시스템 확충
    -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적용되는 심사가능 기간을 연장하며, 역외 과세 구조를 세무당국에 공개하도록 규율하는 새로운 국제 법규 지원
  
- 2017 가을예산안에서 도입한 정부정책이 FY2018-19 동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총 60억 파운드로 추정
  - FY2018-19 정부정책으로 지출이 44억 6천만파운드 확대되며, 세입은 15억 8천만 파운드 축소될 전망

72)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는 상점, 사무실, 공장, 주점 등과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6년 3월 기준 영국의 180만개 부동산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산(지역사회·지방자치부, Local Government Finance Statistical Release, 2017.3.6)

〈표 IV-4〉 2017 가을예산안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지출정책	-150	-4,460	-7,190	-3,625	-1,450	-1,105
세입정책	-80	-1,585	-2,725	+310	-1,510	-1,415
총정책효과	-230	-6,045	-9,915	-3,315	-2,960	-2,520

주: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1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가을예산안에서 도입한 세입정책으로 FY2018-19 15억 8천만파운드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FY2020-21를 제외하고 향후 전망 기간 동안 세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sup>73)</sup>
  - FY2018-19 '주거 및 주택소유'과 '가족 및 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각각 5억 6천만 파운드, 10억 5천만파운드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을 30만파운드로 인상하며, 이로 인해 첫 주택 구입자 중 80%가 면세혜택을 받을 전망
    - FY2018-19 연료세 동결로 8억 3천만파운드, 주세 동결로 2억 2천만파운드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
  - '미래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FY2018-19 2억 9천만파운드의 세수감소가 발생
    - 2018년 4월부터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조정기준을 기존 소매물가지수(RPI)에서 CPI로 변경<sup>74)</sup>하며, 이로 인해 향후 23억파운드의 세수감수 감소효과 발생
  - '조세 회피·탈루·과오납 방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 정책으로 FY2018-19 각각 1억 2천만파운드, 2억 3천만파운드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

73) 지난 봄 예산안(2017.3)에서는 정책으로 인해 FY2017-18 1억 6천만파운드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FY2018-19 이후에는 국민보험기여금 기여율 인상, 배당세액공제액 축소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74) 비거주재산세 요율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향후 RPI보다 CPI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적용 물가지수를 CPI로 변경할 경우 산출세액이 감소하는 효과 발생

(표 IV-5) 2017 가을예산안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주거 및 주택소유</b>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125	-560	-585	-610	-640	-670
빈집에 대해 고율 지방세 부과	0	0	0	0	+5	+5
<b>가족 및 근로자 지원</b>						
연료세 동결	0	-830	-825	-845	-865	-885
주세 동결	-35	-225	-230	-230	-235	-240
항공여객세 동결	0	0	+25	+25	+25	+30
<b>미래를 위한 경제</b>						
석유 및 가스 양도세	0	+5	+20	+10	+10	+25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조세 경감	0	0	+45	+35	-15	-20
비거주재산세: CPI로 변경	0	-240	-530	-525	-520	-520
비거주재산세: 주점에 대해 면제	0	-30	0	0	0	0
결제부과금(aggregates levy) 동결	0	-15	-10	-10	-10	-10
도로 사용료 동결	0	-15	-10	-15	-15	-15
<b>조세 회피·탈루·과오납 방지</b>						
조세 회피 및 탈루 방지 강화	-10	+10	+170	+585	+580	+740
법인세: 회피 방지 조치	+15	+45	+45	+45	+45	+45
법인세: 감가상각	+5	+10	+10	+10	+10	+10
원천징수하는 로열티 대상 확대	0	0	+285	+225	+160	+130
온라인 상거래 VAT 단속 강화	0	+10	+20	+40	+50	+45
역외탈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0	*	*	*	+5	+10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자본이득세 회피 방지	0	+20	+170	+165	+150	+145
세금 체납 방지를 위한 파산제도	0	-5	+70	+135	+150	+150
Dynamic coding-out of debt	0	0	+55	+30	+20	+20
건설 공급망의 VAT 오류 시정: 매입자납부제(reverse charge) 도입	0	0	+90	+135	+105	+75
불법 폐기물 업체에 중과세	0	+30	+45	+45	+50	+45
<b>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b>						
법인세: 물가연동공제액 동결	+30	+165	+265	+345	+440	+525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확대	+5	+15	+35	+115	+140	+160
비거주재산 소득: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이전	0	0	0	+690	-310	-25
자본이득세 납부기한 단축 연기	0	0	-1,200	+950	+235	+10
VAT 신고 기준 유지	0	+15	+55	+105	+145	+170
담뱃세 인상 및 담배최저한세 (minimum excise duty) 도입	+45	+35	+40	+45	+40	+35

〈표 IV-5〉의 계속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기타 공공지출</b>						
스코트랜드 경찰 및 소방	0	-40	-40	-40	-45	-45
<b>대기 질</b>						
기업차량세(Company Car Tax) 인상	0	+70	+35	-30	+130	+90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 인상	0	+125	+50	+10	*	*
<b>기존 정책</b>						
대학등록금대출 상환 조건 완화	0	-50	-100	-175	-235	-295
대학등록금 상환선동결	0	-5	-15	-25	-35	-45
Class 4에 대해 국민보험기여금 기여율 9% 유지	-10	-125	-645	-685	-565	-525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	*	*	-65	-245	-515	-585
총세입정책 효과	-80	-1,585	-2,725	+310	-1,510	-1,415

주: 1. \*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2.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2.1

- OBR 11월 전망에 따르면 FY2018-19 총경상수입은 7,698억파운드에 예상되며, VAT, 취득세 등의 세수전망 감소에 따라 지난 3월 전망 대비 66억파운드 하향조정
  - (소득세) FY2018-19 원천징수(Pay as you earn) 세액 전망은 지난 전망 대비 1억파운드 증가하였으며, 자진신고(Self Assessment) 세액은 7억파운드 증가
  - (법인세) 11월 전망 대비 역내(onshore) 세수는 2억파운드 증가하였지만 역외(offshore) 세수는 3억파운드 감소하여, 총 1억파운드 세수 하향 조정
  - (VAT) 가계지출 감소 예상됨에 따라 세수를 지난전망 대비 5억파운드 하향 조정
  - (취득세) 주택 가격 하락 추세, 생애 첫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 대비 7억파운드 하향 조정
    - 가계소득 증가 부진, 인구 증가세 둔화로 인해 향후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주택 거래는 감소할 전망
  - 전망기간 동안 수입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FY2022-23에는 8,713억파운드로 예상

〈표 IV-6〉 경상수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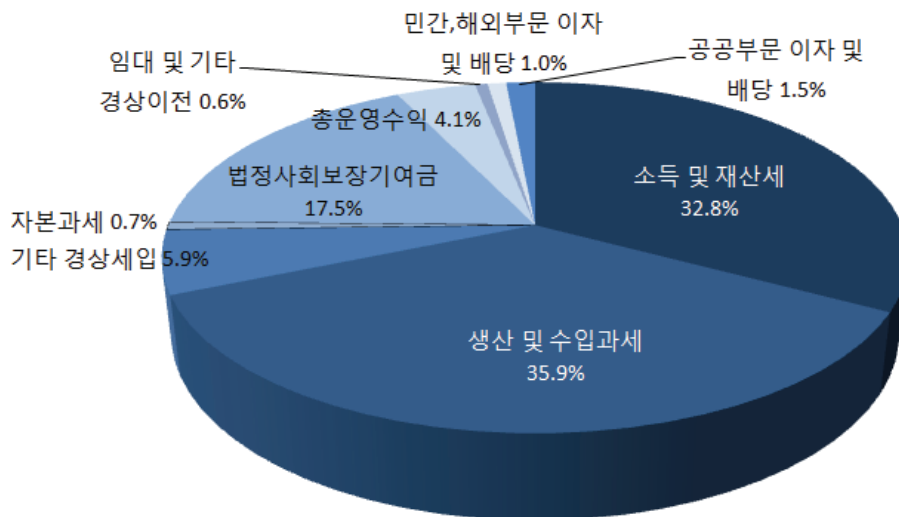
	실적	전 망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소득세	177.2	177.2	184.7	191.2	198.9	206.0	214.3
국민보험기여금(NICs)	125.9	131.0	134.4	138.3	142.8	148.0	153.2
VAT	121.6	125.8	130.3	134.3	138.8	143.2	147.8
법인세	54.1	52.8	55.4	54.4	54.6	55.1	57.2
석유세	-0.7	-0.6	-0.5	-0.5	-0.5	-0.5	-0.4
연료세	27.9	27.9	28.0	28.6	29.2	29.9	30.6
비거주재산세	29.2	29.3	30.5	31.3	31.7	32.2	33.6
지방세(Council tax)	30.4	32.2	33.8	35.1	36.2	37.2	38.3
VAT 환급(refunds)	13.8	14.1	14.5	14.5	14.8	15.1	15.3
자본취득세	8.4	8.8	9.9	10.9	12.6	12.5	13.3
상속세	4.8	5.3	5.4	5.7	5.9	6.2	6.5
취득세	11.9	13.2	13.2	13.7	14.4	15.1	15.8
취득세(on shares)	3.7	3.4	3.5	3.6	3.7	3.9	4.0
담배세	8.7	9.4	9.2	9.2	9.1	9.0	9.0
산업용주정(spirits)세	3.3	3.5	3.5	3.6	3.7	3.8	3.9
와인세	4.2	4.3	4.3	4.5	4.6	4.8	5.0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6	3.7	3.7	3.8	3.9	4.0	4.1
항공여객세	3.2	3.3	3.5	3.6	3.8	3.9	4.0
보험료세	4.9	5.8	6.0	6.0	6.0	6.0	6.0
기후변화세	1.9	1.8	1.9	2.2	2.3	2.3	2.3
기타 국제(HMRC taxes)	7.4	7.3	7.3	7.5	7.6	7.6	7.7
자동차세	5.8	6.0	6.2	6.2	6.3	6.5	6.8
은행세(Bank levy)	3.0	2.6	2.6	2.5	2.1	1.2	1.3
은행추가세(Bank surcharge)	1.6	1.8	1.7	1.8	1.8	1.8	1.9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0.0	2.7	2.7	2.8	2.9	3.0	3.1
면허료 수입	3.2	3.2	3.3	3.4	3.4	3.5	3.6
환경부담금	5.2	8.6	10.5	11.7	12.3	12.9	13.3
EU ETS 경매세	0.4	0.4	0.6	0.6	0.4	0.4	0.5
Scottish taxes	0.6	0.7	1.0	1.0	1.1	1.1	1.2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0.1	0.2	0.3	0.3	0.2	0.1	0.0
설탕세(Soft drinks industry levy)	0.0	0.0	0.3	0.3	0.3	0.3	0.3
기타 조세	7.2	7.0	6.8	7.2	7.4	7.7	7.8
<b>국민계정 조세수입</b>	<b>672.7</b>	<b>692.8</b>	<b>718.6</b>	<b>739.0</b>	<b>762.0</b>	<b>783.7</b>	<b>811.0</b>
EU 부담금 공제	-3.4	-3.5	-3.5	-3.5	-3.5	-3.5	-3.5
이자 및 배당	6.5	7.1	8.1	9.1	9.8	11.0	12.4
총운영수지	47.2	45.5	43.1	44.0	45.4	47.1	48.8
기타수입	3.7	3.5	3.4	3.4	3.5	3.4	2.7
<b>총 경상수입</b>	<b>726.7</b>	<b>745.4</b>	<b>769.8</b>	<b>792.0</b>	<b>817.2</b>	<b>841.6</b>	<b>871.3</b>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5.6	1.3	-6.6	-14.5	-17.6	-27.9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4.6 및 4.7

- FY2018-19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원은 생산 및 수입과세가 35.9%(2,674억 파운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소득 및 재산세 32.8%(2,522억파운드),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7.5%(1,310억파운드), 기타 경상세입 5.8%(451억파운드)등의 순으로 구성

[그림 IV-2] FY2018-19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단위: %)



출처: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2017,11, Table 2.39

## 나. 세출

- 가을예산안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FY2018-19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총 44억 6천만 파운드로 추산
  - 가장 큰 재정지출 확대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은 국가보건서비스 관련 정책으로 FY2018-19 총 23억 2천만파운드의 재정지출이 증가
  - ‘주거 및 주택소유’ 정책으로 FY2018-19 2억 7천만파운드의 지출이 증가하며, 향후 전망 기간 동안 총 61억파운드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효과가 발생할 전망
  - FY2018-19 ‘미래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17억 5천파운드의 지출증가가 발생하며, 이중 대부분은 EU 탈퇴 대비 예산(15억파운드)이 차지

〈표 IV-7〉 2017 가을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주거 및 주택소유</b>						
Land Assembly Fund 신설	0	0	-220	-355	-355	-355
Housing Infrastructure Fund 확대	0	0	-215	-710	-1,070	-1,185
소규모 택지 인프라 및 토질 개선	0	-275	-355	-120	0	0
지방정부 주택건설 투자 확대	0	0	-355	-265	-260	0
공공임대 주택구매권지원	0	0	-85	0	0	0
<b>국가보건서비스</b>						
국가보건서비스(NHS) 추가 지원	-400	-1,900	-1,070	0	0	0
국가보건서비스(NHS) 투자 확대	-600	-420	-840	-1,020	-960	-360
<b>가족 및 근로자 지원</b>						
Targeted Affordability Fund 확대	0	-40	-85	-95	-100	-110
통합수당(Universal Credit) 지원 확대	-20	-310	-340	-335	-275	-185
민간임대주택 지원	0	-10	-10	-	-	-
장예시설보조금 지원 확대	-50	0	0	0	0	0
가족 관계지원(고용노동부 사업)	0	-5	-10	-	-	-
<b>미래를 위한 경제</b>						
EU 탈퇴 준비	0	-1,500	-1,500	0	0	0
국가생산성투자펀드	0	0	0	0	0	-7,000
R&D: 국가생산성투자펀드 투자	0	0	0	0	-2,300	-
R&D: 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	-5	-60	-170	-175	-170	-175
혁신: 초저공해차 지원	0	-50	-50	0	0	0
혁신: 기술, 인공지능, 지리공간 데이터	0	-70	-75	-	-	-
교통: 시내 교통 투자 확대(Transforming Cities Fund)	0	-10	-240	-285	+525	-
교통: 지역 도로 확충	-55	0	0	0	0	0
Public Works Loan Board	0	*	-5	-5	-5	-5
고숙련: 국가재교육프로그램(National Retraining Scheme) 신설	0	-20	-45	-	-	-
고숙련: 컴퓨터 과학, 수학 투자	0	-30	-50	-	-	-
고숙련: 교직자 전문성 강화	0	-10	-15	-15	-5	0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권한 강화	0	-5	-5	+5	+15	+10

〈표 IV-7〉의 계속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조세 회피·탈루·과오납 방지</b>						
과오납 및 체납 방지를 위한 실시간 정보 활용	0	+85	+75	+65	+40	+40
<b>기타 공공지출</b>						
DEL지출 조정	+1,000	0	-1,135	0	0	0
ODA지출 GNI 대비 0.7% 목표	0	+375	0	0	0	0
<b>대기 질</b>						
Air Quality Plan, Clean Air Fund 지원	-20	-180	-215	-80	-	-
<b>기존 정책</b>						
석유 및 가스: 영국 대륙붕 탐사 지원	0	-5	0	0	0	0
City Deal: 스완지 및 에던버러 개발	0	-30	-30	-30	-	-
사회임대주택 기존 임대료 유지	0	0	-155	-205	-255	-320
<b>총 지출정책 효과</b>	<b>-150</b>	<b>-4,460</b>	<b>-7,190</b>	<b>-3,625</b>	<b>-1,450</b>	<b>-1,105</b>

주: 1.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2.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2.1

□ 11월 가을예산안의 FY2018-19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8,093억파운드, 지난 회계연도 대비 140억파운드(1.76%) 증가

○ 3월 전망 대비 79억파운드 하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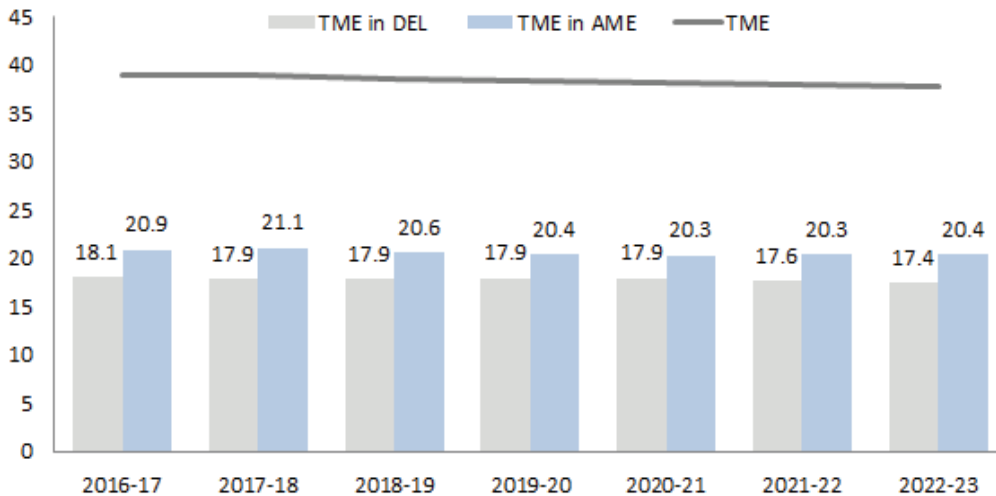
-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예산항목 조정 등(△110억파운드)
- 경제변수 가정 변화로 인한 영향(△12억파운드) : 실업률(△4억파운드), 인플레이션(△2억파운드), 인구전망(△3억파운드), 기타(△3억파운드)
- 이자율 가정 변화(14억파운드), 기타 가정 및 변화(8억파운드)
-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22억파운드) : 자원 DEL 변화(23억파운드) 등

□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부처별지출한도(DEL) 및 연간관리지출(AME) 비중의 감소로 인해 향후 하락추세를 나타낼 전망

- FY2016-17 GDP 대비 39%였던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FY2018-19에 38.5%로 전망되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FY2022-23 37.7%까지 감소
  - － 총관리지출(TME) 비율 하락은 주로 자원 DEL 감소(GDP 대비  $\Delta 1.4\%$ )와 복지지출 삭감(GDP 대비  $\Delta 0.4\%$ )에 기인하며, 자본 DEL 증가(GDP 대비  $0.7\%$ )로 다소 상쇄될 전망
- FY2016-17 GDP 대비 18.1%였던 부처별지출한도(DEL) 비율은 FY2022-23에 17.4%로 감소하며, 20.9%였던 연간관리지출(AME) 비율은 20.4%로 감소

[그림 IV-3]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4.15

- 전체 공공부문 지출 중 사회보호 31.2%(2,520억파운드), 의료 19.2%(1,550억파운드), 교육 12.6%(1,020억파운드) 분야가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
  - 그 밖에 국방이 6.1%(490억파운드), EU분담금 포함 기타 지출 6.6%(530억파운드) 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표 IV-8〉 총관리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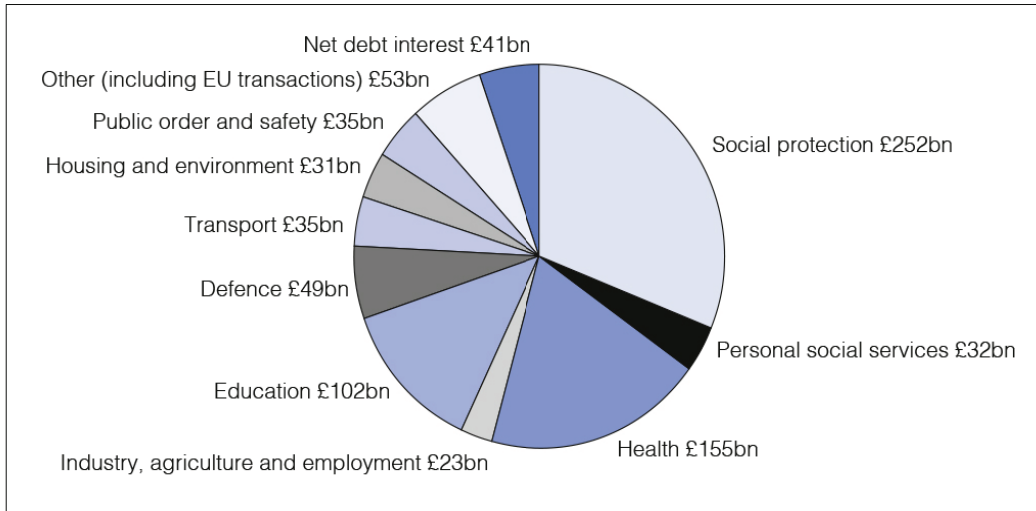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 망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공공부문 경상지출</b>							
자원 DEL	312.5	316.8	323.3	327.1	330.3	336.2	342.2
자원 AME	380.5	395.7	406.9	413.0	422.1	436.7	452.9
사회보장급여	216.9	219.8	224.5	228.0	231.8	239.6	248.5
세액공제	3.0	3.7	3.9	4.1	4.3	4.4	4.5
순공공서비스연금	11.2	11.9	13.2	12.5	13.6	15.0	16.6
국가복권	1.4	1.2	1.2	1.2	1.2	1.3	1.3
BBC 내국 서비스	3.7	4.0	3.8	3.8	3.6	3.6	3.7
철도네트워크	0.5	0.6	0.7	0.7	0.7	0.8	0.8
기타부처지출	0.5	0.7	0.8	0.8	0.7	0.7	0.8
EU분담금	8.8	9.9	12.5	-	-	-	-
EU분담금 대체 국내 지출	-	-	-	13.8	14.0	13.6	13.6
지방재정지출	45.2	47.8	50.2	49.3	50.4	52.0	53.7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APF 채무이자 삭감	35.5	40.9	39.8	39.9	40.4	42.2	44.3
공기업 채무이자	3.8	2.7	0.7	0.7	0.7	0.8	0.8
감가상각	29.9	30.6	31.7	32.8	34.1	35.3	36.6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2.0	12.3	12.7	12.8	12.9	13.1	13.3
환경부담금	5.2	8.8	10.8	12.2	13.4	14.1	14.4
지방정부 귀속연금	1.3	1.3	1.3	1.3	1.3	1.3	1.3
기타 회계 조정	1.4	-0.4	-0.9	-1.1	-1.2	-1.3	-1.3
<b>총공공부문 경상지출</b>	<b>693.0</b>	<b>712.5</b>	<b>730.2</b>	<b>740.1</b>	<b>752.4</b>	<b>772.9</b>	<b>795.1</b>
<b>공공부문 투자</b>							
자본 DEL	46.1	48.2	52.6	59.7	68.3	68.2	70.6
자본 AME	33.2	34.6	26.5	26.9	29.3	30.6	31.1
세무소송	0.0	0.0	0.2	1.0	2.7	2.9	2.9
철도네트워크 자본지출	6.6	6.5	5.5	6.3	6.5	6.6	6.9
기타 자본지출	1.2	1.1	1.2	1.3	1.6	1.8	1.9
지방재정 지출	9.1	11.1	10.3	9.4	9.0	9.5	9.6
공기업 지출	17.5	15.8	10.4	10.3	10.5	10.7	10.7
회계 조정	-1.1	0.0	-1.0	-1.4	-1.0	-0.9	-0.8
<b>총공공부문 투자</b>	<b>79.4</b>	<b>82.8</b>	<b>79.1</b>	<b>86.6</b>	<b>97.6</b>	<b>98.8</b>	<b>101.8</b>
감가상각 공제	-40.7	-41.1	-41.2	-42.5	-43.9	-45.3	-46.8
공공부문 순투자	38.6	41.8	37.9	44.1	53.7	53.5	55.0
<b>총관리지출</b>	<b>772.4</b>	<b>795.3</b>	<b>809.3</b>	<b>826.7</b>	<b>849.9</b>	<b>871.7</b>	<b>896.8</b>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0.4	-7.1	-7.9	-1.2	-5.4	-14.6	-

주: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AME+자원DEL)+공공부문 총투자(자본AME+자본DEL)로 구성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4.16 및 4.17

[그림 IV-4] FY2018-19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TME: 8,090억파운드)

(단위: 십억파운드)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Chart 1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제성장

-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의 기간을 연장하고 투입 자금 규모를 확대
  - 재무부는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FY2017-18년부터 FY2021-22까지 총 230억 파운드의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운용 계획을 발표
  - 이번 가을예산안에서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운용을 FY2022-23까지 연장하고, 자금 규모 또한 310억파운드로 증가

〈표 IV-9〉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투자 계획

(단위 :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sup>1)</sup>	2022-23 <sup>1)</sup>
주택						
Accelerated Construction	90	230	170	200	-	-
Affordable housing	495	605	1,215	610	-	-
Housing Infrastructure Fund	60	300	1,160	2,135	1,060	1,185
Small sites infrastructure and rededication	0	275	355	120	-	-
Land Assembly Fund	0	0	220	355	355	355
교통						
Roads and local transport	365	360	290	415	-	-
Next generation vehicles	75	145	155	115	-	-
Digital railway enhancements	30	55	165	285	-	-
Cambridge - Milton Keynes - Oxford corridor	5	135	0	0	-	-
Transforming Cities Fund	0	140	355	485	1,010	-
Tyne & Wear Metro	0	0	25	35	265	-
통신	25	150	275	290	-	-
연구개발	425	820	1,500	2,000	2,345	-
총계획	1,570	3,215	5,885	7,045	6,475	7,000

주: 1) 구체적 예산배정 추후 결정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4.1

-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발표를 통해 투자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 정립 ((참고) ‘영국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s)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 National Retraining Scheme 신설 등 평생학습 체계 강화
    - 영국노동조합회의와 영국산업연맹은 National Retraining Scheme을 바탕으로 ‘Skills Advisory Panels’를 구성하여 지역경제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전략을 마련
    - 정부는 신생분야에 대한 기술훈련 고안을 위해 노력중이며, 우선 3천만파운드 예산을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EdTech) 교육훈련에 투입
    - 직장 내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2년 동안 850만파운드 자금을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조직에 지원
  - 이번 예산안에서는 수학, 컴퓨터공학, 기술교육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
    - 수학교육 강화 : 2,700만파운드 자금을 수학 프로그램에 투입, 8천만파운드 예산을 배정하여 수학전공생이 늘어날 경우 대학에 리워드 제공 등
    - 컴퓨터 공학 : 중등 컴퓨터 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위해 8,400만파운드 투입, National Centre for Computing을 신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T-levels 제도<sup>75)</sup> 예산을 2천만파운드로 증액
    - Teacher Development Premium 신설 : 지방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4,200만파운드 배정
- 영국은 G20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sup>76)</sup>,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GDP 대비 R&D 투자를 2027년 2.4%, 장기적으로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8년 R&D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11%에서 12%로 인상
  - 기업의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부담 경감을 위해 23억파운드의 예산을 추가 배정
  - 혁신적 기업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200억파운드를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에 투자

75) 2017년 봄예산안에서 도입된 제도로, 16-19세를 대상으로 하는 15개 부분의 기술교육 시간을 연평균 900시간으로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함

76)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2017년 19%, 2020년 17%의 법인세 인하계획을 제시

〈참고 IV-1〉 영국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 영국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2017. 11. 27.)<sup>77)</sup>
- G7국가들에 비해 낮은 생산성이 영국이 직면한 약점, 생산성 향상을 위한 5대 기초 비전(Ideas, People, Infrastructure, Business environment, Places)과 주요 정책대응을 제시
  - (Ideas)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 (R&D 투자) GDP 대비 R&D 투자를 2027년 2.4%, 장기적으로 3%까지 확대
    - (조세 혜택) 2018년 R&D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11%에서 12%로 인상
    - (펀드)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Programme에 7억 2,500만파운드를 추가 투입
  - (People) 일자리의 질과 소득능력(earning power) 향상
    - (기술교육체계) 기술(Technical) 교육 개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STEM 투자)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분야에 4억 600만파운드 추가 배정
    - (재훈련) National Retraining Scheme 신설, 디지털 및 건설 훈련에 6,400만파운드 투입
  - (Infrastructure) 고품질 인프라 구축
    - (국가생산성투자펀드) FY2022-23까지 310억파운드 규모로 증액
    - (전기차) 충전소(Charging infrastructure)에 4억파운드, 플러그인 자동차 보조금(Plug-in Car Grant)에 1억파운드 추가 지원
    - (디지털 인프라) 5G 네트워크에 1억 7,600만파운드, 지방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2억 파운드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파운드 투자
  - (Business Environment)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 (Sector Deals) 생명과학, 인공지능, 자동차산업에 대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제안
    - (혁신산업) 잠재력 큰 기업에 25억파운드 투자 펀드를 포함해 10년 동안 200억 파운드 투자
  - (Places) 지역사회 번영
    - (교통) 도시 내 교통 개선을 위해 17억파운드 규모의 기금 신설
    - (지방 교직자 지원) 지방 교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Teacher Development Premium’ 사업을 실시하며 4,200만파운드 배정

## 나. 재정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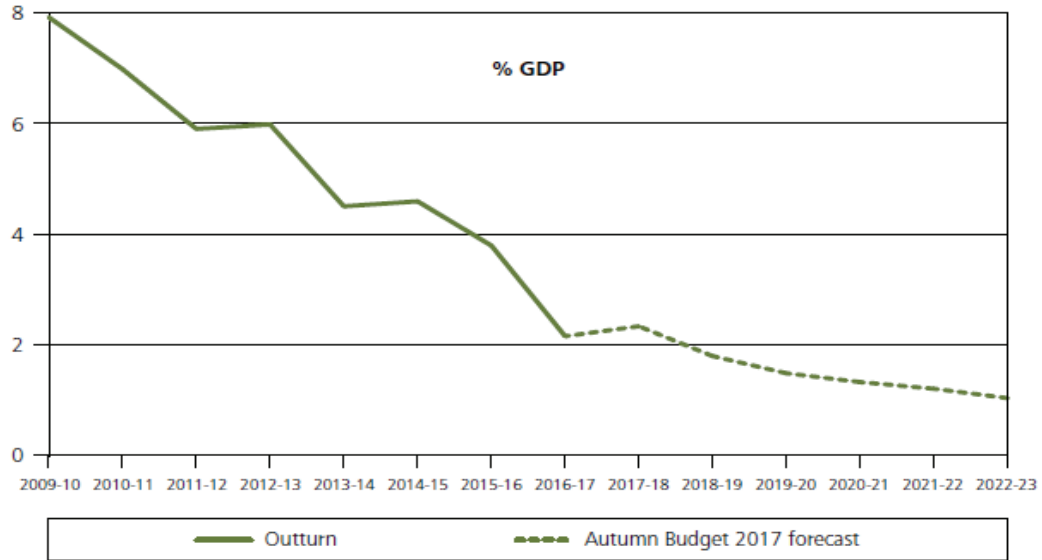
-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재정목표(Mandate for fiscal policy)<sup>78)</sup>
  - 재정목표(Fiscal Mandate)
    - FY2020-21까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2% 이하로 감축
  -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
    - FY2020-21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
    - FY2021-22 복지비용이 가을보고서에서 설정한 복지지출 상한선(welfare cap and margin)을 준수
  
- 이번 가을예산안은 재정목표와 보완적 재정목표를 모두 충족
  - (재정목표)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2%이하 달성을 목표 시기보다 2년 앞선 FY2018-19에 달성할 전망
  - (보완적 재정목표)
    - FY2018-19부터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되어 목표 충족
    - FY2022-23에 적용될 복지지출 상한(Welfare Cap)은 1,301억파운드이며, 불가피한 복지지출 변동성에 대응한 margin(3.0%)을 적용할 경우 실질 지출한도는 1,340억 파운드
  
- 공공지출 통제와 집행 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 지속
  - 2017년부터 실시한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를 통해 FY2019-20까지 35억 파운드를 절감하며, 이중 10억파운드는 적자감축에 투입되지 않고 지출우선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

77)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64563/industrial-strategy-white-paper-web-ready-version.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64563/industrial-strategy-white-paper-web-ready-version.pdf)

78)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목표(Mandate for fiscal policy)를 규정하였으며, 2017년 1월 의회에서 통과됨

[그림 IV-5] 공공부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Chart 1.5

〈표 IV-10〉 복지지출 상한

(단위 : 십억파운드, %)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Cap	-	-	-	-	-	130.1
Interim pathway	119.3	120.9	122.1	123.8	126.9	-
Margin(%)	0.5	1.0	1.5	2.0	2.5	3.0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1.5

## 다. 기타

### □ EU 탈퇴 준비를 위해 향후 2년간 총 30억파운드 예산 배정

- 효율적인 EU탈퇴를 위해 FY2018-19, FY2019-20 각각 15억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 FY2018-19 부처별 추가자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2018년 초 FY2018-19 추경예산안 (Supplementary Estimates)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

□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종합대책 발표

- 향후 5년간 153억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새롭게 투입하여, 총 440억파운드의 주택 지원 예산을 마련
- 건설 분야의 기술혁신과 노동력 유입을 위해 2억파운드 자금을 투입
- Housing Infrastructure Fund에 27억파운드자금을 추가 투입하며, 주택수요가 높은 잉글랜드 지역에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
-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Stamp Duty) 면제 조건인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12만 5천파운드에서 30만파운드로 인상
- 빈집에 부과되는 주민세(council tax) 상한을 기존 기납부 평균 세액의 50%에서 100%로 인상
- 홈리스 방지를 위하여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 지원에 2천만파운드 배정

□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개선을 위해 63억파운드 예산 추가 배정

- 28억파운드는 자원(resource) 예산으로 배정되며,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출될 예정
  - 2017년 3억 3천만파운드, FY2018-19 16억파운드, FY2018-19 9억파운드 지출 예정
- 35억파운드는 자본(capital) 예산으로 투입
  - 지역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 보건조직(Sustainability and transformation partnerships)에 26억파운드 배정
  -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7억파운드, NHS 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해 2억파운드가 배정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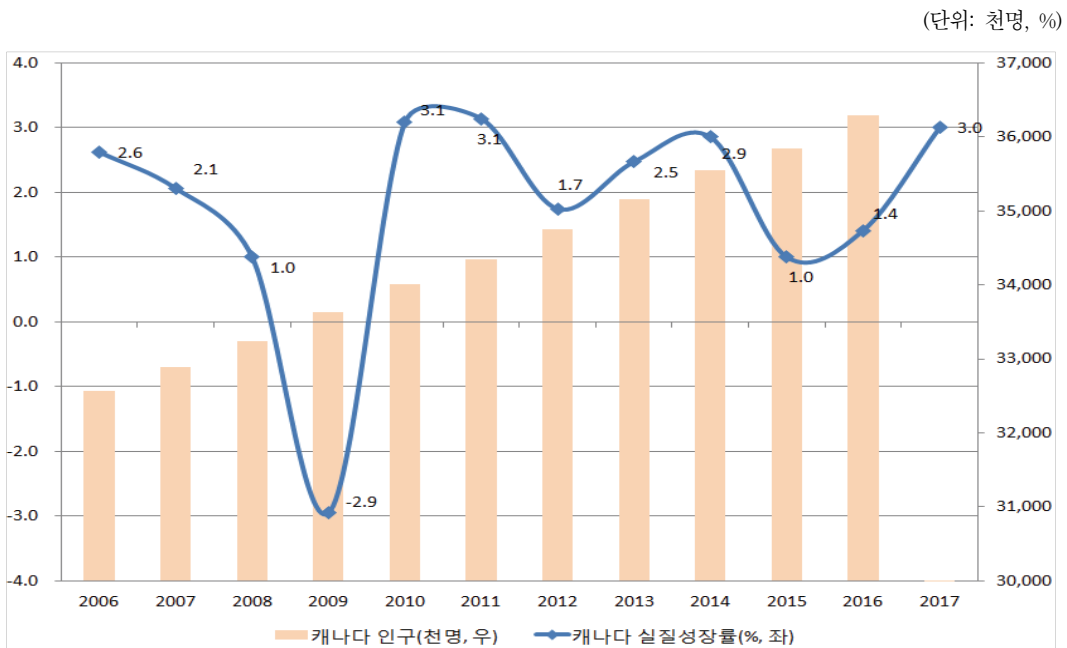
□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 2018년 4월부터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시간 당 7.5파운드에서 7.83파운드로 4.4% 인상
-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최저임금(National Minium Wage) 또한 인상
  - 21~24세 최저임금을 7.05파운드에서 7.38파운드로, 18~20세는 5.6파운드에서 5.9파운드로, 16~17세는 4.05파운드에서 4.2파운드로 각각 인상



## V. 캐나다

- FY2018-19 : 2018.4~2019.3
- 출처
  - Budget 2018 (2018.2.27.)
- 환율 : 1캐나다달러 = 871.68원 (2017년 평균)
- 경제규모 : 2017년 경상 GDP 1조 7,018억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7년 기준 64.1%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약 77.7%)
- 인구 : 2016년 약 3,629만명
- 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 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7. 4. 28.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April 2017) 발표	2017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7. 5. 26.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A) 발표	
2017. 9. 19.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	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7. 10. 5.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 발표	
2017. 10. 24.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발표	
2017. 10. 26.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B) 발표	
2017. 10. 31.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7) 발표	
2018. 1. 23.	Economic and Fiscal Monitor-January 2018 발표	2018년 1월 2호 「재정동향」
2018. 2. 26.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C) 발표	2018년 2월 2호 「재정동향」
2018. 2. 27.	FY2018 예산안(Budget 2018) 발표	2018년 3월 1호 「재정동향」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8년 실질 및 명목GDP 성장률은 각각 2.2%, 4.0%,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6.0%, 1.9%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8-19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18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는 30.1% 수준으로 전망

## □ 예산기조

- FY2018 예산안은 「강한 중산층을 위한 평등과 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주제로, 중산층 강화와 공평한 기회 확대에 중점 투자
  - 성장, 진보, 조화, 발전, 평등에 대한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제시

##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17-18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5.5% 증가한 3,096억캐나다달러, FY2018-19 총세입은 FY2017-18 대비 4.5% 증가한 3,23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5%)로 전망
- (세출) 총세출은 FY2017-18 전년 대비 6.1% 증가한 3,046억캐나다달러, FY2018-19 전년 대비 2.5% 증가한 3,122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 주요 재정정책

- (중산층 강화 및 양성평등) FY2018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중산층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예산 전반에 GBA+ 분석 도입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강조
- (재정건전화) FY2018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을 향후 FY2022-23까지 각각 GDP 대비 0.5%, 28.4% 수준으로 감소할 계획임을 발표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실질GDP 성장률) 2018년 실질GDP 성장률은 2017년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이하 FES)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된 2.2%로 전망
  - 2017~2022년 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2017년 FES 전망과 동일한 2.0%로 전망
- (명목GDP 성장률) 2018년 명목GDP 성장률은 2017년 FE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4.0%로 전망
- (실업률) 2018년 실업률은 2017년 FES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6.0%로 전망
  - 2017~2022년 평균 실업률은 2017년 FES 전망 대비 0.2%p 하락한 6.1%로 전망
    - 2015.11월 이후 약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캐나다 실업률은 5.9% (2017.11월 기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최근 40년간 가장 낮은 수준

〈표 V-1〉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22
실질GDP 성장률	2017 FES	3.0	2.1	1.6	1.7	1.7	1.8	2.0
	Budget 2018	3.0	2.2	1.6	1.7	1.6	1.8	2.0
명목GDP 성장률	2017 FES	5.5	4.1	3.4	3.7	3.6	3.8	4.0
	Budget 2018	5.2	4.0	3.5	3.8	3.6	3.8	4.0
실업률	2017 FES	6.5	6.3	6.3	6.4	6.3	6.1	6.3
	Budget 2018	6.4	6.0	6.0	6.1	6.0	6.0	6.1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7 FES	1.6	1.9	1.9	1.9	1.9	2.0	1.9
	Budget 2018	1.6	1.9	2.0	1.9	1.9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2.1 일부 발췌

- (물가상승률)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FES 전망과 동일한 1.9%로 전망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2.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18-19 재정적자는 18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8%)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2-23에는 12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5%)를 기록할 전망
- (총세입) FY2018-19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8억캐나다달러(4.5%) 증가한 3,234억캐나다 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FY2022-23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4.5% 수준으로 유지
- (총세출) FY2018-19 총세출은 전년 대비 95억캐나다달러(2.9%) 증가한 3,385억캐나다 달러 규모로 전망
  - FY2018-19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대비 2.5%(76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122억캐나다 달러,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7.8%(19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6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sup>79)</sup> 비율은 FY2018-19에는 30.1%(6,696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28.4%(7,301억캐나다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79)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V-2〉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6-17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총수입	293.5	309.6	323.4	335.5	348.0	362.1	373.9
총지출	311.3	329.0	338.5	350.0	361.9	372.9	383.2
프로그램지출	287.2	304.6	312.2	321.5	331.5	340.7	350.1
이자지출	24.1	24.4	26.3	28.6	30.3	32.2	33.1
위험조정			-3.0	-3.0	-3.0	-3.0	-3.0
재정수지	-17.8	-19.4	-18.1	-17.5	-16.9	-13.8	-12.3
연방채무 <sup>1)</sup>	631.9	651.5	669.6	687.1	704.0	717.8	730.1
GDP 대비 %							
총수입	14.4	14.5	14.5	14.5	14.5	14.6	14.5
프로그램지출	14.1	14.2	14.0	13.9	13.8	13.7	13.6
이자지출	1.2	1.1	1.2	1.2	1.3	1.3	1.3
재정수지	-0.9	-0.8	-0.8	-0.8	-0.7	-0.6	-0.5
연방채무	31.0	30.4	30.1	29.8	29.4	28.9	28.4

주: 1) FY2017-18 연방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2.6 일부 발췌

〈표 V-3〉 2017년 FES 이후 조정내역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17 FES 재정수지(위험조정 포함) <sup>1)</sup>	-19.9	-18.6	-17.3	-16.8	-13.9	-12.5
2017 FES 재정수지(위험조정 제외)	-18.4	-15.6	-14.3	-13.8	-10.9	-9.5
2017 FES 이후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3.0	3.6	4.1	3.5	2.8	2.8
2017 FES 이후 정책 및 Budget 2018 투자에 의한 조정	-4.0	-3.1	-4.3	-3.6	-2.7	-2.6
재정수지	-19.4	-15.1	-14.5	-13.9	-10.8	-9.3
위험조정		-3.0	-3.0	-3.0	-3.0	-3.0
Budget 2018 재정수지	-19.4	-18.1	-17.5	-16.9	-13.8	-12.3

주: 1) -는 재정적자요인의 증가, +는 재정적자요인 감소를 의미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2.2 일부 발췌

## 2 예산기조

- FY2018 예산안은 「강한 중산층을 위한 평등과 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주제로, 모든 캐나다 국민이 미래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
  - 캐나다 정부는 중산층 강화와 캐나다의 장기경제성장을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2018 예산안에서도 중산층을 위한 투자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캐나다 국민의 기술향상 및 공평한 기회 확대에 중점 투자할 계획
  - 이번 예산안에서는 성장(Growth), 진보(Progress), 조화(Reconciliation), 발전 (Advancement), 평등(Equality)에 대한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
  - 특히, 2018 예산안에서는 GBA+(Gender-Based Analysis Plus)<sup>80)</sup>를 도입하여 각 정책들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캐나다 정부는 여성 경제참여 촉진과 직장 내 양성평등이 경제성장을 상승 및 중산층 강화에 귀결된다고 언급
    - － 캐나다 정부는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GDP의 4%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고령화 효과도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
  - 2018년 예산안도 전년과 동일하게 적자재정(181억캐나다달러)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가, 소비·투자 증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기대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FY2017-18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8-19 총세입은 FY2017-18 대비 4.5% 증가한 3,23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5%),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조세수입) FY2017-18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80억캐나다달러(7.4%) 증가한 2,623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2.2%)로 전망

80) GBA+는 우리나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유사한 개념이며 남성과 여성 간 양성평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요소들(인종, 민족, 종교, 나이, 신체 등)을 고려하는 정책분석도구임

- (개인소득세) 총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 수입은 FY2017-18 전년 대비 86억캐나다달러(6.0%) 증가한 1,523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전망
  - 개인소득세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소득세제시스템의 누적적 성격과 개인소득 증가로 인해 명목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법인세) FY2017-18 법인세 수입은 기업이익 증대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0억 캐나다달러(14.2%) 증가한 482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4% 증가 전망
  - 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법인세 하락(2019년 9%)에 기인하여 법인세 수입은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증가할 전망
- (비거주자 소득세) 비거주자 소득세는 기업이익 증대에 따른 배당금, 투자 및 이자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FY2017-18에는 전년 대비 11억캐나다달러(15.2%) 증가한 82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9%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7-18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 대비 6.2% 증가할 전망이며, 과세대상 소비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세) FY2017-18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시행으로 향후 5년간 관세 수입은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소비세) FY2017-18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16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7-18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7년 손익분기율 메커니즘(seven-year break-even rate mechanism)'에 의거하여 전년 대비 7.1% 감소할 전망
  - \* 7년 손익분기율 메커니즘(seven-year break-even rate mechanism) : 7년간 고용보험료 수입이 고용보험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수준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7년 손익분기율 전망을 기반으로 매년 보험료율을 재설정

- 2018년 고용보험요율 상향 조정(1.66%) 및 2018년 예산안에서의 고용보험 관련 정책들의 영향으로 향후 전망기간동안 고용보험 수입은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기타 세입) FY2017-18 기타 세입은 전년 대비 1.1% 감소, FY2018-19는 9.7% 증가할 전망

〈표 V-4〉 세입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6-17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총소득세(A)	193.0	208.6	217.0	225.0	233.2	243.0	251.2
개인소득세	143.7	152.3	161.4	168.6	175.2	182.8	190.0
법인세	42.2	48.2	47.3	47.9	49.4	51.4	52.2
비거주자소득세	7.1	8.2	8.3	8.5	8.7	8.8	9.0
총소비세(B)	51.3	53.7	55.4	56.7	58.4	60.2	62.0
재화 및 용역세	34.4	36.5	37.7	39.2	40.6	42.0	43.5
관세	5.5	5.5	5.5	5.3	5.4	5.5	5.7
기타소비세	11.5	11.6	12.1	12.3	12.5	12.7	12.8
<b>총조세수입(C=A+B)</b>	<b>244.3</b>	<b>262.3</b>	<b>272.3</b>	<b>281.7</b>	<b>291.6</b>	<b>303.2</b>	<b>313.2</b>
고용보험(D)	22.1	20.6	21.7	22.6	23.3	24.1	25.0
기타 세입(E)	27.1	26.8	29.4	31.3	33.1	34.8	35.8
<b>총세입(F=C+D+E)</b>	<b>293.5</b>	<b>309.6</b>	<b>323.4</b>	<b>335.5</b>	<b>348.0</b>	<b>362.1</b>	<b>373.9</b>
<b>GDP 대비 비중(%)</b>							
개인소득세	7.1	7.1	7.2	7.3	7.3	7.4	7.4
법인세	2.1	2.3	2.1	2.1	2.1	2.1	2.0
재화 및 용역세	1.7	1.7	1.7	1.7	1.7	1.7	1.7
<b>총조세수입</b>	<b>12.0</b>	<b>12.2</b>	<b>12.2</b>	<b>12.2</b>	<b>12.2</b>	<b>12.2</b>	<b>12.2</b>
고용보험	1.1	1.0	1.0	1.0	1.0	1.0	1.0
기타 세입	1.3	1.3	1.3	1.4	1.4	1.4	1.4
<b>총세입</b>	<b>14.4</b>	<b>14.5</b>	<b>14.5</b>	<b>14.5</b>	<b>14.5</b>	<b>14.6</b>	<b>14.5</b>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2.7 일부 발췌

## 나. 세출

- 총세출은 FY2017-18 전년 대비 6.1% 증가한 3,046억캐나다달러, FY2018-19 전년 대비 2.5% 증가한 3,122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FY2017-18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94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1,161억 캐나다달러(FY2022-23)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 노인지원 지출은 FY2017-18 509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노인인구 전망 증가에 기인하여 향후 670억캐나다달러(FY2022-23)까지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지출은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소득보장보조금 및 수당 지급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Allowance payments)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노인지원지출은 연평균 5.6%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7-18 고용보험 지출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20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평균주급수당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연평균 3.6%의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아동지원) FY2017-18 아동지원지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3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부터 시작되는 급여연동<sup>81)</sup>의 영향으로 FY2022-23에는 251억 캐나다달러, 연평균 1.4%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sup>82)</sup>)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17-18 705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에는 847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 FY2017-18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37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44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FY2017-18부터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하며 매년 최소 3% 증가 보장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를 법에서 규정, FY2017-18 137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5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81) 2020년부터 물가와 연동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예산안에서 2년 앞당긴 2018.7월부터 생계비인상에 따라 급여가 인상될 예정임

82)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 (연료세 기금) 연료세기금(Gas Tax Fund)은 FY2017-18 2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23억캐나다달러를 나타낼 전망
- (홈케어 및 정신보건) 2017예산에서 도입된 지방·주정부 홈케어및정신보건 지원금은 FY2017-18 3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2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sup>83)</sup>) FY2017-18 직접프로그램지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397억캐나다달러, FY2022-23에는 1,493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부처 이전 지출경비가 증가분의 큰 부분을 차지
- (부처 이전지출경비) 부처 이전지출경비는 FY2017-18 44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520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FY2017-18에 새로 도입된 상이군인연금(Pension for Life for veterans) 지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한 956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22-23에는 973억캐나다달러로 연평균 1.1% 증가

83) 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분하여 부처에 예산 배분

〈표 V-5〉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6-17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b> (Major Transfers to persons)	<b>90.9</b>	<b>94.4</b>	<b>98.1</b>	<b>102.3</b>	<b>106.8</b>	<b>111.5</b>	<b>116.1</b>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48.2	50.9	53.6	56.7	60.1	63.5	67.0
고용보험(EI benefits) <sup>1)</sup>	20.7	20.1	20.7	21.7	22.5	23.3	24.0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22.1	23.4	23.7	23.9	24.3	24.7	25.1
<b>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B)</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b>68.7</b>	<b>70.5</b>	<b>73.6</b>	<b>76.5</b>	<b>79.3</b>	<b>82.3</b>	<b>84.7</b>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36.1	37.1	38.6	40.2	41.7	43.3	44.9
사회보장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3.3	13.7	14.2	14.6	15.0	15.5	15.9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17.9	18.3	19.0	19.8	20.5	21.3	22.1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3.6	3.7	3.8	3.9	4.0	4.1	4.2
연료세기금(Gas Tax Fund) <sup>2)</sup>	2.1	2.1	2.2	2.2	2.2	2.3	2.3
홈케어및정신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0.0	0.3	0.9	1.1	1.3	1.5	1.2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sup>3)</sup>	-4.3	-4.7	-4.9	-5.3	-5.4	-5.6	-5.9
<b>직접프로그램지출(C)</b> (Direct Program Expenses)	<b>127.6</b>	<b>139.7</b>	<b>140.5</b>	<b>142.7</b>	<b>145.3</b>	<b>147.0</b>	<b>149.3</b>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41.6	44.1	47.5	50.4	52.4	52.0	52.0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sup>4)</sup>	86.0	95.6	93.1	92.3	92.9	94.9	97.3
<b>총프로그램지출(A+B+C)</b> (Total Program Expenses)	<b>287.2</b>	<b>304.6</b>	<b>312.2</b>	<b>321.5</b>	<b>331.5</b>	<b>340.7</b>	<b>350.1</b>
<b>GDP 대비 비중(%)</b>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5	4.4	4.4	4.4	4.5	4.5	4.5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4	3.3	3.3	3.3	3.3	3.3	3.3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6.3	6.5	6.3	6.2	6.1	5.9	5.8
<b>총프로그램지출</b> (Total Program Expenses)	<b>14.1</b>	<b>14.2</b>	<b>14.0</b>	<b>13.9</b>	<b>13.8</b>	<b>13.7</b>	<b>13.6</b>

주: 1)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지출 중 90%를 차지

2) 지역향상기금(Community Improvement Fund)의 구성항목

3)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Stand Programs 대체 지불, 법정 보조금, 2005년 해외협약에 따른 지급금 등을 포함

4)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2.8

## 4 주요 재정정책

### 가. 평등과 성장

- FY2018 예산안에서는 ‘평등과 성장’을 키워드로, 공평한 기회 확대를 통한 중산층 강화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계획
  - (성장) 새로운 근로장려세제(Canada Workers Benefit)<sup>84)</sup> 도입,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강화, 육아휴직 기간 확대(35주→40주), 남성중심의 특수분야(Red Seal Trades)에 여성진출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 투자, 공정한 세제시스템 강화 등
    - 근로장려세제(Canada Workers Benefit) 강화: 기존의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를 강화하여 최대 혜택급여 증대 및 급여중단소득 상향조정<sup>85)</sup> 등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가 기존 제도보다 높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강화: 저소득 및 미혼모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2018.7월부터 생계비(cost of living)에 연동하여 아동복지급여를 인상하게 됨에 따라 FY2018-19~FY2022-23 기간 동안 56억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 2016년 7월부터 아동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과 보편적 아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대체하는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가 도입
      - \* 현재 급여 지급액<sup>86)</sup> : (가구소득 연 3만캐나다달러 1자녀 기준) 6세미만 자녀당 월 533.33 캐나다달러(연간 6,400캐나다달러), 6~18세 미만 자녀당 월 450캐나다달러(연간 5,400캐나다달러)
        - 가구소득이 3만~6만 5천캐나다달러 구간에 속하면 소득의 7%만큼 급여에서 삭감, 소득이 6만 5천캐나다달러 초과 시 추가 3.2% 삭감하며 자녀 수와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육아휴직에 5주를 추가하여 총 40주를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12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고 5년 후부터는 매년 345백만캐나다달러 추가지원(2019.6월 시행예정)

84) 기존의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를 강화하는 제도로 저소득계층의 세금경감 및 근로활동참여 증진을 목표로 함.

85) 최대 혜택급여(maximum benefit) : (독신) 1,043캐나다달러 → 1,192캐나다달러  
(가구) 1,894캐나다달러 → 2,165캐나다달러

급여중단소득(Net income where WITB is reduced to zero) : (독신) 18,792캐나다달러 → 20,734캐나다달러  
(가구) 28,975캐나다달러 → 32,339캐나다달러

86)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we-calculate-your-ccb.html>

- 남성중심의 특수기술직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을 위한 기술훈련을 지원하는 ‘Apprenticeship Incentive Grant for Women’ 구축에 향후 5년간 19.9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일자리창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하계일자리프로그램(Canada Summer Jobs)에 향후 5년간 448.5백만캐나다달러 투자 등
- 공정한 세제시스템 강화: 탈세 및 조세회피 근절, 중소기업 법인세율 감소(2018.1월 10%→2019.1월 9%)
- (진보) 캐나다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 과학자, 연구원 및 장비 등 투자 확대
  - 캐나다 차세대 연구원(next generation researchers) 지원에 5년간 17억캐나다달러, 실험실, 장비 및 연구 인프라 구축에 5년간 13억캐나다달러 투자
  - 캐나다 과학자 및 연구원 지원을 위한 3개 기관(Granting Councils)<sup>87)</sup>에 향후 5년간 923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연구원들의 빅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 지원을 위한 ‘Digital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에 향후 5년간 573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조화) 원주민과 조화를 바탕으로 둔 정책을 중심으로 원주민 보호를 위한 가족, 보건, 주택, 물 등에 대한 투자(FY2022-23까지 약 41억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원주민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강화에 6년간 14억캐나다달러 추가지원
  - 원주민 주택 개량 및 확충 등 지원에 5년간 10억캐나다달러 지원
    - 3년간 First Nations 주택지원에 6억캐나다달러 추가지원 및 향후 10년간 Inuit족 4억캐나다달러, Métis족 5억캐나다달러 지원 포함
  - 원주민 보건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에 5년간 15억캐나다달러 투자
  - 깨끗한 물 공급 및 보존을 위한 투자에 향후 3년간 173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발전) 캐나다 자연유산 보호에 지속적인 투자, 국제원조 지원 강화, 안전한 국가 구현 등의 정책에 중점투자
  - 자연보호: 2016.12월 채택된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에 12년간 57억캐나다달러 투자 등
  - 국제원조: 신 세계여성지원정책(new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sup>88)</sup>에

87) ①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②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③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88) 세계여성지원정책은 UN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환이며, 여성의 권리강화 및 양성평등이 주요 목표

5년간 20억캐나다달러 지원, 분쟁지역 여성난민 1천명 추가 지원을 위해 5년간 2천만 캐나다달러 투자 등

– 국민건강

- 매년 수천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는 오피오이드(opioid) 중독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31백만캐나다달러 지원
- 국가 의약품 보조정책(National Pharmacare) 시행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 흡연을 감소를 위한 담뱃세 인상(1카틴(200개피)당 1캐나다달러 인상)

– 안전한 국가 구현

- 사이버 안보강화: 사이버안보센터(Canadian Centre for Cyber Security) 설립에 향후 5년간 155백만캐나다달러, 국제사이버범죄 전담반(National Cybercrime Coordination Unit) 창설에 향후 5년간 116백만캐나다달러,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지원에 향후 5년간 236.5백만 캐나다 달러 투자
- 성관련 폭력(gender-based violation program) 방지 프로그램 지원에 향후 5년간 86백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표 V-6〉 FY2018 예산안에서의 부문별 투자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성장(Growth)	0.0	-0.3	0.1	-0.3	-0.2	-0.3
진보(Progress)	0.0	0.9	1.2	1.4	1.4	1.6
조화(Reconciliation)	0.1	1.4	1.2	0.8	0.7	0.6
발전(Advancement)	4.2	1.8	1.3	1.3	1.2	0.6
기타(Other Budget 2018 Investment)	2.1	1.6	-1.1	-1.1	-0.9	0.4
총 투자	6.3	5.4	2.6	2.0	2.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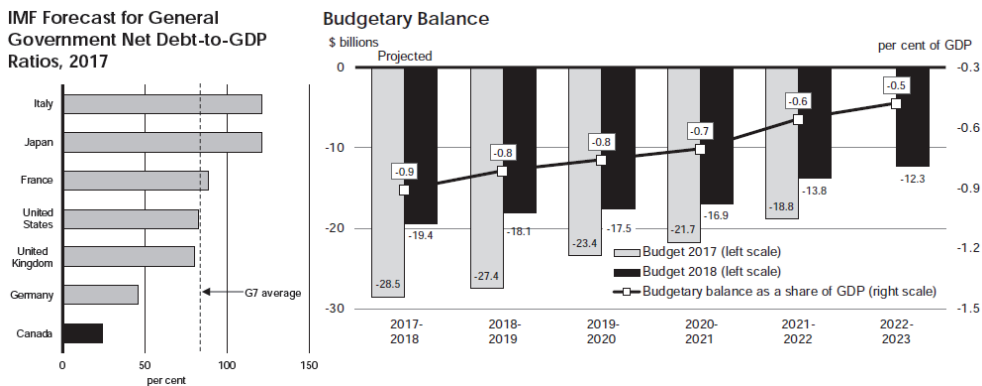
주: +는 투자 증가분, -는 투자 감소분을 의미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2.2

## 나. 재정건전화

- FY2018 예산안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했으나 이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전망기간 동안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을 발표
  - IMF 발표(2017.1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캐나다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G7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평균의 절반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해 낮은 채무의 이점을 유지할 계획
    - 재정적자는 GDP 대비 FY2017-18 0.9%에서 FY2022-23 0.5%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그림 V-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 및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Chart 3, 4

- FY2018-19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외 채무, 기타 금융부채 및 관련자산의 관리에 대한 목표·전략·계획을 설정
  - 채무관리의 기본 목표는 캐나다 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저비용으로 조달하고 정부채권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FY2018-19 연말기준 총시장채무<sup>89)</sup>는 7,550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할 전망

89) 캐나다의 총채무(Gross debt) 중 시장채무(Market de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시장채무관리를 주로 다룸. 예산안 및 재무결산상 채무지표는 연방채무(누적 기준)나, 예산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채무(유가증권, 단기국채, 외채, 소매채무로 구성)를 중심으로 중기 채무전략을 보여줌.

- (유가증권 및 단기국채) FY2018-19 유가증권은 약 5,980억캐나다달러, FY2018-19 단기국채는 약 1,38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소매채무 및 외채) FY2018-19 소매채무는 약 2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 외채는 약 17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V-7〉 FY2018-19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연말기준, 십억캐나다달러)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추정)	2018-19 (전망)
유가증권(Domestic bonds)	488	504	536	578	598
단기국채(Treasury bills)	136	138	137	125	138
외채(Foreign debt)	20	22	18	16	17
소매채무(Retail debt)	6	5	5	4	2
<b>총시장채무</b>	<b>649</b>	<b>670</b>	<b>695</b>	<b>723</b>	<b>755</b>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2018, 2, 27, Table A3.2



## VI. 호 주

□ FY2017-18 : 2017년 7월 ~ 2018년 6월

□ 출처

- Budget Overview, The Treasury, 2017.5.9.
- Budget Paper No.1 ~ No.2 2017-18, The Treasury, 201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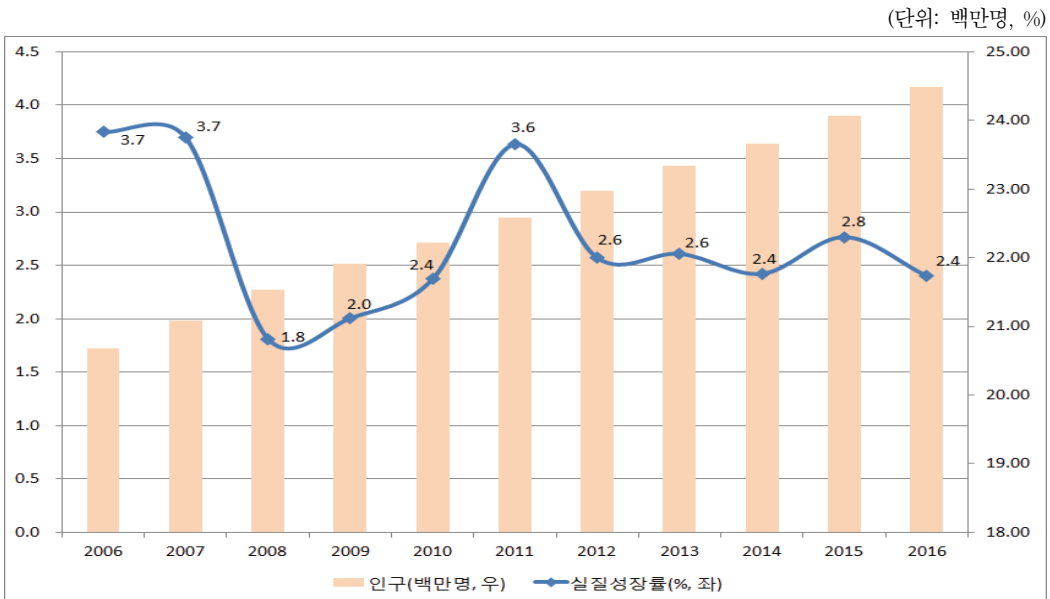
□ 환율 : 1호주달러 = 약 863.26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6년 경상GDP 1조 1,844억 달러(우리나라 0.65배 수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5년 기준 40.0%(우리나라 84.8%)

□ 인구 : 2,449만명(2016년 추정치)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 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7. 9. 26.	FY2016-17 결산보고서 발표	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7. 11. 9.	경제전망 업데이트 발표	
2017. 11. 24.	2016년 10월 재정보고서 발표	
2017. 12. 6.	9월분기 국민계정 발표	
2017. 12. 18.	FY2017-18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발표	
2018. 2. 9.	2018 경제전망 업데이트 발표	2018년 「재정동향」 2월 제1호
2018. 3. 6.	2017년 12월 분기(December Quarter) 정부재정통계 발표	2018년 「재정동향」 3월 제1호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광산 투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가계 소비 및 비광산 부문의 투자 개선으로 경제 반등이 예상됨
- (재정전망) FY2017-18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294억호주달러 (GDP 대비 -1.6%)로 전망되며, FY2020-21에 74억호주달러(GDP 대비 0.4%)로 흑자 전환 전망

□ 예산기조: FY2017-18 예산안은 공정, 안보, 기회 증진에 기반하여 1)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2) 공공서비스 보장, 3) 생활비 부담 경감, 4) 균형예산(balanced budget) 달성에 초점

##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17-18 재정수입은 FY2016-17 대비 7.8% 증가한 4,444억호주달러 (GDP 대비 24.4%)로 편성
- (지출) FY2017-18 재정지출은 FY2016-17 대비 3.0% 증가한 4,643억호주달러 (GDP 대비 25.5%)로 편성

## □ 주요 재정정책

- (일자리창출 및 성장 활성화) 인프라투자, 기업 지원, 호주인 우선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기대
- (복지) 주택 공급 확대,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등으로 주택 구매력을 증진하고, 의료·복지혜택 확대
- (재정건전화) FY2017-18 예산안은 FY2020-21 균형재정 및 중기적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며, 정부지출은 FY2020-21에 GDP 대비 25% 규모로 감소하여 30년 평균수준에 가까워질 전망
  - － 향후 5년간 총 98억 38백만호주달러의 예산 절감 계획
  - － 은행세(Major bank levy) 도입으로 추가 재정 확보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광산 투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가계 소비 및 비광산 부문의 투자 개선으로 경제 반등이 예상됨
  - (경제) 실질GDP 성장률이 FY2017-18에 2.75%, FY2018-19에 3.0%로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비광산 부분 및 자원 및 서비스 수출부분이 경제 성장을 지지하고, 단기적으로 주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계획
    - 완화적 통화정책(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낮은 환율,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기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
    - 명목GDP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영향을 받아 FY2016-17에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량 감소가 반영되어 FY2017-18 및 FY2018-19에 4.0%로 전망
  - (고용) FY2017-18 및 FY2018-19 고용률 전망은 1.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음
    - '16년 하반기 평균 GDP 성장률의 둔화가 반영되어 실업률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망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물가) FY2017-18 소비자물가지수를 2.75%로 예측하였으나, 무역 조건 및 명목GDP 전망 등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표 V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sup>1)</sup> 전망

(단위: %)

	실적(Outcomes)	추정(Forecast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실질GDP 성장률	2.6	1.75	2.75	3.0
고용률	1.9	1.0	1.5	1.5
실업률	5.7	5.75	5.75	5.5
소비자물가지수	2.9	2.5	2.75	3.0
명목GDP 성장률	2.3	6.0	4.0	4.0

주: 실질GDP 성장률과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2사분기(June Quarter) 기준 연증가율,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 나. 재정전망

- FY2017-18 예산수지<sup>90)</sup>는 -294억호주달러(GDP 대비 -1.6%)로 전망되며, FY2020-21에 74억호주달러(GDP 대비 0.4%)로 흑자 전환 전망
- (재정수입) FY2017-18 재정수입은 4,444억호주달러(GDP 대비 24.4%)이며, FY2020-21에 5,404억호주달러(GDP 대비 26.0%)로 개선될 전망
  - (재정지출) FY2017-18 재정지출은 4,643억호주달러(GDP 대비 25.5%)이며, FY2020-21에 5,229억호주달러 (GDP 대비 25.2%)로 감소 전망
  - (재정수지) FY2017-18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203억호주달러(GDP 대비 -1.1%)에서 114억호주달러(GDP 대비 0.6%) 흑자로 개선 전망

〈표 V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재정수입(Revenue) <sup>1)</sup>	412.1	444.4	476.1	510.8	540.4
GDP 대비 비율	23.5	24.4	25.2	25.8	26.0
재정지출(Expenses) <sup>1)</sup>	450.8	464.3	486.9	503.2	522.9
GDP 대비 비율	25.7	25.5	25.7	25.4	25.2
재정수지(Fiscal Balance) <sup>2)</sup>	-40.7	-20.3	-15.5	2.7	11.4
GDP 대비 비율	-2.3	-1.1	-0.8	0.1	0.6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sup>3)</sup>	-37.6	-29.4	-21.4	-2.5	7.4
GDP 대비 비율	-2.1	-1.6	-1.1	-0.1	0.4
순채무(Net debt) <sup>1)</sup>	325.1	354.9	375.1	374.7	366.2
GDP 대비 비율	18.6	19.5	19.8	18.9	17.6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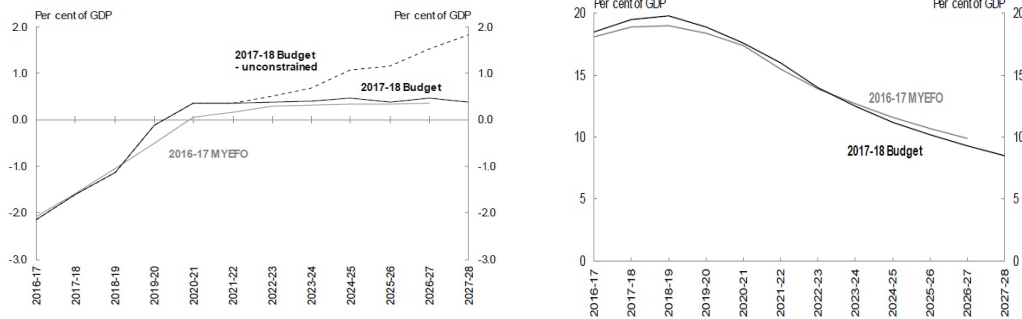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90) 예산수지는 현금주의 기준(Future Fund 예상수익금 제외)이며, 재정수지는 발생주의 기준. 호주예산은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두 가지 회계가 혼합되어 사용되며, 예산편성 및 승인 등의 과정에서는 현금주의를 이용하는 반면 세출, 예산집행 및 보고 등에는 발생주의 적용.

- (예산수지) FY2017-18 예산수지는 -294억호주달러(GDP 대비 -1.6%)에서 FY2020-21에 74억호주달러(GDP 대비 0.4%)로 흑자 전환 전망
  - (순채무) 순채무는 FY2018-19에 GDP 대비 19.8%로 정점에 다다른 후 FY2020-21에 17.6%로 감소
- (중기재정전망) 중기적으로 현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FY2020-21에 균형예산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기재정전략) 호주 정부는 평균적으로 예산 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재정전략을 유지
    - 생산성 및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질적 투자로의 정부 지출 재분배
    - 고용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지출제한을 통하여 민간 투자 자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을 유지
      -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payments to GDP ratio) 감축
      - 순채무 감축 및 안정화
    - 소득 및 경제성장 제고 정책을 통해 세입 증가율 지지
    -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개선을 통한 재정 수지 강화
  - (재정회복전략) GDP 대비 최소 1%의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전략
    - 신규 재정지출은 다른 예산분야의 지출 삭감으로 상쇄
    - 경제변화로 인한 수입 및 지출의 변화분이 예결산의 개선으로 반영
  - (주요내용)
    - (예산수지) FY2016-17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전망 대비 개선되어 FY2020-21에 예산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FY2027-28에는 GDP 대비 1.8%의 흑자를 기록하여 중기적으로 완만한 흑자 전망
    - (순채무) 순채무 역시 반기경제재정보고서 전망 대비 개선되어, FY2018-19에 GDP 대비 19.8%로 정점을 찍은 후 중기적으로는 FY2027-28에 GDP 대비 8.5%까지 감소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FY2017-18에 GDP 대비 약 2% 적자 수준에서 FY2020-21에 소폭의 흑자로 전환될 전망

[그림 VI-1]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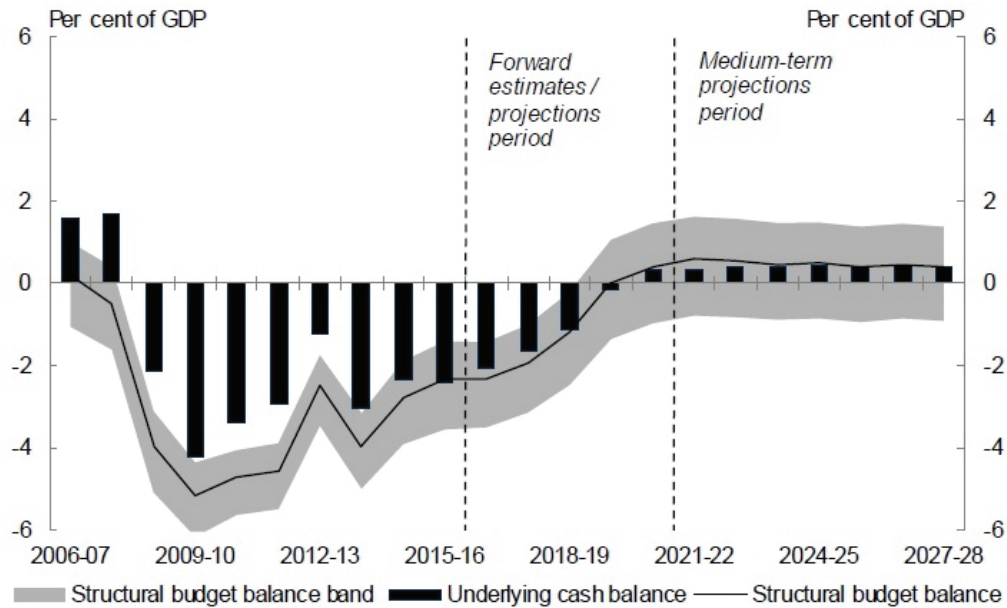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주: 회색선은 반기재정전망보고서(MYEFO)의 전망, 검은선은 FY2017-18 예산안 전망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그림 VI-2]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막대는 예산수지, 실선은 구조적 재정수지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 2 예산기조

- FY2017-18 예산안은 공정, 안보, 기회 증진에 기반하여 1)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2) 공공 서비스 보장, 3) 생활비 부담 경감, 4) 균형예산 달성에 초점
  - (Stronger growth)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주요 인프라 투자 및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 30% 수준에서 FY2026-27년까지 25%로 점진적 인하 계획
    - 연매출 1천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즉각적 세금 혜택 제공
    - FY2017-18부터 FY2026-27까지 10년간 도로, 철로, 공항 등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750억호주달러를 투입
    - 전국적 규모의 철로 건설을 위해 100억호주달러 규모의 National Rail Program 운영 등
  - (Guaranteeing the essentials) 보건, 주거, 장애인, 교육, 고용 등 공공 서비스 보장
    - 메디케어 보장 펀드(Medicare Guarantee Fund) 설립('17년 6월)<sup>91)</sup>, 의료복지혜택 확대
    - 국립장애인보험제도(NDIS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재원 확충을 위해 메디케어(호주 국민의료보험) 부담금 인상
    - 수요에 기반(needs-based)한 곤스키(Gonski)<sup>92)</sup> 방식의 공정한(fairer) 학교 지원금 방식 도입
    - 국방예산을 FY2016-17 324억호주달러에서 FY2025-26 587억호주달러로 증액 등
- (Downward pressure on cost of living) 주택·주거, 에너지·전기, 보육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비(cost of living) 압박을 완화
  -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지원책, 주택 다운사이징 희망자에 혜택 제공 등으로 주택 구매력 증진
  - 보육시설 (child care) 이용성, 접근성, 유연성 증진

91) 보험급여와 약제급여(Medicare Benefits Schedule and the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메디케어(호주 국민의료보험) 부담금 및 소득세가 주요 재원임

92) 수요에 기반한 교육재정모델로 학교 규모나 수요, 지역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배분하여 모든 학생들이 거주지나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가격 안정화, 가스공급량 증대 등으로 에너지공급 신뢰도, 가용성, 지속가능성 확보
-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은행 시스템
- (Living within our means) FY2020-21에 균형예산 회복 노력 및 AAA신용등급 유지
  -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대상으로 세수 확보
  - 지하경제로부터 150억 달러 세금 추징 등 조세 청렴성 증진

〈표 VI-3〉 주요 정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호주달러)

Initiative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Total
	\$m	\$m	\$m	\$m	\$m	\$m
Quality Schools – true needs-based funding for Australia's schools	0.0	-106.4	-295.4	-511.3	-840.3	-1,753.5
Skilling Australians Fund	0.0	-350.0	-360.0	-390.0	-370.0	-1,470.0
Improving Access to Medicines –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 new and amended listings	-31.4	-213.3	-264.1	-312.3	-346.2	-1,167.3
Guaranteeing Medicare – Medicare Benefits Schedule – indexation	0.0	-9.5	-146.0	-403.4	-443.4	-1,002.3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gramme – National Rail Program	0.0	0.0	0.0	-200.0	-400.0	-600.0
Support for Health Services in Tasmania	-730.4	60.9	60.9	60.9	61.9	-485.9
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Universal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 extension	0.0	-128.4	-301.0	0.0	0.0	-429.4
Regional Growth Fund	0.0	-19.8	-100.0	-235.6	-116.8	-472.2
Reducing Pressure on Housing Affordability – a new National Housing and Homelessness Agreement	0.0	-2.0	-122.6	-126.6	-130.6	-381.8
National Security – Australian Federal Police – additional resourcing	0.0	-62.3	-104.5	-81.3	-73.5	-321.5
National Partnership on Regulatory Reform – establishment	0.0	-127.3	-177.2	-2.1	-2.1	-308.7
ParentsNext – national expansion	0.0	-25.5	-82.0	-76.6	-78.9	-263.0
WA Infrastructure and GST Top-Up Payment	-226.0	0.0	0.0	0.0	0.0	-226.0
Veteran Centric Reform	0.0	-142.1	-16.0	-4.2	-4.2	-166.6
<b>Total</b>	<b>-987.8</b>	<b>-1,125.6</b>	<b>-1,907.9</b>	<b>-2,282.6</b>	<b>-2,744.2</b>	<b>-9,048.1</b>

Revenue measure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Total
	\$m	\$m	\$m	\$m	\$m	\$m
Personal income tax – increase in the Medicare levy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0.0	0.0	400.0	3,550.0	4,250.0	8,200.0
Major bank levy – introduction	0.0	1,598.8	1,500.0	1,500.0	1,600.0	6,198.8
Skilling Australians Fund levy – introduction	0.0	88.7	360.0	390.0	370.0	1,208.8
Extending the immediate deductibility threshold for small businesses	0.0	..	-950.0	50.0	250.0	-650.0
Reducing Pressure on Housing Affordability – capital gains tax changes for foreign investors	*	145.2	95.3	145.3	195.2	581.0
Reducing Pressure on Housing Affordability – disallow the deduction of travel expenses for residential rental property	0.0	..	160.0	180.0	200.0	540.0
Tax Integrity Package – Black Economy Taskforce: one year extension of funding for ATO audit and compliance activities	0.0	360.1	53.9	24.3	8.9	447.2
Broadcasting and Content Reform Package – replacing broadcast licence fees with broadcast spectrum pricing	-126.9	-93.2	-73.1	-73.1	-73.1	-439.4
Indexation of visa application charges	0.0	35.0	70.0	125.0	180.0	410.0
Additional funding for addressing serious and organised crime in the tax system	0.0	37.9	118.5	111.4	112.5	380.3
Aligning the tax treatment of roll your own tobacco and cigarettes	0.0	30.0	70.0	110.0	150.0	360.0
Reducing Pressure on Housing Affordability – limit plant and equipment depreciation deductions to outlays actually incurred by investors	0.0	0.0	40.0	100.0	120.0	260.0
Reducing Pressure on Housing Affordability –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0.0	-54.0	-62.1	-71.8	-71.6	-259.4
Tax Integrity Package – Black Economy Taskforce: extension of the taxable payments reporting system (TPRS) to contractors in the courier and cleaning industries	0.0	-21.7	-34.0	98.0	142.4	184.6
<b>Total</b>	<b>-126.9</b>	<b>2,126.9</b>	<b>1,748.5</b>	<b>6,239.1</b>	<b>7,434.3</b>	<b>17,421.8</b>

출처: *Budget 2017-18, Overview*, The Treasury, 201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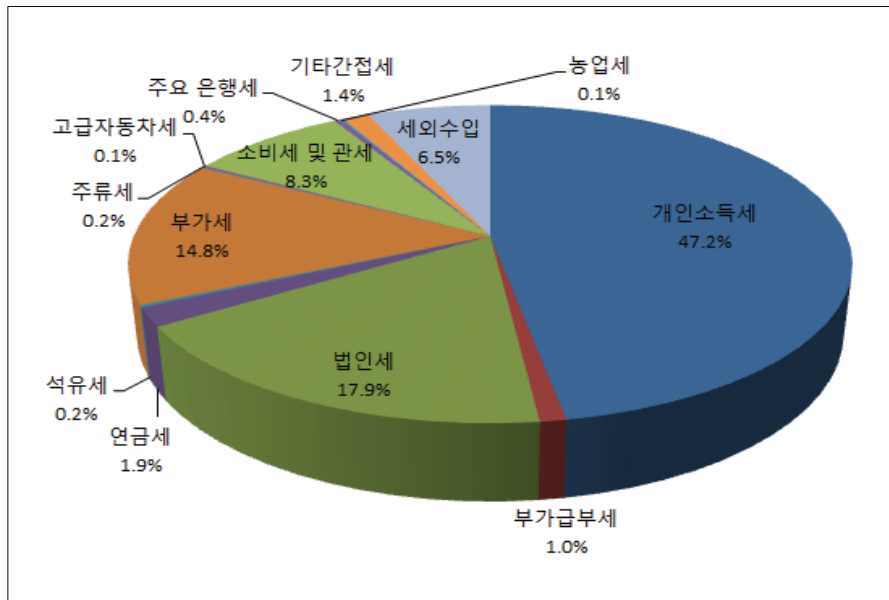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FY2017-18 재정수입은 '16년 전망 대비 7.8% 증가한 4,444억호주달러(GDP 대비 24.4%)로 편성
  - (조세수입) 4,154억호주달러로 '16년 12월 발표된 반기재정전망보고서(MYEFO) 대비 26억호주달러(0.6%) 상향 조정되었으며, 메디케어 부담금 인상(현행 2%→ 2.5%), 주요 5대 은행에 대한 은행세(Major bank levy) 도입 등으로 인해 향후 4년간 조세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290억호주달러로 반기재정전망보고서(MYEFO) 대비 6억호주달러(2.1%) 증가

[그림 VI-3] FY2017-18 재정수입 구성

(단위: %)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표 VI-4〉 재정수입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 FY2016-17 MYEFO	411,112	441,223	473,062	502,699
■ FY2017-18 예산안	412,091	444,414	476,099	510,819
증 감	979	3,191	3,037	8,120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표 VI-5〉 FY2017-18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sup>1)</sup>

(단위: 백만호주달러, %)

	2017-18		증감(b-a)	
	MYEFO <sup>2)</sup>	예산안	금액	비율
<b>조세수입(Taxation Revenue)</b>	412,842	415,428	2,586	0.6
소득세(Income taxation revenue)	302,160	302,970	810	0.3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209,330	209,610	280	0.1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4,550	4,430	-120	-2.6
법인세(Company tax)	78,600	79,400	800	1.0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8,790	8,540	-250	-2.8
석유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890	990	100	11.2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venue)	110,682	112,458	1,776	1.6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65,680	65,710	30	0.0
주류세(Wine equalisation tax)	940	900	-40	-4.3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640	650	10	1.6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36,820	36,920	100	0.3
주요 은행세(Major bank levy)	-	1,600	1,600	-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518	537	19	3.6
기타간접세(Other taxes)	6,083	6,141	57	0.9
<b>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b>	28,381	28,987	606	2.1
<b>재정수입(Total Revenue)</b>	441,223	444,414	3,191	0.7

주: 1) 발생주의 기준

2) MYEFO는 반기경제재정보고서(12월발표)의 약어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2016.12.19.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 나. 세출

- FY2017-18 재정지출은 '16년 전망 대비 3.0% 증가한 4,643억호주달러(GDP 대비 25.5%)로 편성
  -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교육, 국방 분야 지출이 총지출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및 복지가 총지출의 35.3%로 가장 큰 비중
  - 지출규모 상위 20개의 지출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이 노령자, 장애인, 학생, 간병인, 실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
  
- 주요 기능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일반 공공서비스) 대외 원조(Foreign aid) 금액에 기인해 재정지출의 증가 및 감소 요인이 있음
  - (국방) FY2017-18 300억 호주달러에서 FY2020-21 339억 호주달러까지 5.3%의 실질 증가율(명목증가율 12.7%)을 보이며, 이는 '16년 국방백서(Defence White Paper)상의 우선순위 정책 지원을 반영한 데 기인
  - (교육) 수요에 기반한 교육재정 지원, 유아교육 접근성 확대, 공립학교 등록률 제고 등의 정책에 따라 지출 증가 전망
  - (보건) 공공 의료 서비스 수요 및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FY2017-18년에 753억 호주달러에서 FY2020-21 826억호주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 및 복지) 국가장애평험계획, 보육지원, 간병인 지급금 등의 증가로 FY2017-18년에 1,641억호주달러에서 FY2020-21 1,912억호주달러로 증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국가파트너십 협정에 따른 지급금 완료, 도시·지역개발 프로젝트 완료 등으로 감소
  - (교통·통신) 도로 및 철도 부문 주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감소 전망

〈표 VI-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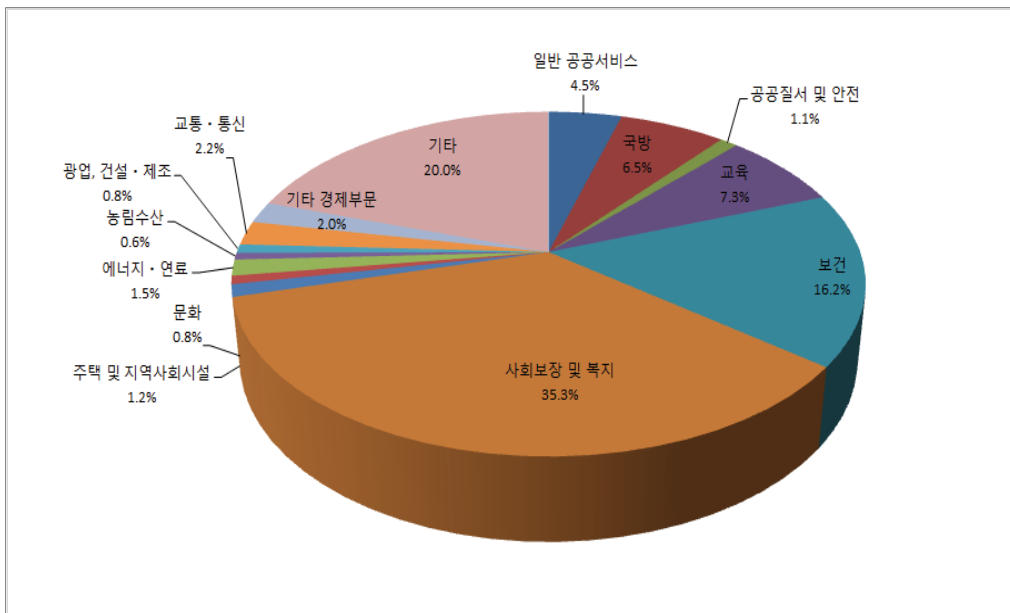
(단위: 백만호주달러)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 2016-17 MYEFO 재정지출	448,642	460,382	483,632	503,975
• 2017-18 예산안 재정지출	450,757	464,262	486,863	503,198
증감	2,115	3,880	3,231	-777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그림 VI-4] FY2017-18 재정지출 구성

(단위: %)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표 VI-7〉 FY2017-18 예산안 기능별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일반 공공서비스	27,172	20,703	21,207	21,887	20,820
국방	28,464	30,051	29,877	31,708	33,865
공공질서 및 안전	5,162	5,042	4,940	4,927	4,572
교육	33,237	33,800	34,997	36,161	37,856
보건	73,820	75,277	77,511	80,007	82,590
사회보장 및 복지	155,698	164,059	178,122	184,975	191,206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4,700	5,351	4,876	4,638	4,088
문화	3,609	3,632	3,449	3,344	3,469
에너지·연료	6,790	6,940	7,080	7,426	7,764
농림·임업·수산	2,843	2,972	2,845	2,493	2,408
광업·건설·제조	3,559	3,825	4,188	4,425	4,583
교통·통신	9,394	10,420	8,592	7,470	6,545
기타 경제부문	9,840	9,411	8,894	8,569	8,426
기타	86,468	92,780	100,285	105,167	114,715
<b>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b>	<b>450,757 (25.7)</b>	<b>464,262 (25.5)</b>	<b>486,863 (25.7)</b>	<b>503,198 (25.4)</b>	<b>522,907 (25.2)</b>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표 VI-8〉 FY2017-18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단위: 백만호주달러)

프로그램	분류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주·준주 수입보조(Revenue Assistance to the States and Territories)	기타	59,976	63,071	66,260	68,325	72,202
노령자 소득지원(Income support for seniors)	사회보장·복지	44,468	45,391	47,604	49,744	52,304
의료 급여(Medical Benefits) <sup>1)</sup>	보건	22,197	22,982	24,143	25,815	27,266
주립 병원 지원(Assistance to the States for public hospitals)	보건	18,460	19,563	20,639	21,769	22,677
가족 수당(Family Tax benefits)	사회보장·복지	18,601	19,231	18,763	18,845	18,775
장애인 소득지원(Income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y)	사회보장·복지	16,421	16,923	17,396	18,222	19,140
거주 간호(Residential and flexible care)	사회보장·복지	11,445	12,014	12,663	13,525	14,270
의약품혜택, 서비스 및 공급(Pharmaceutical benefits, Service and Supply)	보건	11,995	11,748	11,596	11,631	11,293
사립학교 국가지원 (Non-government schools National Support)	교육	10,597	11,136	11,690	12,309	12,965
구직자 소득지원(Job seeker income support)	사회보장·복지	10,994	10,038	11,126	11,814	12,547
국가장애보험계획(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사회보장·복지	3,435	9,250	15,922	19,502	20,265
간병인 소득지원(Income Support for carers)	사회보장·복지	8,132	8,484	8,801	8,933	9,003
공공 연금(Public sector superannuation)	기타; 일반공공 서비스	8,972	7,994	8,181	8,350	8,4480
보육비 보조(Child care Fee Assistance) <sup>2)</sup>	사회보장·복지	7,207	7,546	0	0	0
탁아보조금(Child Care Subsidy) <sup>2)</sup>		0	0	8,755	9,566	10,004
군사 능력(Army capabilities)	국방	7,870	7,319	7,365	7,763	8,410
공립학교 지원(Government schools National Support)	교육	6,498	7,081	7,576	8,148	8,743
국가장학금(Commonwealth Grants Scheme)	교육	6,922	6,996	6,901	6,931	7,049
해군 능력(Navy capabilities)	국방	6,208	6,480	6,181	6,427	7,153
유류세 공제 계획(Fuel Tax Credits Scheme)	에너지·연료	6,194	6,308	6,514	6,884	7,349
국가파트너십 - 도로 교통(National Partnership Payments- Road Transport)	교통·통신	5,778	6,172	5,163	4,156	2,744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합계		292,370	305,728	323,239	338,659	352,639

주: 1) 의료급여(Medical Benefits)는 종전의 의료서비스프로그램(Medicare Service program)

2) 보육비 보조(Child care Fee Assistance)에는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및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이 포함되어 있으며, '18년 7월 1일부터 탁아보조금(Child Care Subsidy)으로 대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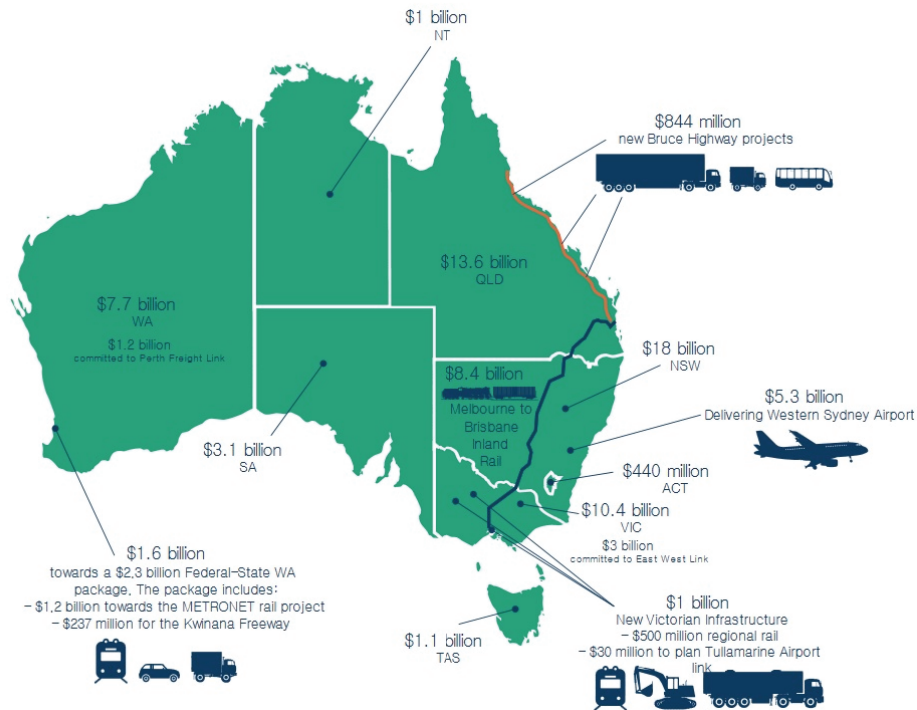
출처: Budget Paper No.1 2017-18, The Treasury, 2017.5.9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인프라투자) 호주정부는 도로, 철로, 공항 등 국가중점인프라 건설에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750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비광업 부문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
  - 서부시드니공항 건설에 향후 10년간 총 53억호주달러 투자
  - 국가철도 건설에 향후 10년간 총 100억호주달러 투자
  - 호주동부 도시간 고속철도 건설(Fast Rail Projects) 타당성 조사에 2천호주달러 투자
  - 지역성장펀드에 약 4억 7천호주달러 투자
  -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정부 금융참여 방식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기구 신설(17년 7월)에 향후 4년간 1,700만호주달러 투자 등

[그림 VI-5] 호주 인프라 투자 계획



- (기업)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까지 인하 계획
  - 연매출 1천만달러 호주달러 이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2만호주달러 미만의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즉각적 세금 혜택 제공('18년 6월말까지)
  - 연간 매출 5천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red tape) 철폐 지원
  - 해외로 소득이전을 시도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우회이익세(Google Tax) 부과
  
- (호주인 우선 고용정책) 외국인 근로세 도입, 기술호주펀드(Skilling Australians Fund)로 호주인 기술인력 양성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에게 과세하여 4년간 약 15억호주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기술호주펀드(Skilling Australians Fund)에 투입하여 호주 근로자 훈련 및 기술 개발 지원 계획
    - － 약 30만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젊은 부모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ParentsNext 프로그램<sup>93)</sup>에 약 2억 6,300만호주달러 지출

## 나. 복지

- (주택)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 및 첫 주택 구입자와 주택 다운사이징 희망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으로 주택 구매력 증진
  - 도심 내 주거지 개발을 위해 10억호주달러 펀드 지원
  -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퇴직연금 일부를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65세 이상 노령층 대상으로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다운사이징 희망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30만호주달러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 가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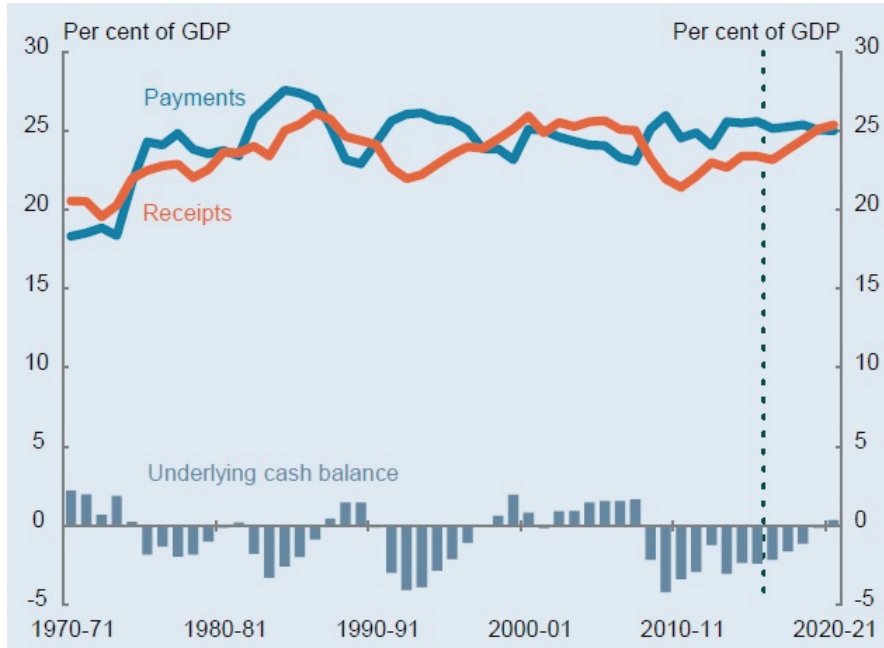
93) 해당되는 10개 주에 거주하며 6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목표 설정, 인터뷰 및 이력서 작성 등 취업 노하우 지원

- (보건) 의약품 가격인하, 공립병원 지원 등으로 의료·복지혜택 확대
  - 의약품보조혜택(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을 통해 보다 저렴한 의료혜택 제공
  - 의료개발을 위한 연구에 659백만호주달러의 재정 지원, 소아암 연구에 580만호주달러 지원
  - 메디케어(호주 국민의료보험) 부담금을 현행 2%에서 2.5%로 인상하여 국립장애인보험 제도(NDIS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재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의료복지 혜택 제공
  - 공립병원에 28억호주달러 지원 등

#### 다. 재정건전화

- (균형재정) FY2017-18 예산안은 FY2020-21 균형재정 및 중기적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며, 정부지출은 FY2020-21에 GDP 대비 25% 규모로 감소하여 30년 평균수준에 가까워질 전망
  - 작년과 동일하게 지출을 제한하여 실질증가율이 연평균 1.9%를 넘지 않도록 지출을 통제
  - 재정적자가 매년 감소하여 예산수지는 FY2017-18년에 294억호주달러 적자(GDP 대비-1.4%)에서 FY2020-21년에 74억 호주달러 흑자(GDP 대비 0.4%)로 개선될 전망
  - 향후 5년간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2.5% 감소, 대학 등록금 7.5% 인상 등 고등교육 개혁, 가족세제혜택(FTB) 지급률 동결, 의약품 가격 인하로 건강보험지출 절감, 구직자 지원조건 강화, 가족세제혜택 파트 A 기준소득 동결, 국방부 효율화 등을 통해 총 98억 38백만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

[그림 VI-6] GDP 대비 지출 및 수입 추이



출처: *Budget Paper Overview 2017-18*, The Treasury, 2017,5,9.

- (금융기관)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은행세(Major bank levy) 도입으로 추가 재정 확보 계획
  - 호주 5대 은행에 연 0.06%의 은행세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62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금융기관들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 금융 경영 책임제(Banking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자 처벌

〈표 VI-9〉 주요 절감 조치(Major saving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Total
	\$m	\$m	\$m	\$m	\$m	\$m
Higher Education Reform – a more sustainable higher education sector	30.7	321.7	764.0	1,153.9	1,485.9	3,756.1
Funding the Jobs for Families Package	-0.4	241.0	572.2	572.2	570.7	1,955.6
Improving Access to Medicines – cheaper medicines	0.0	24.7	364.5	427.1	476.0	1,292.2
Better Targeting of Assistance to Support JobSeekers	-4.1	4.0	185.0	215.9	231.3	632.0
Consistent Income Treatment for Families Receiving Family Tax Benefit Part A	-0.3	-7.1	122.9	147.5	152.3	415.4
Department of Defence – efficiencies	0.0	69.8	72.3	76.3	85.7	304.1
Maintaining the Leve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0.0	0.0	0.0	100.3	203.0	303.3
Family Day Care – further improving integrity	58.2	193.2	0.0	0.0	0.0	251.5
Better Alignment of Student Payments	-1.4	20.0	51.6	54.0	57.0	181.2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Improved Health Care Arrangements	2.5	25.7	36.8	47.9	57.2	171.0
Liquid Assets Waiting Period – increasing self-reliance	0.0	-0.3	32.5	51.0	55.3	138.5
Jobs for Families Package – upper income threshold	0.0	0.0	32.9	39.7	46.8	119.3
Enhanced Residency Requirements for Pensioners	..	-3.5	13.7	42.6	66.3	119.1
Guaranteeing Medicare – Medicare Benefits Schedule – improved compliance	..	-7.6	20.1	44.2	47.0	103.8
Aligning the 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and Education Entry Payment	-0.1	4.7	29.3	30.0	30.8	94.7
<b>Total</b>	<b>85.1</b>	<b>887.3</b>	<b>2,297.7</b>	<b>3,002.4</b>	<b>3,565.2</b>	<b>9,837.7</b>

출처: *Budget Paper Overview 2017-18*, The Treasury, 2017.5.9.



정책분석 18-02

## 주요국 예산안 2018

---

발 행 2018년 3월 30일  
발 행 인 김 정 훈 (원장 직무대행)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044)414-2114(代)  
홈 페이지 [www.kjpf.re.kr](http://www.kj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천 세